

제343회 국회
(임시회)

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

제 2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16년6월27일(월)

장 소 환경노동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소위원회 구성의 건
2. 업무보고
 - 가. 환경부
 - 나. 기상청
 - 다. 한국환경공단
 - 라. 국립공원관리공단
 - 마.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바. 국립생태원
 - 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 아.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 자. 한국상하수도협회
 - 차. 한국기상산업진흥원
 - 카. APEC기후센터
 - 타. 한국형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상정된 안건

1. 소위원회 구성의 건 2
2. 업무보고 2
 - 가. 환경부
 - 나. 기상청
 - 다. 한국환경공단
 - 라. 국립공원관리공단
 - 마.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바. 국립생태원
 - 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 아.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 자. 한국상하수도협회
 - 차. 한국기상산업진흥원
 - 카. APEC기후센터
 - 타. 한국형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10시01분 개의)

○위원장 **홍영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3회 국회(임시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전 회의에서는 먼저 소위원회 구성을 의결하고, 환경부와 기상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질의가 마무리되지 못하였을 경우 오후에 계속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부와 기상청에 대한 질의가 완료되면 이어서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이 협소하여 업무보고를 분리하여 실시하게 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을 통해 녹화방송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지난번 첫 번째 회의에서 위원님들의 인사말씀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다른 중요한 일정이 있어서 참석하지 못하신 서형수 위원님의 인사말씀을 간단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형수 위원 더불어민주당 경남 양산을 서형수입니다.

첫 모임에 원전 기자회견 때문에 부득이 참석 못 했습니다.

열심히 배우고 같이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홍영표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소위원회 구성의 건

(10시03분)

○위원장 홍영표 의사일정 제1항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간사 위원들과 합의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법 제57조에 따라 환경소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를 두기로 하였으며, 환경 및 고용노동소위원회가 법안, 청원 등 해당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였습니다.

환경소위원회는 여야 5인씩 10인으로 구성하고, 소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간사이신 한정에 위원님이 맡기로 하였습니다.

고용노동소위원회는 여야 5인씩 10인으로 구성하고, 소위원장은 새누리당 간사이신 하태경 위원님이 맡기로 하였습니다.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는 8인으로 구성하

고, 소위원장은 국민의당 간사이신 김삼화 위원님이 맡기로 하였습니다.

각 소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 명단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소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회 구성 명단은 끝에 실음)

이후 소위원회 위원의 사보임은 상임위원회의 위원 사보임 절차를 준용하여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개선절차가 진행된다는 점을 알려 드립니다.

2. 업무보고

가. 환경부

나. 기상청

다. 한국환경공단

라. 국립공원관리공단

마.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바. 국립생태원

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아.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자. 한국상하수도협회

차. 한국기상산업진흥원

카. APEC기후센터

타. 한국형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10시05분)

○위원장 홍영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환경부와 기상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진행 방식은 환경부와 기상청의 업무보고를 모두 청취한 뒤 2개 기관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위원장님, 업무보고 질의……

○위원장 홍영표 잠깐만요, 제 말씀 끝나고요.

그러면 업무보고를 시작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이십니까?

○이정미 위원 예.

정의당 이정미입니다.

제가 환경노동위원회 업무보고 진행순서지를 받아 봤는데요.

오늘 환경부가 있고, 모레 노동부 업무보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레 노동부 업무보고를 보면 고용노동부장관님께서 오전 업무보고에 참석을 하시고 오후에는 주로 기관보고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첫 번째 업무보고인 만큼 그리고 노동부 관련해서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노동부장관님의 책임 있는 답변들이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전·오후 현안업무보고 때 노동부장관님이 계속 출석을 하시는 것인지, 제가 알기로는 3당 간사 간 협의에서는 오전에 노동부장관님이 계시고 오후에는 기관장님들만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오후 업무보고에도 노동부장관님이 계속 함께 이 자리에 배석하셔서 책임 있는 답변을 진행할 수 있도록 변경해 주실 것을 요구드립니다.

○위원장 홍영표 이정미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사안은 통상적으로는 산하기관 업무보고 때 장관이나 기관에서 배석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필요하다면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섭단체 간사님들께서 그것을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주 위원 위원장님, 저도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홍영표 송옥주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송옥주 위원 고맙습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에서 최저임금 두 자릿수 인상과 관련된 결의안을 제출할까 합니다.

새누리당이나 국민의당, 정의당도 지난 총선 공약 때 이와 관련된 공약을 발표한 것 같은데요. 저희가 결의안을 낼 때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영표 오늘은 환경부 업무보고를 한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진 위원 자료요청 좀 할게요.

○위원장 홍영표 조원진 위원님.

○조원진 위원 지금 영남권 신공항 문제가 있는데요. 지금으로부터 12년 전부터 환경부 산하 연구기관에서 제출한 소음 관련 김해공항 확장 불가능 관련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 자료 다 제출해 주시고요.

ADPi에서 환경부 혹은 환경부 산하 연구기관에 소음 관련 혹은 환경 관련 자료요청을 한 게 있으면 그 자료요청에 대한 내용들도 다 오후 시

간까지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찾아서 가능한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영표 추가적인 의사진행발언은 업무보고 끝나고 질의시간 전에 해 주십시오.

그러면 환경부장관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오늘 배석한 간부를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 윤성규 존경하는 홍영표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처음 개최되는 제20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환경부의 주요 정책과 환경 현안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박근혜정부의 환경부는 고품위 환경복지 서비스의 기반을 조기 확충하여 국민행복 실현에 기여하는 한편 지속발전 가능한 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환경정책과 제도를 과학화·선진화시키는 데 진력해 왔습니다.

그 일환으로 지난 3년간 역점 추진해 온 주요 성과를 간추려 말씀드리면, 화학물질 안전관리제도를 선진화한 화학물질등록평가법과 화학물질관리법의 제·개정 또 40년 만에 사업장 환경관리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바꾸게 될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법의 제정, 오염원인자 배상원칙을 정립하여 환경정의를 실현할 환경오염피해구제법의 제정, 자원 다소비국이면서도 부존자원 빈국인 한계 극복을 견인할 자원순환기본법 제정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이와 같은 새로운 환경정책제도가 연착륙해 기대했던 효과가 조기에 가시화되도록 하는 데 모든 역량을 결집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생활주변의 고질적 환경난제를 해결하는 데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생활악취와 지반침하를 유발하는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집중 지원하는 한편, 값비싼 수돗물 누수가 많은 군단위 지역의 노후상수도 설비 정비에 국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상수원을 위협하는 녹조현상을 원천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과학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녹조 대발생 메커니즘의 과학적 규명도 시도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자동차를 금년 말 24만 대까지 늘리고 국가 물산업 클러스터를

8월에 착공하는 등 환경신산업 육성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가축분뇨처리장 등 혐오시설로 주민이 떠나던 마을에서 되돌아오는 살기 좋은 마을로 탈바꿈시킨 홍천 친환경에너지타운 성공사례를 새로운 농촌개발 모델로 발전시켜 국내외로 확산시키고자 부심하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환경은 환경대로 더 잘 지키면서 경제는 경제대로 활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환경 정책·제도를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이와 같은 노력과 성취에도 불구하고 가슴기살균제 같은 화학물질 위해, 미세먼지 오염 등이 당면한 해결 과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많은 살상자를 발생시킨 가슴기살균제 피해 사고는 당초 향균용 카펫 첨가제나 고무, 목재, 직물 등의 향균제 용도로 출시되어 일반국민이 호흡할 가능성이 거의 없었던 화학물질들을 아무런 안전성 확인조사 없이 소비자가 호흡하는 가슴기살균제용으로 전용하면서 발생하였습니다.

가슴기살균제 피해자들의 치료와 생활안정을 위해 정부지원책을 확충해 나가는 한편으로 제2·제3의 가슴기살균제 피해 같은 사고가 더는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살생물제 안전대책 마련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올봄에는 전례 없이 빈발한 황사와 국외 영향 등이 겹치면서 미세먼지 오염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현안으로 대두되었습니다.

환경부는 2003년부터 수도권 대기개선훈합대책을 추진하여 미세먼지 오염을 상당 부분 줄였지만 아직도 선진국 주요 도시의 2배 수준에 머물고 있는 상황입니다.

환경안전을 담당하는 부처의 수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국민적 불안을 조기에 해소해 드릴 수 있도록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먼저 가슴기살균제 피해 조사·판정기관을 대폭 확대하여 피해신청자의 대기기간을 대폭 단축시키겠습니다.

가슴기살균제 피해자로 인정된 분들에게는 2014년 이래 지원해 오던 의료비·장례비 외에도 금년부터는 생활자금과 간병비를 추가로 지원토록 하여 어려움을 덜어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스프레이형 방향제·탈취제 등 위해 우려제품 15종에 함유된 살생물질을 연말까지 전수 조사하고 이어서 안전성을 검증해 나가겠습니다.

살생물질을 함유한 제품에 대해서는 그 양과

관계없이 시장에 출시되기 전에 위해성을 평가해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은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미세먼지와 관련해서는 2024년 개선 목표를 3년 앞당겨 2021년에 달성하는 한편 2026년까지는 현재의 파리 수준으로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관계부처 합동 특별대책을 지난 6월 3일 확정 한 바 있습니다. 세부이행계획을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속도감 있게 수립해 차질 없이 실행해 나갈 것입니다.

국민행복의 근간에 환경이 있습니다.

앞으로 국민 눈높이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환경복지의 수준을 높여 나가는 환경부가 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고드리는 환경부의 주요정책과 현안에 대해 위원님께서 주시는 고견은 지체 없이 보완하고 새로운 정책대안은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상세한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참석한 환경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정섭 차관입니다.

기획조정실장, 환경정책실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김영훈 물환경정책국장입니다.

이민호 자연보전국장입니다.

신진수 자원순환국장입니다.

나정균 기후대기정책관입니다.

오종극 상하수도정책관입니다.

박광석 환경정책관입니다.

이호중 환경보건정책관입니다.

주대영 국제협력관입니다.

박천규 대변인입니다.

이경용 감사관입니다.

(간부 인사)

다음은 외청의 장입니다.

고윤화 기상청장입니다.

(청장 인사)

다음으로 소속기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남광희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입니다.

박진원 국립환경과학원장입니다.

백운석 국립생물자원관장입니다.

국립환경인력개발원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김균 화학물질안전원장입니다.

홍정기 한강유역환경청장입니다.

송형근 낙동강유역환경청장입니다.

정복영 금강유역환경청장입니다.

이희철 영산강유역환경청장입니다.

김상훈 수도권대기환경청장입니다.

황계영 원주지방환경청장입니다.

유제철 대구지방환경청장입니다.

조병옥 새만금지방환경청장입니다.

(소속기관장 인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환경부 주요 업무 현황과 환경현안은 물환경정책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부물환경정책국장 김영훈** 물환경정책국장입니다.

환경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주요 환경현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환경부 연혁입니다.

1980년 1월 환경청이 발족하였고, 1990년 1월 환경처로 발족이 되었습니다. 환경부는 1994년 12월에 발족이 되었고, 2008년 2월 기상청이 외청으로 이관되고, 2013년 화학물질안전원·국립생태원이 설립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조직 및 정원입니다.

본부는 2실 3국 7관에 52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외청 및 소속기관은 기상청을 비롯해서 국립환경과학원 등으로 2706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산하기관은 한국환경공단 등 414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페이지 정원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부서별 주요기능, 6페이지·7페이지·8페이지까지는 생략하고, 9페이지 2016년 재정사업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정사업 총괄입니다.

예산은 세출은 환경개선특별회계 등 4개의 특별회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세입은 법정부담금 등 환특 자체세입과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기금은 4대강 수계관리기금, 석면피해구제기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6년 세입총계는 5조 9913억 원이며, 세출은 6조 7297억 원입니다.

하단에 있는 정부예산 중 환경예산 비중은 수년간 정부예산의 2%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을 보

고드립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16년 기금을 제외한 세입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1074억 원이 감액된 4조 9593억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자체세입은 전년 대비 32억 원이 증액한 1조 2167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은 전년 대비 1106억 원이 감액된 3조 7426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2016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0.4% 감액된 5조 6976억 원이며, 부문별로는 친환경차 보급 확대 등 대기부문 등이 증액이 되었으며 상하수도·수질 부문은 SOC 사업 지출효율화로 감액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기금현황입니다.

2016년 기금현황입니다.

수계기금은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물이용부담금을 주요 수입원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6년에는 9845억 원이 지출될 계획입니다.

석면피해구제기금입니다.

석면 노출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서 구성된 기금으로 2016년에는 476억 원의 지출 계획이 잡혀져 있습니다.

13페이지 소관 법률 현황입니다.

62개의 법률을 운영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국민행복을 완성하는 고품위 환경복지를 정책목표로 하여 국민생활이 안전하고 쾌적해지도록 하는 등 3개 과제의 9개 세부과제를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18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 생활이 안전하고 쾌적해지도록 3개 세부과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유해물질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겠습니다.

먼저 미세먼지의 획기적 저감 및 예보정확도 제고를 위해서 독자적인 예보모델 개발에 착수하고 예보정확도를 89%까지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수도권 총량관리 사업장을 3종까지 확대하고 72개의 대형사업장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해서 배출원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자동차의 경우 경유차 실도로조건 배출가스 관리제를 1월에 도입해서 대형에 먼저 운영 추진하겠습니다.

화학물질 안전관리 체계 정착입니다.

등록단계에서는 등록 대상 기존화학물질 510종의 신속한 등록을 추진하기 위해 헬프데스크를 운영하는 등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신규화학물질 등록 지원을 위해서 위해성평가 자료작성 등을 지원하고 동물실험 대체시험자료를 생산·활용하는 지침을 개발·보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발암·만성독성 등 고위험성 유해화학물질은 허가·제한물질로 지정해서 엄격히 제한하겠습니다.

유통단계에서는 불법으로 수입되는 유해화학물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관세청과 협업하여 통관관리를 강화하고, 미등록 유해화학물질 또는 위해우려제품에 대한 불법유통 감시를 위해서 온·오프라인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사용단계에서는 생활화학제품에 함유된 유해물질의 위해성을 평가하여 다림질보조제 등 3종을 위해우려제품으로 추가 지정하고 안전·표시 기준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오염피해 배상 및 책임보험제도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과관계추정·정보청구권 부여 등으로 손배소송 시 피해자의 부담을 대폭 경감하고 또 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배상책임한도도 설정하겠습니다.

또한 사고 우려가 높은 시설은 환경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해서 피해발생 시 최대 300억 원까지 신속히 배상하는 제도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쾌적한 환경 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온하고 상쾌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먼저 서울시·광주시를 대상으로 교통소음 노출지도를 작성하고 타이어 소음표시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해서 6종의 건축자재를 대상으로 사전적합성확인제를 도입하고 공동주택 등 라돈 권고기준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도심 악취를 방지하기 위해 선진국형 쓰레기수거·운반차량을 도입하고 서울 관광명소를 대

상으로 하수도 악취 저감 사업도 착수하겠습니다.

취약계층 환경보건 서비스 확대를 위해서 어린이·어르신 활동공간, 사회취약가구의 실내공기질 등을 무료로 진단하고 환경안심인증도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전국 1000가구 대상 라돈진단서비스를 제공하고 석면 슬레이트 지붕의 철거 지원사업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도심 속 생태휴식공간 확충을 위해서 자연마당과 생태놀이터 등을 각각 20개소, 100개소 확대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환경위험을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항구적 가뭄대책 마련 차원에서 물 확보를 위해 빗물침투·저류능력을 도시에 높이고 하천으로 방류되던 하수처리수를 공업·농업용수로 재이용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 공급 차원에서 수돗물의 누수 차단을 위해 2017년부터 노후 지방상수도 정비·개량사업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물 절약을 위해서 절수설비 설치 의무화 대상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사전예방형 하천녹조 관리입니다.

녹조 우심 하천구간에 녹조 메커니즘에 대한 현장 분석시설을 설치해서 인과관계를 규명·실증해 나가고 수계별로 맞춤형 조류예방대책도 추진하겠습니다.

노후 하수관로 기인 지반 침하를 예방하기 위해 센서기술과 모바일기술을 활용해서 노후 하수관로를 정밀조사하고 하수관로 교체·개보수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환경도 살리고 경제에도 활력이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환경 분야 신산업을 발굴하겠습니다. 먼저 친환경자동차 산업입니다.

렌트카·배달업체 등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해서 전기차 대량 수요처를 발굴하고 민간 충전시장 조성을 위해 전기 충전요금을 적정 수준에서 유료화해 나가겠습니다.

물산업을 위해서 정수·하폐수 처리 분야 핵심원천기술 확보를 지원하고 연구개발·검인증·상용화를 지원하는 물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겠습니다.

생물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바이오산업의 종합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생물자원 산학연 협의체를 통해 유용한 정보를 해당 업체에 맞춤형으로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환경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겠습니다.

먼저 강소 환경기업 육성을 위해 소재·부품·장치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기업 수요자 중심·경쟁형 연구가 될 수 있도록 R&D 시스템을 개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업 지원을 위해서 창업자금과 사업화자금, 융자자금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환경산업 실증연구단지를 조성하여 사업화를 지원하고 해외 수출 전략도 수립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환경시장 진출 촉진을 위해서 한중 미세먼지 저감 공동실증사업의 범위와 협력지역을 확대해 나가고 5년간 3000조 원 규모의 중국 환경 시장에 대한 국내 기업의 진출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개도국 환경산업 발굴·수주 지원을 위해서 환경 개선 마스터플랜 수립 등을 통해 환경프로젝트가 발굴되고 수주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산업과 상생하는 환경관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먼저 선진국형 통합환경관리제도의 시행을 철저히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매체별로 되어 분산·중복된 인허가와 관련 서류를 사업장당 하나로 통합하여 간편한 허가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최적가용기법의 적용하에 사업장 여건과 지역 환경질을 반영한 맞춤형 기준으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매체별로 분산된 지도·점검을 연 1회로 통합하고 기술지원·진단 중심으로 전환해서 실효적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규제의 과학화·선진화를 위해서 과학기술의 진보를 능동적으로 수용해서 환경질 안전을 전제로 입지규제를 유연화해 나가고 폐기물 재활용의 경우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스마트규제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산업계와 릴레이 간담회, 권역별 순회 간담회 등을 개최해서 애로사항을 상시 발굴·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속 가능한 환경모범 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

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국토 환경관리 차원에서 과잉·난개발 차단제도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평가대상계획을 주기적으로 갱신하는 등 전략 환경영향평가를 개편해 나가고 사후환경조사서 검토지침을 마련하고 전문기관을 활용해서 사후 환경조사서를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토·환경계획의 연동제 시행을 위한 공동 훈령을 제정하고 국토환경성평가지도의 정밀도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생태계 보호지역 확대를 위해서 보호지역 전반의 관리 실태를 세계자연보전연맹 가이드라인에 따라 평가하여 개선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정이 누락된 수변구역·상수원보호구역 등 436개소를 세계보호지역 DB에 등재하는 등 관리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유 생태종 건강성을 제고하기 위해 위해우려종을 추가로 지정하는 등 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순환자원 부국으로 전환시켜 나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원순환기본법이 금년 5월 공포되어서 시행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용자원의 매립 제로화를 건인하기 위해 폐기물처분부담금의 부과대상·요율을 구체화하고 순환자원 인정기준을 마련, 시범 적용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폐기물 다량 배출 사업장에 자원순환 성과관리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시범사업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친환경에너지타운의 국내외 확산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완공된 홍천 에너지타운을 관광명소로 발전시키고 수익사업을 발굴하여 살기 좋은 농촌 개발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단계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2018년까지 총 11개소가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빈 병 재사용률 제고입니다. 빈 병 보증금을 22년 만에 선진국 수준으로 현실화하고 주류업계의 제조원가 절감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빈 병 회수를 거부하는 소매점을 대상으로 신고보상제를 시행하고 회수 인프라를 확충하는 등 빈 병 반환 편의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후 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

습니다.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내실화를 위해 실제 배출 실적을 인증하여 배출권거래제 첫째 할당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2020년까지 수송 분야 km당 97g 달성을 위해 중소형차 온실가스 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가정·상업 분야에 있어서는 개별 가구 대상에서 아파트 단지로 탄소포인트제도를 확대하고 탄소성적표지의 적용 범위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기후변화 적응 역량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수립된 제2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에 따라 부처별, 지자체에 적응대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공공기반시설의 기후 영향을 진단하고 적응대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국제 환경현안 해결에도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후속 협상에 대응하고 녹색기후기금사업도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환경현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사고 대책 등 여덟 가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사고 대응대책입니다.

먼저 사고 발생 경위입니다.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 현황은 1994년 11월 유공이 미국에서 개발된 CMIT/MIT를 희석해서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 개시하였고 유공이 향균 카펫 첨가제 용도로 유해성을 심사받은 물질을 이용하여 주식회사 옥시가 2001년부터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01년부터 10년간 14종의 가습기살균제가 출시되었습니다.

원인 미상 폐질환 원인 규명 및 조사 현황입니다. 2008년 3월 질병관리본부는 서울아산병원으로부터 급성 간질성 폐렴 어린이 환자 아홉 명에 대한 바이러스 확인 검사 요청을 받아서 검사를 했지만 다양한 병원체가 검출되어 원인을 추정하지 못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11년 4월 원인 미상 폐손상 환자의 잇따른 입원에 따라서 서울아산병원이 원인 규명을 요청함에 따라 질병관리본부가 역학조사에 착수를 하였고 2011년 11월 보건복지부는 동물실험 결과 폐섬유화를 발견하고 우선 제품 수거명령을 발동한 바 있습니다. 2012년 2월 가습기살균제가 폐

손상 환자 발생 원인임이 최종 발표되었습니다.

원인 규명 및 정부 조치입니다.

2011년 11월 산업부는 가습기용 세정제로 자율 안전확인 신고된 6개 제품 중 1개 제품에서 PHMG가 검출되자 모두 신고를 취소한 바 있고 11년 11월부터 12년 7월까지 제조사가 제품을 수거한 바 있습니다.

11년 1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종합대책이 수립되어서 가습기살균제의 의약외품으로 지정·고시된 바 있습니다.

2012년 11월 관계차관회의에서 생활화학제품 관리업무를 산업부에서 환경부로 이관하기로 결정한 바 있고 화평법 시행에 따라서 2015년 4월에 이관이 되었습니다.

2015년 1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되어서 화학물질 용도 변경 시 유해성 재심사 규정이 마련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피해자 정부지원 현황입니다.

먼저 피해자 조사 및 지원 논의 경과입니다. 2013년 8월 정부는 피해자에게 의료비와 장례비를 우선 지원하고 가해기업에게 이를 구상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2014년 4월 피해자 재정 및 건강 지원방안이 환경보건위에서 마련되었습니다.

피해 신청 및 조사·판정 현황입니다.

2014년 3월부터 질병관리본부와 환경부는 총 530명의 피해 신청을 접수하여 인과관계가 높은 221명을 1·2단계로 판정하여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2016년 1월부터 3차 피해 신청자 752명에 대해서는 피해 여부를 조사·판정 중에 있고 2016년 4월부터 4차 피해 신청 접수를 개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6년 6월부터는 피해자의 신고를 상시 접수하는 체제로 전환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신속한 피해 조사 및 인정 범위를 확대해 나가기로 하겠습니다. 피해조사·판정기관을 8개 병원으로 확대 추진하고 폐이외질환검토위원회에서 폐이외 건강피해에 대한 진단·판정 기준을 마련하고 개별 판정을 거쳐 추가 지원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피해자 지원 범위 확대입니다.

중증 피해자들에게 현 지원항목 외에 생활자금

을 추가로 지원하고 의료비에 간병비를 포함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정신건강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트라우마 진단·치료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살생물질 함유제품 전수조사 및 안전성 검증입니다. 위해우려제품에 함유된 살생물질을 전수조사하고 비관리제품, 타 법상 관리제품 및 산업용 살생물제품으로 확대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조사와 병행하여 스프레이형 제품이나 국민 건강에 위해 우려가 높은 제품부터 위해성을 평가하여 위해한 경우 즉시 공개하고 수거하는 등의 조치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살생물제 안전관리제도도 도입 추진하겠습니다. 일정 기간 살생물질 함유제품의 제조·수입자에게 물질명, 제품명, 함량 등을 신고토록 하고 또 양에 관계없이 모든 살생물제에 대하여 위해성 자료를 첨부하여 등록하도록 의무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위해성을 평가하여 시장 출시된 제품의 제조·수입을 허가하는 제도도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35페이지 참고1은 화학제품 및 화학물질 관리제도 연혁입니다. 참고2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현황 및 조사·판정 현황이고 37페이지 살생물제의 관리 해외 사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미세먼지 현황 및 특별대책입니다. 미세먼지 현황 및 원인 분석입니다. 우리나라의 미세먼지는 2012년을 저점으로 오염도가 정체 추세에 있습니다. PM₁₀의 경우에 지난 10년간 점차 개선되었습니다만 아직 WHO 기준의 2배 정도 나쁜 상태에 있습니다.

PM_{2.5}의 경우에는 2015년 환경기준으로 설정된 바 있고 현재 전국이나 서울의 경우 WHO 기준보다 나쁜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체감오염도의 경우에 최근에 황사가 빈발하였고 중국 동부 공업지역의 미세먼지 유입 등으로 가시거리가 감소하는 등 체감오염도가 악화된 바 있습니다.

미세먼지 발생원별 기여도 분석 결과입니다.

국내외의 경우 미세먼지는 국외 영향과 국내 배출로 대별될 수 있는데 국외 영향이 30~5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기상 여건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국내의 경우 수도권은 경유차, 건설기

계·선박 등의 순위고 전국의 경우에는 사업장, 건설기계·선박 등의 순으로 아래 표와 같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간의 추진 성과와 미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미세먼지 배출원 관리 부분에 있어서는 제1차 수도권대기환경개선대책의 일부 목표를 달성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만 인접국의 영향이 증가한다든지 2차 생성 먼지의 원인인 전구물질에 대한 종합적 관리가 부족하고 경유차 급증과 함께 인증기준과 실제 배출 간 격차에 의한 증가분이 고려되지 못한 한계가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주변국 협력 분야에 있어서도 상시 채널을 구축하고 협력사업을 가시화하는 등 성과가 있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성과가 가시화되는 데까지는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미세먼지 예·경보제의 전국 시행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본 예보제를 도입한 성과가 있었습니다만 고농도시 예보 정확도가 국민의 기대에 비해 미흡하고 미세먼지 예·경보와 황사특보가 분리 운영되어 국민 혼란을 초래하는 한계가 있었음을 보고드리고 현 경보제가 고농도 발생을 전파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 적극적인 조치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번에 수립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내 배출원의 집중 감축 분야가 되겠습니다. 수송 부문에 있어서는 미세먼지 다량 배출 경유차를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작차 배출가스 인증기준을 실도로 인증기준으로 전환하고 운행 경유차의 배기가스 저감조치를 강화해서 결함시정명령 대상 경유차 소유자의 이행 의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후 경유차의 저공해 사업을 확대하고 모든 노선 경유버스를 친환경버스로 단계적으로 대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에너지상대가격에 대한 조정검토도 바로 착수해 가겠습니다.

친환경 그린카의 보급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까지 신차 판매의 30%를 친환경차로 대체해 나가고 2020년까지 주유소의 25% 수준으로 충전 인프라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대기오염 심각도에 따른 자동차 운행제한제도 도입 추진하겠습니다. 수도권 3개 시도와 협의를 통해서 노후 경유차의 수도권 운행제한제도를 추진하고 전국의 시도와 협의하여 고농도 미세먼지 시에 비상저감조치도 시행해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제작차의 실운행조건에 NOx 기준을 도입하는 등 건설기계 등 비도로 이동오염원에 대한 배출 저감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발전·산업 부문입니다.

발전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노후 석탄발전소 10기의 친환경 처리를 추진하고 신규 석탄발전소에 영홍화력 수준의 배출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장 미세먼지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수도권 대기총량제 사업장을 확대하고 비수도권 다량 배출 사업장의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생활 부문입니다.

생활 주변 미세먼지 관리를 위해서 도로먼지 청소차를 보급하고 건설공사장의 법적 관리 대상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폐기물 불법소각도 근절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미세먼지와 CO₂를 함께 줄이는 신산업을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에너지 도시 구축산업을 육성하고 환경산업과 상생하는 에너지산업을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변국과의 환경 협력입니다.

한중일 환경장관회의 등을 활용하여 주변국과의 미세먼지 저감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한중 실증사업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내 신산업을 해외 환경시장 진출도 지원해 나가고 글로벌 환경 R&D 강화와 에너지신산업의 중남미 등의 해외 진출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미세먼지 예·경보제의 혁신입니다.

미세먼지 예보 정확도를 제고하기 위해 PM_{2.5} 측정망을 PM₁₀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예보모델의 다양화 및 고도화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미세먼지 원인 규명과 기술개발 또한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일정입니다.

2017년 1월까지 관계부처 합동 미세먼지 추진 TF를 구성·운영해 나가고 대국민 소통과 홍보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며 이행실적의 주기적인 점검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 45페이지는 관련 참고, 46페이지, 47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8페이지,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불법조작 적발 및 조치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사 경위입니다.

폭스바겐의 경우 2015년 9월 3일 폭스바겐사는 미 환경청 조사 과정에서 자사 차량에 임의설정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시인한 바가 있습니다. 15년 9월 22일 폭스바겐사가 전 세계 1100만 대에 조작 소프트웨어를 적용했음을 시인한 바가 있고 환경부에서는 15년 11월 배출가스재순환장치 임의설정을 확인해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한국 닛산의 경우에는 국내외 제작·수입 경유차에 대한 추가조사 실시 과정에서 2016년 5월 닛산 캐시카이 모델에서 배출가스재순환장치의 임의설정을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조사 결과입니다.

폭스바겐의 경우입니다. 조사 방법은 전자제어장치에서 출력되는 신호를 소프트웨어로 분석해서 배출가스재순환장치의 가동률을 조사하는 방식입니다. 조사 결과로는 전자제어장치가 도로주행 시에 인증모드가 아님을 인지해서 배출가스재순환장치의 성능을 저하시킴에 따라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크게 증가하는 임의설정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한국 닛산의 경우에 엔진룸의 흡기온도가 35℃ 이상으로 상승하게 되면 배출가스재순환장치 작동이 중단이 돼서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크게 증가하는 임의설정을 확인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조치 상황입니다.

폭스바겐의 경우에 임의설정을 적발한 이후 폭스바겐 티구안 등 EURO5 차량 판매 정지를 통보한 바가 있고 인증 취소는 2015년 11월 30일 인증을 취소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과징금을 141억 원 부과를 했고 16년 1월 19일과 27일에는 형사고발을 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2016년 6월 7일까지 폭스바겐사에서 임의설정을 시인하지 않음에 따라 리콜계획서를 반려

해서, 반려하는 중에 있습니다. 리콜계획서 보완 요구 사항은 임의설정을 인정하는 부분하고 외국 정부에 제출한 리콜계획서 원본을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국 닛산의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사전예고하고 청문을 한 바가 있으며 검토 결과에 따라서 행정처분, 형사고발이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페이지 참고1은 조사 방법이 되겠습니다. 참고2는 국내외 폭스바겐 경유차 리콜 진행 상황이고 참고3은 질소산화물 실도로 배출 도입 기준이 되겠습니다.

56페이지,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제도 도입입니다.

추진 배경입니다.

1971년에 도입된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허가 제도가 산업이 고도화하고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여러 가지 한계가 나타났습니다. 기술정보가 부재하고 형식적인 허가검토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부실한 허가가 이루어져 왔고 허가사항을 한 번 허가하면 변경이 불가능한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매체별로 허가를 하다 보니까 동일 시설의 경우에도 최대 10개 인허가가 필요한 경우가 있는 등 업체·기관별로 또한 중복단속으로 기업 부담도 가중되고 실질개선은 또 미흡한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것들을 반영해서 허가제도를 통합·간소화하고 저비용·고효율 최적기술을 도입해서 오염은 최소화하는 통합환경관리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추진 경과입니다.

2015년 12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9월부터 통합법협의를 구성해서 하위법령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기관별로 분산·중복된 최대 10종의 환경허가를 하나로 통합·간소화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20개 업종별로 최적가용기법을 마련해서 보급하고 시설 특성 및 주변 환경 영향을 고려한 맞춤형 배출기준도 설정합니다. 또한 주기적으로 허가 조건 등을 재검토해서 시설의 적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기대 효과입니다.

환경 분야에서는 영국의 사례에서 보듯 오염물질 저감이나 환경사고 예방 등 사업장 환경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고, 어떤 행정비용 절감이나

에너지·용수에도 경제적인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금년 12월까지 하위법령 제정을 추진하고, 16년부터 업종별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등 기술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참고자료1·2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0페이지, 환경오염 피해구제제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 배경입니다.

구미 불산누출사고 등 환경오염사고가 빈발해서 국민의 불안감이 증가하고 있지만 실효적인 구제장치도 미흡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한 환경오염사고의 특성상 인과관계를 증명하기 어렵고 장기간 쟁송으로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또한 사고 발생 이후에 피해배상 비용 지급 능력이 부족한 기업의 경우에는 도산 위험도 있었고 또 가해 책임이 없는 일반 국민의 세금으로 보상해야 되는 문제점들이 있어서 이것들을 반영해서 원인자 배상책임 원칙을 확립하고 신속한 피해구제가 될 수 있도록 법제화하였습니다.

그간 추진 경과입니다.

법률안의 의원 발의를 통해서 2014년 12월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16년 5월 환경책임보험 상품을 확정하고 보험 가입을 독려 중에 있습니다.

주요 법률 내용입니다.

가해기업에 무과실 책임을 부과하고 배상책임 한도를 설정하겠습니다. 또한 환경오염시설이 피해 원인으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 인과관계를 추정하고 정보청구권도 부여합니다. 그리고 또한 환경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원인자 불명이나 부존재, 무자력 피해의 경우에는 국가가 직접 구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대 효과는 피해자 입증 부담이 완화되었고 실효적인 피해보상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점입니다.

환경책임보험이 5월 말에 출시되어서 가입기간이 시행일까지는 1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아서 시간이 좀 부족하고 가입대상이 영세업체가 많아서, 많은 경우여서 미가입 사태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대응 방안으로는 6월부터 환경책임보험 가입을

더 독려하고 홍보해 나가도록 하고 주요 일간지나 포털 광고 등을 활용해서 추진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참고1·2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입니다.

자원순환기본법 제정 후속조치 관련입니다.

추진 배경입니다.

매립되는 폐기물 중 약 56%가 자원 회수가 가능함에도 단순 매립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님비현상 등으로 매립지 추가 건설은 실현이 곤란한 환경에 있었습니다. 이에 한 번 사용된 자원·에너지가 폐기되지 않고 계속 순환되는 자원순환사회로 전환을 추진케 되었습니다.

2016년 5월 자원순환기본법이 제정·공포되었습니다.

법률의 주요 내용입니다.

폐기물이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 순환자원으로 인정해서 사업자 부담을 완화하고, 폐기물 다량 배출 사업자를 대상으로 매년 순환이용목표를 설정해서 순환자원의 사용과 재활용을 촉진해 나가는 내용입니다. 또한 폐기물 처리 가격구조에 사회적 비용을 반영해서 재활용이 유리한 가격구조로 개편하기 위해서 처분부담금을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대 효과입니다.

매립이 제로화되고 매립지 수명도 연장되어서 환경오염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17년 상반기까지 합리적인 제도 설계를 추진하고 대국민 홍보와 이해관계자 교육도 실시를 하면서 2017년 말까지 하위법령이 계획대로 제정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노후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 배경입니다.

1970~80년대 대부분 설치된 지방상수도가 급속히 노후화되어서 상수관로는 31%, 정수장은 59%가 20년이 넘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6억 9000만t이 누수가 되고 2만 건 이상의 단수사고가 발생하는 등 국민 불편이 가중돼 왔습니다. 그러나 지자체는 재정 여건이 악화돼서 시설 개선 투자를 엄두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래서 노후상수도의 현대화를 위한 지원 방안을 재정 당국과 10년 이상 협의한 끝에 2017년도부터 국고지원이 될 수 있도록 결정된 바 있습니다.

그간 추진 경과를 생략을 하고, 국고지원 결정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특 포괄보조로 추진을 하고 별도 지출한도를 설정해서 적정사업비를 보장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군지역 사업을 성과평가한 후에 시지역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서 추진토록 하고, 2017년에는 우선 20개 군지역을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선정 절차의 경우에는 환경부가 사전 검토하고 타당성이 인정된 사업만 예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017년도 사업 준비 상황입니다.

사업 시급성과 사업 준비 현황, 지자체의 추진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선정하고 재정 당국과 협의를 통해서 최종 선정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최종 사업지를 6월 말까지 선정을 하고, 2016년 하반기부터는 사업 설계 및 지자체별로 내년에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노후상수도 현황 및 조사 결과를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9페이지, 태백산 국립공원 지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 배경입니다.

태백산은 백두대간 중심부에 위치한 민족의 영산으로 국립공원으로서의 가치가 충분합니다. 강원도가 2015년 4월 국립공원 승격을 재요청함에 따라 2015년 7월 환경부가 공원계획 초안을 마련하면서 지정 절차가 추진되었습니다.

그간의 추진 경과를 보면 국립공원 지정 및 공원계획이 2015년 7월에 마련이 되었고, 지역주민 설명회, 공청회 또한 지자체 의견 수렴,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서 금년 4월 15일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태백산 국립공원의 지정 개요입니다.

70km²가 약간 넘고, 당초에 지정돼 있던 도립공원 면적의 한 3배 정도가 되는 규모가 됩니다. 태백산의 경우에 한강의 발원지가 위치하고 있고 주목군락지라든지 멸종위기종 22종이 서식하는 등 국립공원으로서의 가치가 충분합니다.

지정 의미를 말씀드리면, 국립공원 지정이 생태보전뿐만이 아니라 지역 발전을 이끄는 소중한 자산이라는 인식이 도입된 부분이 큰 의미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또한 백두대간 보전 강화 기반이 마련된 점도 의미가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립공원 관리 방향입니다.

탐방문화를, 정상정복형 탐방문화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서 탐방문화 개선 시범모델로 공원관리를 추진을 하고 또한 정상부 훼손지의 복원 등 생태복원사업을 집중 추진하고 생태관광 인프라가 구축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8월 22일 태백산국립공원 사무소를 개소하고 국립공원 지정고시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영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상청장님 업무보고해 주십시오.

○기상청장 **고윤화** 존경하는 홍영표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20대 국회 개원과 함께 오늘 이 영광된 자리에서 처음으로 위원님들을 모시고 기상청의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기상청은 기상기후의 융합과 가치 확산으로 국민안전과 국민경제 선도라는 비전을 가지고 기상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공공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기후변화에 따른 위험기상 대응 및 기상기후 서비스 강화를 위해 지역별로 분산된 예보기능을 도 단위 거점으로 집중 광역화하여 예보생산단계의 간소화를 통한 신속한 방재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수도권기상청과 대구·전주·청주 기상지청을 신설하는 등 전 국민을 위한 기상서비스 체계를 재정비하였습니다.

또한 기상장비 도입의 공정성과 투명성, 전문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하여 구매총괄과 장비연구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장비 도입 규정·지침을 정비하는 등 관련 제도 개선과 감사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환경노동위원회 홍영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기상청이 기상서비스 품질을 높여 각종 기상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국가기관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상청 전 직원과 함께 지혜를 모아 헌신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금년을 기상현상 중심의 기존 예보에서 벗어나 날씨로 인한 영향까지 고려하는 예보체계인 영향예보 시행의 원년으로 삼고 기반 마련에 주력하겠습니다.

또한 유관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지진, 황사, 가뭄, 집중호우 등으로부터 국민안전 확보와 피해 예방을 위한 재난재해 사전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기상기후자료 개방·공유 확대 및 빅데이터 융합서비스 확산으로 국민생활의 편의와 기상정보 활용 증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상기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 기상산업 육성을 통한 국가경제 부흥과 일자리 창출에도 적극 기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기상청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기상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상청 주요 간부입니다.

남재철 차장입니다.

이우진 기획조정관입니다.

신도식 예보국장입니다.

이미션 관측기반국장입니다.

유희동 기상서비스진흥국장입니다.

지진화산관리관은 현재 공석 중입니다.

다음으로 소속기관장입니다.

조천호 국립기상과학원장입니다.

양진관 수도권기상청장입니다.

임병숙 부산지방기상청장입니다.

권혁신 광주지방기상청장입니다.

육명렬 강원지방기상청장입니다.

임용한 대전지방기상청장입니다.

김세원 제주지방기상청장입니다.

김남옥 국가기상위성센터장입니다.

전준모 기상레이더센터장입니다.

박정규 항공기상청장입니다.

(간부 및 소속기관장 인사)

이어서 2016년 기상청 주요 업무와 현안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6년 주요 업무

추진현황, 주요 현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중 2쪽의 연혁은 생략하고, 3쪽 조직 및 정원 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조직 및 정원 현황입니다.

먼저 본부 조직은 청장, 차장 밑에 4국 2관리관 24과 3센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 소속기관으로 국립기상과학원, 6개 지방청, 항공기상청, 국가기상위성센터, 기상레이더센터, 그리고 산하기관으로 한국기상산업진흥원, APEC 기후센터, 한국형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총 정원은 1326명으로 현원은 1303명입니다.

4쪽과 5쪽의 주요 기능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2016년도 예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2016년 총 세입은 57억 7100만 원, 세출은 4020억 8600만 원입니다.

7쪽입니다.

소관 법령으로는 기상법, 기상관측표준화법, 기상산업진흥법,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정보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8쪽의 2016년 주요 업무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9쪽의 기상정책 추진체계입니다.

기상청은 국민안전과 국가경제를 선도하기 위해 올해의 정책목표를 영향예보로의 전환을 통한 기상재해 리스크 경감으로 정하고 기상현상 예보 체계의 영향예보로의 전환 추진, 위험기상의 체계적 감시·분석 능력 강화, 기상기후정보의 경제적 가치 창출, 기상서비스 선진화를 위한 전문역량 강화 등 7대 추진전략을 중심으로 영향예보 지원체계 구축 및 방재지원 강화, 가뭄 대응 수문기상서비스 개선, 기상기후 빅데이터 융합서비스 확산, 기상산업 발전 생태계 조성 등 15개 과제를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첫째, 기상현상 예보체계의 영향예보로의 전환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지난달에는 2020년 정식 서비스를 목표로 하는 영향예보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올해 8월부터 제주지역 방재 유관 기관을 대상으로 태풍 영향예보를 시범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재해영향 DB, 수치모델 기반의 위험기상 발생 예측기술 등 영향예보 관련 인프라와 관련 기술을 개발하고 방재기상정보시스템의 위험기상 관련 제공 자료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수문기상서비스와 해양기상서비스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상학적 가뭄 정보를 생산하여 제공하고 수문기상협력센터를 통해 물 관리 유관 기관의 수자원 관리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육상예보 수준의 상세 해상예보를 제공하는 등 기존의 해양기상서비스를 개선하고자 하며 이는 현안보고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민생활 편의와 기상정보 활용 증대를 위해 기상자료 제공을 확대하고 생활기상정보 문자서비스와 콜센터 상담서비스를 수요자 요구에 맞춰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둘째, 위험기상의 감시와 분석 능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측공백 해소와 관측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기상관측망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기상레이더 교체 및 소형 레이더 관측망 구축, 천리안 후속 위성 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작년 말 슈퍼컴퓨터 4호기 도입이 완료됨에 따라 올해에는 고해상도 수치모델 자료를 생산하여 활용할 계획이며 독자 기술 기반의 한국형 수치예보모델 개발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셋째, 기상기후정보의 경제적 활용가치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손쉽게 기상기후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작년에 구축한 기상기후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민간에 전면 개방하고 빅데이터 융합서비스를 개발하여 민간에 이전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상기후 대응을 위해 장기에보 정확도를 향상시키고 이상 고온과 저온 현상에 대한 조기탐지 및 경보 서비스를 구축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넷째, 기상서비스 선진화를 위해 전문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보실무와 실습 중심의 예보관 전문교육과정

을 운영하고 전문예보관 훈련체계를 역량 수준별 맞춤형 체계로 개편하겠습니다.

기상기후 전문 분야 인력 양성과 세계기상기구 지역훈련센터 운영 등 국내외 기상교육 확대를 위해 기상기후인재개발원 설립을 추진하고 전담 강사 확보, 객원교수 충원 등 교수 요원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15쪽입니다.

다섯째로 지진·지진해일·화산 감시 및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금년 10월까지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진관측소를 추가하여 지진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지진정보알리미 서비스의 사용자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국내 유관기관 및 중국, 일본 등 해외 기관과의 지진 업무 협력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6쪽입니다.

여섯째, 민간기상서비스 활성화를 통한 기상산업 육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제도 개선을 위해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며 1월부터는 기상기업을 대상으로 시제품 개발, 창업, 마케팅 등 단계별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공동 현지 사업화 추진 등 기상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개도국 ODA 사업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마지막으로 기후변화 대응 및 글로벌 파트너십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상세 기후변화 전망 자료를 제공하고, 고해상도 국가표준 기후변화 시나리오의 생산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태평양 도서국 및 APEC 역내 개도국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기술개발 및 역량 배양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주요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 첫 번째 현안인 해양기상 서비스 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기상서비스에 대한 불평불만이 가장 큰

것이 어민·해운사들에 의한 것입니다. 어민·해운사 등 해양 종사자들은 수십 년 전부터 일본 기상청의 해양기상 정보를 주로 사용하여 왔습니다.

우리나라 기상청의 해양기상 정보 활용률을 높이고자 3단계에 거쳐 해양기상 서비스 개선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우선 1단계로 금년 7월부터 단기 해상예보를 개선하고자 하며, 해상예보 시간 간격을 12시간에서 3시간 간격으로 단축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해상정보 구역을 전 해상으로 확대하고 파주기·파향 등의 해상예보 정보도 추가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3월부터는 해양기상 서비스 개선과 유관기관과의 소통·협력 강화를 위해 해양기상 전문 예보관과 전문 상담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단계로 내년부터는 10일까지의 중기 해상예보를 개선하고 2019년 이후에는 해상특보구역을 세분화하여 작년 기준 50%인 우리나라 기상청의 해양정보 수신율을 내년 이후에는 80% 이상으로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21쪽, 두 번째 현안입니다.

차세대도시농림사업단 개편 추진과 관련된 것입니다.

도시·농림 맞춤형 고해상도 기상서비스 개발과 정보 제공을 위해 2012년도에 차세대도시농림사업단을 설립하였으나 계획 대비 사업비가 부족하여 연구 진행이 미진하였고, 사업단 운영도 부실하다는 지적이 많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를 개선하고자 올해 상반기에 국장급 1인을 포함한 기상청 직원 4인을 파견해서 관련 규정을 재정비하고 사업내용에 대한 심층진단 후 선택과 집중을 통해 사업 계획을 조정하는 등 사업추진 효율화 전략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업단의 연구 성과가 극대화되고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영표 기상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본격적인 위원님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 첫 번째 주질의는 7분으로 하도록 그렇게 간사 간에 합의를 했습니다.

저는 위원장으로서 국회 상임위에서 위원들의 발언은 최대한 보장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상임위가 위원들이 많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준비하신 내용, 꼭 질의하실 사안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질의를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오늘도 이렇게 국회방송으로 녹화방송 될 예정인데 국민들이 지켜보시고 있기 때문에 7분을 꼭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시간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드리지 않고 7분 내에 주질의를 해 주시고 그 이후에는 또 간사 간 합의에 따라서 하고, 최대한 그 이후에 추가질의, 보충질의 다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국회법 제60조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간사 간 합의에 따라 7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원 위원 서울 은평을 강병원 위원입니다.

제가 국회의원에 당선되고 나니까 지역에 계신 여성유권자께서 울먹이는 목소리로 전화를 한번 주셨습니다. 자기 첫 아이가 가습기살균제 때문에 죽었다고, 꼭 국회에 가면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 달라고,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꼭 한번 좀 국회에 와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장관님은 혹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한번 찾아뵙고 사과나 위로를 하신 적 있으십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지금까지 집단으로 두 번 만난 적이 있고요, 또 얼마 전에는 가정으로 한 분을 방문해서 위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강병원 위원 혹시 주무부처 책임장관으로서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 앞에 사과하신 적 있나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저희가 지난 5월 11일 날 환경노동위원회 현안보고 과정에서 질의응답이 있었습니다만 이 가습기살균제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피해자와 가족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하는 한편 저도 목불인견, 정말 그 어린아이들이 산소호흡기를 차고 있거나 이런 장면이 나올 때는 눈을 돌릴 정도로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강병원 위원 감사합니다.

장관께서는 2014년·2016년 신년사를 통해서 환경부 정책을 설명하십니다. ‘뒤따라가는 정책이

아니라 선제형 정책이 필요하다. 환경문제는 일이 벌어지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처해야 된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 말을 정리하면 환경부는 미래를 예측하고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뜻이겠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그렇습니다.

○강병원 위원 장관께서는 2013년 7월 한 언론사와 가진 인터뷰에서 ‘인간의 예지능력에 한계가 있다. 가습기살균제도 그런 범주의 문제다’라고 말했습니다. 한 번 그런 적 있으시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그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조금 부연설명이 필요합니다.

○강병원 위원 제가 설명은 충분히 그 원문을 봐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현존 과학기술 지식으로 알 수 없는 것이라면 독일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면책을 해 준다’ 이런 부연설명까지 함께 하신 원문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CMIT나 MIT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는 독성 실험을 해 가지고 1998년에 이미 농약으로 등록을 했더라고요. 우리 환경부가 조금 더 신경을 썼더라면 농약으로 미국에서 등록한 물질을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쓰는 가습기살균제에 넣는 것을 방지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이런 안타까움이 좀 있습니다.

신년사와 인터뷰에서 말한 내용은 상황에 따라서 참 사용하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사건이 발생하면 예측할 수 없었다라는 말을 쓰시면 될 것 같고, 하지만 장관님 말씀처럼 미래를 모르는 인간이 어떻게 환경 전환을 대비하고 선제적으로 또 대응을 해야 할지, 상당히 어렵습니다. 환경부는 미래를 예측하고 정책을 짜야 하는 부처인데 예지능력을 말씀하시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장관님의 철학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 보겠습니다.

1952년에 런던에서 스모그 사고로 인해서 4일 동안 자그마치 4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영국의 스모그 참사는 1952년 어느 겨울날 갑자기 일어난 일일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자그마치 80년 넘는 기간 동안 영국에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상황입니다. 미리 대처했더라면, 선제적으로 대처했더라면 4000명의 생명을 살릴 수 있었다는 거지요.

우리나라의 미세 문제 역시 어제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그렇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그렇습니다.

○**강병원 위원** 환경부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이미 10년 전부터 우리는 다 피엠텐(Particle Matter 10)을 체크하고 있었고, 상당히 높은 수준의 미세먼지가 있었다는 것 다 알고 계셨을 것 아닙니까? 그 전부터도 알고 계셨겠지요, 측정하시고 계셨고?

하지만 정부는 미세먼지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다가 언론 보도와 국민 불안이 가중되자 그제야 부랴부랴 특단의 대책으로 고등어와 삼겹살을 먼저 얘기하셨습니다. 국민들로부터 비웃음을 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다른 대책 또한 피부에 와 닿지 않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장관께서는 환경부가 지금까지 펼쳐 온 미세먼지 대책이 미래를 대비해서 선제적인 정책을 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나중에 미세먼지로 많은 국민들이 혹시라도 목숨을 잃게 된다면 그때도 장관은 인간으로서 예측할 수 없었던 일이라고 얘기하실 건가요? 말씀 한번 듣고 싶습니다.

○**환경부장관 윤성규** 미세먼지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나름 선제적으로 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업무보고에도 있습니다만 2000년대 초보다는 지금 피엠텐(Particle Matter 10)이 한 40% 정도 줄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WHO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의 두 배 넘게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다 강력한 대책을 추진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강병원 위원** 좋은 말씀이시고요.

아마 미세먼지 대책으로 가장 중요하게 꼽으신 게 경유차와 화력발전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연비가 좋아 친환경적이라는 이유로 클린디젤 정책을 강력하게 홍보했었지요? 구체적으로 보면 2013년 7월 기재부를 통해서도 했었고요, 또 택시산업 종합발전대책도 발표하면서 경유택시 보급에 앞장섰습니다.

뭘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3년 뒤 오늘 정부는 경유차를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지목했습니다. 10년 뒤도 아니고 3년 만에 정책이 바뀐 것이지요. 미래를 예측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가습기살균제 문제 역시 미세먼지와 똑같습니다. 옥시가 처음 가습기살균제 시장에 진입한 것

은 2001년입니다. 이후 원인미상의 폐질환 환자들이 발생했고, 10년이 지나서야 정부가 아닌 서울아산병원에서 원인불명 폐질환 역학조사 요청에 따라 진상이 밝혀진 겁니다. 아산병원 요청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아직도 죽음의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하고 있었을지 모르는 것 아닌가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정책은 이제 그만하고 솔직한 자기반성에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선제적이고 예측가능한 정책들을 환경부 스스로 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아무런 반성이 없는 이런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장관께서는 ‘제가 환자들을 왜 만나느냐? 미세먼지, 건강한 사람은 괜찮다’는 국민 정서에 반하는 이야기를 너무 쉽게 하고 있습니다. 국민과 피해자들이 바라는 것은 진심어린 사과와 제대로 된 재발방지 대책입니다.

○**위원장 홍영표** 환경부장관님, 강병원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환경부장관 윤성규** 우선 인간의 예지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화학물질이 새롭게 태어난 것, 예를 들면 ‘신규 화학물질—새로 합성된 물질—은 화학물질만 보면 이게 어떤 효용성이 있을지, 그 용도에 쓰일 때 어떤 부작용이 있을지를 화학물질만 보고 알기는 쉽지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가습기살균제가 그런 것에 해당되기 때문에 면책이다’ 이런 얘기는 전혀 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을 해 주면서 가습기살균제 업체를 상대로 구상 소송을 걸고 있고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또 말씀하신 옥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11년에 아산병원이 비로소 역학조사를 포함한 조사를 요청하게 되는데 2006년도, 2008년도 이때만 해도 우리나라 최고 의료기술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의료진이 ‘이것 바이러스성 아니냐’ 이렇게 계속 의심을 해 오고 그 부분을 조사해 왔는데 워낙 많은 바이러스가 검출이 되다 보니까 특징을 못해 가지고 규명 실패를 합니다. 그래서 2011년 이전까지는 이게 화학물질로 인한 것이라라고 우리 국내 의료진은 어느 분도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뒤늦게 역학조사를 하면서 피해자들의 공통점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하나가 가습기를 쓰게 됐고 또 가습기를 쓰면서 살균제를 쓴 것을 이렇게 공통점으로 찾아내 가지고

비로소 그때부터 찾아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그 이전부터 이런 것을 찾아내는 계기가 있었어야 되는데 의료계조차 사실은 그 부분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라서 뒤늦게 발견이 된 것입니다.

○위원장 **홍영표** 강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의 문진국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문진국 위원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문진국입니다.

국민의 생활에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고 환경과 기상예보 등을 위해 노력하시는 환경부장관님, 기상청장님 이하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국민의 노고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부락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환경부장관님에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먼저 다시 저도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가습기살균제에 대해서 질의를 할 테니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선 1990년에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서 유해성 심사를 했습니다. 문제는 심사 이후에 실제로 쓰인 곳, 용도변경 시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없었습니다. 중요한 문제는 절차를 만들지도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장관님, 법적 미비점이 아닐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이 부분은 우리보다 훨씬 선진국인 유럽연합도 1998년까지는 이런 재심사 제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뒤늦게 2013년에 화평법을 제정하면서 그 안에 주요한 용도가 바뀔 때는 유해성을 재심사 받도록 이렇게 제도가 처음으로 들어갔는데 보다 빨리 이런 제도가 도입이 됐으면 가습기살균제 같은 피해도 최소화시키거나 막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문진국 위원 알겠습니다. 짧게 좀 얘기해 주시고요.

그러면 PHMG·PGH 유해성 심사 모두 했지만 유독물 지정은 안 했습니다. 유독물 지정 기준에 충족하지 못한 부분이 무엇이고, 또한 그 당시에 미국에서, 유럽에서 어떻게 관리를 했는지 좀 설명을 짧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부장관 **윤성규** 두 물질 모두 미국이나 유럽에 등록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미국의 경우에 농약법에 등록된 바가 있는데 농약법은 또 우

리나라에서는 농식품부 소관이라서 저희가 그것까지 체크를 하기에는 좀 영역이 다른 부분이 있었고요, 유럽의 경우에도 두 물질은 예를 들면 고분자 물질인데, 둘 다 등록의 의무가 없었습니다.

○문진국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005년에 가정용 바이오사이드(Biocide) 제품의 관리방안 연구용역을 외부에 의뢰해 최종 보고서를 수령했습니다. 최종보고서 결론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 보고서에 관계해서, 지금 환경부는 유해성 심사를 받은 물질이거나 용도변경 시 재심사 규정과 생활화학제품 관리규정이 없어서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외부 용역을 했더니 문제가 있다라는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규정에 없다는 이유로 무시해 버렸습니다. 그렇게 하셔도 되는 건지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환경부장관 **윤성규** 이때 보고서에 문제가 있다고 나왔는데 신규물질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신규물질은 유해성 심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PHMG는 이미 그 이전에 향균용 카펫 첨가제로 심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신규물질이 아니고 기존물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가 부정확한 면이 있었고요. 다만 기준 초과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소관 기관인 산업부 산하의 한국기술표준원에다 내용을 통보한 적이 있습니다.

○문진국 위원 하여튼 지금 장관님이 답변하신 것을 보면 이게 국민의 세금으로……

정말 환경부도 유능한 분들이 많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용역까지 쫓 가면서 했다면 그 의문점이 있었다면 더 빨리 알았지 않았나 그런 아쉬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현 시점에서 시급한 것이, 아까도 위원님이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속한 피해조사와 피해자 인정을 받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현재 약 3000여 명 피해조사와 판정을 해야 하는데 전국의 8개 병원에서 모두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그런데 지방에서 세 곳밖에 없어요. 안일하게 생각할 일이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보건복지부와 논의 좀 해서 전국적으로 피해조사를 신속하게 할 수 있는지, 같이 의논해서. 장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사실 이 병원들이 참여하는 데 상당히 꺼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혼자 하게 되면 대부분 소송 가서 재판에서 상대방하고 다투야 되기 때문에 의사들이 재판장까지 나가는 걸 꺼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설득설득해 가지고 지금 이해시키고 참여시켜 나가고 있는데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진국 위원** 될 수 있으면 이게 제일 시급한 것으로 장관님이 생각하셔서 좀 조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는 미세먼지와 화력발전소에 대해서, LNG 발전소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 4월에 감사원이 발표한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사업 추진실태’로 인해 미세먼지가 심각하게 대두되었지요? 이로 인해 충청도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뿐 아니라 전 국민이 발전소가 미세먼지의 주범이라는 인식을 강하게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장관님이 감사원이 감사하기 전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미세먼지의 심각성과 수도권까지 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알고 계셨습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저희들도 그것은 짐작을 다 하고 있었어요. 감사원이 지적한 것은 ‘충남이 수도권에도 영향을 미치니 수도권 대책의 범위에 집어넣어라’ 하는 게 주 지적사항이었습니다.

○**문진국 위원** 그러면 지난 6월에 정부에서 발표한 미세먼지 대책 중에서, 신규 발전소 9기에 대한 배출기준을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에 대한 효과와 오염물질의 저감설비 투자계획은 마련되어 있는지, 산업부하고 어느 정도 논의가 되어 있는지 답변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 윤성규** 그 부분은 신규는 신규대로, 또 노후 발전소 10기 또 충남 지역에 있는 26개 화력발전소 이렇게 각각에 대해서 대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질소산화물이든가 황산화물 이런 부분은 상당히 많이 줄어든 것으로, 또 미세먼지의 경우에는 한 5% 내외로 줄어드는 것으로, 이렇게 총량으로 줄어드는 목표를 저희들이 추구하고 있습니다.

○**문진국 위원** 제가 짧게 한마디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결론을.

지금 사실 석탄화력발전소 53개로 총 발전을

돌리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 그 발전량을 보면 2594만 5000kW를 돌리는데 지금 LNG는 22개밖에 가동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 가동을 보면 2725만 5532kW가 발전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LNG의 발전이 발전단가는 높겠지만 발전효율과 대기오염물질에서는 월등히 앞선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거든요. 현재의 화력발전은 줄이고 46%밖에 되지 않는 LNG 발전소 이용률을 90%로 높인다면 일석이조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관님께서 정말 미세먼지 이런 부분을 여러 가지 생각하신다면, 전기요금이 오르겠지만 이런 것을 잘 해서 가동을 좀 바꿨으면 어떤가 이런 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특별대책 수립 과정에서도 관련 부처하고 그런 부분도 아주 깊숙하게 논의가 됐습니다. 그러나 2011년대에 왔던 블랙아웃이 있었지 않습니까? 소위 피크 수요라고 하는데 피크 첨두 수요를 우리가 공급할 수 있는 발전량은 늘 갖추고 있어야만 되기 때문에 20기 화력발전소 신설하는 부분도 이번에 숫자는 근본적으로 손을 안 댔습니다만 내년에 예상되는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하는 과정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이렇게 대책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문진국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영표** 문진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면서 7분이 지나면 마이크가 나가기 때문에 국민들은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민의당 김삼화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삼화 위원** 국민의당 김삼화 위원입니다.

앞에 두 위원님께서도 가습기살균제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었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20대 국회에 와서 가장 먼저 만나 본 분들이 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가족들이었습니다. 장관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의 가장 큰 고통이 뭔지 알고 계십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가장 큰 고통요?

○**김삼화 위원** 예.

○**환경부장관 윤성규** 어련에 같으면 부모까지

어린애 치료, 보살피는 데 얼마여야 되고 그래서 생업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또 성인의 경우에는 생활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걸 겪는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김삼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이 얘기하기를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자신들의 잘못으로 가족을 죽음으로 몰았다는 죄책감을 느낀다는 겁니다. 대부분 피해자가 지금 장관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아이와 또 어린 아이, 태아도 있고 임산부, 노약자들입니다. 내 아이한테 깨끗한 환경을 주고 싶다, 또 내 부모님한테 잘 해 주고 싶다는 그런 생각으로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했다가 그 가족들을 죽음으로 내몬 것이다 하는 생각에 힘들어 하고 있는데요.

지금 가족들이 죄책감에 시달리는 것에 대해서 정부가 심리치료를 한다고 하는 것은 저도 아까 보고에서 봤는데요. 특히 가습기살균제 사용 이전과, 그 이후에 망가진 삶을 살고 있는 피해자 가족들의 생활을 국가로서는 전수조사를 해서 그들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일상으로 빨리 돌아가게 하는 것이 국가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이 부분은 저희들이 피해자 신청을 지금 무기한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급을 가려서 저희들이 우선 피해자인지를 판정을 하고 이후에 피해자로 인정되는 경우에 생활비 지원도 해 드리면서 심리치료 등 여러 가지를 할 겁니다.

○**김삼화 위원** 알겠습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유해화학물질에 대해서 부실 관리를 들어서 국가 책임을 묻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실 겁니다. 가습기살균제 원료인 PHMG나 PGH는 정부의 유해성 심사를 거쳐서 1997년 그리고 2003년 관보를 통해서 유해물질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현재 SK케미칼—유공이지요—유공이 PHMG의 제조신고서를 제출할 때 용도가 카펫 제조 첨가 항균제였기 때문에 흡입독성 실험을 요청하지 않았고 카펫 항균제에서 가습기 살균제로 용도를 변경해서 사용할 경우에는 물질이 이미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유해성을 재심사하는 제도가 없었다, 그래서 정부의 책임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적용하던 화학물질 유해성 심사

규정에 따르면 농업용 이외의 살균제가 환경에 직접 노출되어서 사용되는 경우에는 독성검사를 위한 추가 자료를 요청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공무원들이 유공에게 독성검사 자료는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시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그 부분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항균용 카펫 첨가제로 이렇게 출시가 된 겁니다. 그렇다면 그게 어디서 쓰이느냐 하면 카펫 제조공장이나 아니면 카펫 세탁소에서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다 마른 다음에 오면 최종적으로 소비자는 흡입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안 했던 것입니다.

○**김삼화 위원** 그 부분과 관련되어서는 이미 지난 5월 임시국회에서 충분히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PGH의 경우에는 2003년 당시 이 물질을 수입하겠다고 신청한 업체가 정부에 유해성심사 신청서를 제출할 때 스프레이 혹은 에어로졸 형태로 사용하겠다고 이렇게 명시한 것은 알고 계시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정확한 자료는 ‘배출 경로’ 해 가지고 ‘제품에 첨가를 한다’, 그런데 첨가한다고 그러면서 어떻게 첨가한다고 그랬느냐 하면 ‘스프레이나 에어로졸 제품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제품이 뭐냐라고 하는 부분이 특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영문으로 한 페이지짜리 뽁뽁하게 있는데 거기에 보면 제품이 ‘목재, 고무, 직물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역시 가습기살균제하고는 관련이 없다 이렇게……

○**김삼화 위원** 그런데 어쨌든 스프레이나 에어로졸 형태로 나온다고 하면 충분히 흡입이 가능한 용도였기 때문에 당시 유해성 심사 법령에 따르더라도 용도상으로 주 노출 경로가 경피 또는 흡입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흡입독성하고 경피독성에 대한 시험성적서를 제출을 해야 되는데 당시 정부가 PGH에 대한 유해성 심사는 했는데 흡입독성에 대해서는 심사를 하지 않았는데, 그것은 맞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그 부분은 어디서 이게 노출이 되냐 이 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공장에서도요. 공장은 산업자인데,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거기서 안전 조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일반 소비자가 아니라 근로자에 대해서 보호하는 조치이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법에……

○**김삼화 위원** 그 부분은 근로자도 결국은 국민인데 근로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흡입이 되어도 된다고 판단을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정부가 가습기 피해조사 결과 3, 4단계로 분류된 분들은 피해자로 보지 않는 이유가 인과관계가 부족하다 하는 판정을 들고 있는데, 그 분류기준이 폐질환 진행 정도인 것은 알고 계시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알고 있습니다.

○**김삼화 위원** 그런데 3, 4등급 피해자들이 대책에서도 밀리고 또 피해 연관성도 없는 사람으로 오해받고 있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3, 4등급에서도 사망자도 있는데요—현재 3, 4등급 피해자 84명이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직접 가서 본인들 진료기록을 모아서 통계자료까지 만들고 있는데, 그것 알고 계십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그 말씀은 처음 들어 봤습니다.

○**김삼화 위원** 최근에 제가 만난 그분들 말씀에 의하면 PHMG가 들어간 옥시 제품 피해자들은 공통적으로 폐질환이 나타나고 있는데 CMIT나 MIT가 들어간 애경 등 제품을 사용한 피해자들은 폐렴·비염·기관지염·부비동염 같은 상기도 질환이 주로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보면 PHMG나 CMIT 같은 제품별로 피해 양상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부가 이런 제품별 피해 양상을 파악해서 가습기살균제 피해범위를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우선 폐질환 관련해서 3, 4단계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는 행정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의사 분들이 법정에 나가서 상대 의사하고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인과관계를 이겨야만 소송에 이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3단계, 4단계는 그 의사 분들이 가능성이 낮다고 본 겁니다.

○**김삼화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3, 4등급 피해자 대책과 관련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피해인정 기준, 대책, 판정불가 피해자에 나타난

문제 해결 대책, 기저질환 피해자 검토 방안, 트라우마센터, 피해자상담센터 지원 방안 등에 대해서는 서면질의로 대체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과 대안을 만들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알겠습니다.

○**김삼화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영표** 김삼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요청하신 자료는 성실하게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영표** 다음은 정의당 이정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미 위원** 정의당 이정미입니다.

환경부장관님, 우리 국민들이 요즘 숨 쉬는 것조차 공포스럽다고 생각하는 것 아시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걱정이 크십니다.

○**이정미 위원** 환경부의 책임과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저는 오늘 아침 9시 50분에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인해서 비강 섬유화를 겪고 있는 한 어린이 피해자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왔습니다. 그것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요청했는데요.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현황에 보면 지금까지 PHMG, PGH를 사용했던 옥시 피해자들 중심으로 이렇게 지원 대책이 마련되고 있는데 그중에 CMIT, MIT를 단독 사용했던, 즉 가습기살균제 중에 가습기메이트 아시지요? 그것을 사용했던 사람들 중에 3명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 아십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알고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동물실험에서 흡입독성에 의한 폐섬유화의 인과관계, 아까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입증되지도 않았는데 이분들을 지원하시게 됐던 이유는 뭐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그분들은 동물실험과는 상관없이 의사 등 판정위원회에서 이것은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정미 위원** 맞습니다. 그러니까 역학적·임상적 실험 결과에 따라서 이분들이 가습기살균제에 의해서 피해를 받았을 것이라고 판단을 내리신 것이지요, 동물실험 결과와는 다르게?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이정미 위원**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를 들어서 흡입독성 동물실험 결과와 역학적·임상적 결과가 배치될 때는 역학적·임상적 결과를 우선한다고 하는 그런 판단에 근거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페스트가 인간에게는 치명적이지만 쥐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과 같은 이런 경우를 여기에 적용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 측면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가슴기살균제 피해자이면서 피해자 아들을 둔 분이 환경부에 가슴기살균제 피해 등급을 다시 검토해 줄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진단서를 보여 줬는데요. 코에 염증을 앓고 있는 이 남자아이의 진단서에는 섬유성 골형성 이상증이라고 하는 그런 진단이 나와 있습니다. 한마디로 폐섬유화처럼 코 내부에 섬유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진단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진단은 2015년 8월 19일 날 진단서가 작성됐고 오늘날까지 10개월이 지나는 동안 어렵사리 이 진단서를 가지고 피해 호소를 했고 오늘 환경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가 폐손상 이외의 다른 질환에 대해서 검토하지 않아서 이렇게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했는데, 이 사실을 일단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이 진단서를 제출했다는 것을……

○**환경부장관 윤성규** 저희들이 검토를 안 한 게 아니구요.

○**이정미 위원** 아니, 일단 제출을 받으셨습니까, 이분의 진단서를?

○**환경부장관 윤성규** 그분이 어느 분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저는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한 분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보고가 되셨어야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사건은 가슴기살균제 피해의 새로운 질환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CMIT, MIT 원료로 만들어진 가슴기메이트만 사용한 가정에서 발생한 피해 접수 사례이고요. 이 어린이의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고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지만 치료가 별로 쉽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보고받기로는 폐손상 이외 검토위원회에서 이 폐손상 이외의 것에 대한 여러 가지 판정 기준들을 연구를 하시는데 짧게는 1년 길게는 2년이 걸린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그것은 동물실험 과정으로 판단을 하게 될 텐데, 아

까도 말씀드렸다고 동물실험과 임상·역학 실험의 차이도 있을 것이고 또 이 실험 기간이 굉장히 오래 진행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 피해자들은 굉장히 고통을 받으면서 사망에 이르는 이런 경우까지 예측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루 빨리 이것에 대한 신속한 판정이 필요하다, 아까 말씀드렸다고 동물실험에서도 아까 얘기했던 CMIT, MIT가 피부와 눈에 부식성, 자극성, 감작성 등이 확인됐고 장기간에 걸쳐서 만성 노출이 된 사람에게는 기관지염이나 천식 등의 호흡기 질병이 발생할 것이라라는 것이 이미 예견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 작성한 가슴기살균제 건강피해 사건 백서에서도 이것이 비염과 기관지염의 손상으로 연결될 것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래서 비강과 상기도와 관련되어 있는 것은 새로운 동물실험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예견되어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역학적·임상적 판단 하에서 CMIT, MIT 피해자를 지원했던 사례도 있기 때문에 이런 사례에 비추어서 이런 지금 새로운 피해 사례로 나타나고 있는 분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 대책이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또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부가 발주해서 건강 모니터링 가슴기살균제 피해 추가연구 결과보고서가 발간이 되어 있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중간 중간 나오고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런데 이 보고서를 보면 현재 가슴기 피해자들의 건강 상태가 호전이 되고 있는지, 나쁜지 정확하게 판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사실도 이해하고 계시지요?

그런데 지금 가슴기살균제 피해자들 사이에서 작은 문건 하나가 회람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지금 이 모니터링 주관 기관인 서울아산병원의 모 교수님이 ‘어린이들은 다른 폐손상의 그것처럼 성장하면서 호전되거나 나아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했지만 현재 수년간의 모니터링 결과에 더 나빠지고 있다. 현재로서는 치료약이나 치료 방법이 없고 이런 상태가 수년간 지속되어 그들이 성인이 될 경우에는 상당수 어린이 피해자들의 폐 이식까지 고려해야 할 것이라라는 의견이다’라고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인

의 경우에는 폐 기능이 정상인의 퇴화 속도보다 현저히 빠르게 악화되고 있고 수년 내에 상당한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환경부가 발주한 자료의 작성자와 이 피해자들이 인용하고 회람하고 있는 이 모 교수님이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동안 진행됐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의 상태가 지금 호전되고 있는지, 나빠지고 있는지 이것에 대한 환경부의 명확한 입장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나빠지고 있다면, 피해자들이 회람하고 있는 이 문서처럼 상태가 굉장히 악화되고 있고 심대한 타격으로까지 갈 수 있을 것이라라고 판단하고 있다면 이것에 대한 빠른 대책이 지금 만들어져야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리고 이것이 사실관계가 아니라면 불안에 떨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이 사실을 명백하게 입증하고 이분들이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도록 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더 이상 이 상황에 대해서 객관적인 사실만이 아니라 지금 이분들의 피해가 호전되고 있는지, 나빠지고 있는지에 대한 어떤 환경부의 판단까지 명확하게 제시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3차 피해 접수자의 피해 판정 기준에 대한 것과 폐 이외 질환 검토위원회 진행 상황에 대해서 공개해 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질의는 서면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추가질의 이후에 있습니까?

○위원장 홍영표 예,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홍영표 이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관계서 간단하게 답변하실 것 있으면 하십시오.

○환경부장관 윤성규 지금 이정미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처음 듣는 말씀이고요, 또 행정적으로 그것을 판단할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회 중심으로 어떻게 이것을 처리하는 게 좋은지 한번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영표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형수 위원 더불어민주당 서형수입니다.

저도 가습기살균제 건에 대해서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삼화 위원 질문 과정에 장관님 답변 있었지만 산업안전보건법 제40조3항에 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가 제출되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조치 사항 등을 공표하고 관계 부처에 통보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2007년 7월 12일 PGH에 대한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위험성 고시를 하게 됩니다.

그 내용 자체가 '07-211' 해서 거기에 대한 유해·위험성을 인정하고 예방조치사항으로서는 중기 등에 노출되는 작업에는 취급 근로자가 호흡용 보호구 등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작업하도록 할 것이라는 고시가 공표됩니다.

이 공표된 내용이 관계기관에 서로 공유되고 거기에 따른 필요한 조치가 있었습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위원님 지적하신 그 고시에 보면 유해성·위험성이라고 하는 항목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그냥 '밝은 회색 액체' 이렇게 겉보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근로자의 건강장애 예방을 위한 조치 내용에 보면 말씀하신 대로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한다든지 환기시설을 설치해라, 또 취급 근로자가 호흡용 보호구 등을 착용해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말하자면 가습기살균제처럼 일반 국민한테 노출되는 것이 아니고 가스상 물질인 경우에 대부분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문구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고시 내용에는 실질적으로 어떤 유해성·위험성을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형수 위원 일단 지금 현재 보면 중기에 노출될 경우에, 결국 흡입했을 경우에는 위험이 있다는 그 자체는 분명히 지금 현재 적시되어 있는 거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그러니까 이 작업장은 일반 국민하고 좀 상황이 다른 것이 작업장은 하루에 8시간 근무하고 나머지 16시간은 다른 데 가서 회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작업장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고농도에 노출이 되거든요. 그렇

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법은 고농도를 대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서형수 위원 그래도 일단 PGH 자체가 어쨌든 공기 중에 노출됐을 경우에 건강에 해롭다라는 자체는 분명히 인지를 하셨을 것 아닙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그러니까 과도하게 노출이 되면 피해가 될 수 있지요. 그런데 일반 우리 국민한테는 그렇게 고농도로 노출될 가능성이 없는 것이고, 저희들이 당초 심사할 때에는 가습기살균제용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향균 카펫 첨가제라든지 또는 고무, 목재, 직물 이런 데 첨가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작업 과정이 일반 국민하고는 격리되어 있는 것이지요.

○서형수 위원 어쨌든 2007년 단계에서 벌써 이것이 공기에 노출되어서는 위험하다라는 것을 일단 아셨으면 제대로 PGH가 들어가 있는 일반 생활화학용품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의 새로운 조사를 하고 그래도 위험성 자체를 일단 한번 확인할 필요는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업장과 일반 국민이 생활하는 데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작업장에서 위험성이 있다고 그래서 일반 국민까지 전부 그 위험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조금, 양 범 간에 적용대상이나 여건이 다릅니다.

○서형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거 관련된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 애경 가습기 피해자들이 전체 380명, 그 중 54명이 사망을 했는데요.

가습기메이트 성분 분석에 DDAC라는 물질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DDAC요?

○서형수 위원 DDAC.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들어 봤습니다만 저희들이 보통 PGH, PHMG하고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서형수 위원 2011년 8월 31일자 정부 보도 해명자료를 보면 MBC가 그 당시에 판매 중인 다섯 가지 가습기살균제 성분 분석해 보니까 0.1ppm 이하의 DDAC가 검출되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일단 정부에서 부인하면서 현재까지 환자대조군 역학조사에서 환자군에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된 가습기살균제에 대한 조사 및 성분에 대한 문헌조사 결과 DDAC라는 성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까라고 일단 확인은 했습니다.

했는데요, 제가 지난주에 간접경로를 통해서 질병관리본부에 확인하니까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지난 2011년에 애경 홈크리닉 가습기메이트 제품의 성분 분석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 의뢰하여 회신받은 결과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라고 하고, 정성 시험 결과 홈크리닉 가습기메이트에 DDAC가 검출되어 있는 것으로 일단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당시에 DDAC가 검출되지 않는다는 정부의 보도 자체는 이 내용을 알고 하신 건지 모르고 하신 건지 그것 좀 확인 부탁드립니다.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서형수 위원 만약 DDAC가 이렇게 검출이 되고 이것이 실질적으로 애경 가습기 자체에 대한 원인물질로 확인되고 그것이 피해의 인과관계라고 생각하시면 이 부분 자체에 대해서도 실제 책임 자체를 추궁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확인을 해 보겠는데, 그게 그런 피해를 야기시키지는 똑같이 PHMG나 PGH처럼 상당한 조사가 필요할 겁니다. 역학조사라든지 동물실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해야 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있는 자료들을 모아 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서형수 위원 간단하게 마지막 질문 하겠습니다.

아까도 다른 위원님이 질문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화력발전소 53개 중에서 기존 화력발전소 10개 정도는 어쨌든 조치를 하고 나머지 43개는 그대로 가동하겠다고 하시면서 성능 개선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제가 지금 자료를 보니까 53개 중에서 원래 기준에, 영홍화력 수준으로 전체 성능 자체를 신규는 하시고 나머지 부분은 좀 개선하셔야 되는데, 영홍화력의 지금 질소산화물 허용기준이 15ppm입니다.

그런데 다른 화력발전소를 보니까 허용기준 비교하면 실배출농도 자체가 지금 영홍 기준에서 열 배가 넘는 데가 8개소고요, 그다음에 다섯 배가 넘는 데가 22개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 다 지금 방치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성능 개선을 통해서 배출 수준을 낮출 수 있는지 현실적인 답을 부탁드립니다.

○**환경부장관 윤성규** 지적하신 대로 영흥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강한 기준으로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발전소 53기 중에 10기는 노후발전소로 저희가 분류해 가지고 폐기하거나 아니면 폐기 후에 새로 친환경적으로 짓거나 또는 연료를 대체하거나 이런 조치들을 하게 되고요.

그 외에 기존 발전소의 경우에도 충남지역은 예를 들면 자발적 협약을 체결해 가지고 이런 오염물질을 최대한 줄이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유도를 해 나갈 생각으로 있습니다.

신규의 경우에는 20기를 건설하게 되어 있는데 그중에 착공 안 한 5기 또 지금 진도가 한 10% 밖에 안 나간 4기 등 9기는 영흥도 수준으로 기준을 다시 바꿔 가지고 설치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을 지금보다 상당히 줄이는 것으로 저희들이 총량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홍영표** 서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의 장석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장석춘 위원** 반갑습니다. 새누리당 경북 구미을 장석춘입니다.

대한민국의 환경 보존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윤성규 장관님 이하 모든 공무원들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가습기살균제 사태를 비롯해서 미세먼지, 폭스바겐 문제 등 환경 관련 현안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각각의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언급하기로 하고 먼저 최근에 환경부 내에서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감지되고 있어서 장관님에게 묻고자 합니다.

장관님, 환경부는 폐가전 무상방문수거 서비스로 대통령상까지 받은 적이 있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대통령상을 환경부가 받은 것은 제가 기억이 없는데요.

○**장석춘 위원** 없어요? 모르겠어요? 맞습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정부3.0인가 그것을 받은 적은……

○**장석춘 위원** 3.0도 받고……

자,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국민들이 1599-0903으로 전화하면 직접 고객의 집까지 찾아가서 수거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그렇습니다.

○**장석춘 위원** 또한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학교, 병원, 식당, 숙박업소 등에서도 무상수거 요청 시 처리해 주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장석춘 위원** 그런데 제가 알아본 결과 환경부에서 얼마 전에 사업자의 폐가전 제품에 대해서는 무상수거를 중단하라는 지침을 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을 통해서 전달했다고 합니다.

장관님, 그 내용 보고받은 적 있습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제가 보고 아직 못 받았습니다. 지금 처음 들어 봤습니다.

○**장석춘 위원** 보고 못 받았어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장석춘 위원** 자, 넘어가겠습니다.

PPT 화면 좀 보여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전자제품 등 자원순환법 제15조를 보게 되면 회수 및 인계·재활용에 소요되는 모든 제반비용을 의무생산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 공무원들이 명확한 근거기준도 없이 문전수거 대상범위를 임의로 축소시켜 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 환경부가 늘어나는 수거비용 부담을 느낀 대형 가전사들의 로비를 받은 것 아닌지 의심이 들 정도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장관님의 답변을 요청하겠습니다.

○**환경부장관 윤성규** 위원님 말씀하신 것 관련해서 지금 금시초문이고 저희 담당 국장도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한번 자세히 조사해 보겠습니다.

○**장석춘 위원** 사실을 제가 하나하나씩 말씀드릴게요. 참고사항으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환경부는 무상방문 서비스를 통해서 작년에 대통령상을 수상했고 행정자치부 주관 정부3.0 성과사례 왕중왕전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는데요. 그리고 환경부 경영평가에서 자원순환국은 최고등급인 S등급을 평가받았습니다.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고 우수한 서비스로 국민들의 폭발적인 반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환경부 지침은 그야말로 국민 편의는 안중에도 없고 전형적인 탁상행정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환경부 공무원들의 행태를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생각하고 있

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장관님, 폐가전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를 지난 2003년도부터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행하는 과정에서 유사 공제조합이나 실적 매입에 따른 허위실적 때문에 시장에서 큰 혼란을 한 번 겪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8대, 19대 국회를 거치면서 공제조합의 투명성 확보와 실적 매입 금지를 위해 관리체계를 일원화했습니다. 결국 정부가 복수공제조합에 문제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허용하지 않았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난 5월 27일 환경부에서 입법예고한 전자제품 등 자원순환법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PPT 화면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정부가 폐기물 회수 대상을 기존 ‘자신이 출고한 제품’에서 ‘자신이 출고한 제품이 속한 제품군’으로 교묘하게 이것을 바꿨습니다. 사실상 복수공제조합이나 실적 매입을 허용해 주는 꼴이 되었습니다. 결국은 생산자책임제도를 정부 스스로 부정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장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이 부분은 이미 2014년 1월부터 제품군 내에 같은, 예를 들면 냉장고다 그러면 냉장고 제품군 내에서는 재활용 실적을 제품별로 구분하지 않고 이런 제도가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번에 실적 관리에 대한 법률근거를 명확히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석춘 위원** 제가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장석춘 위원** 저는 이렇게 봅니다. 담당 국·과장들한테 왜 이런 어이없는 입법예고안이 발의되었는지 물어보니까 단순한 입법 실수라고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 커다란 혼선을 몰고 올 것이 뻔히 예상되는데 입법 실수라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요, 중앙 엘리트 환경부 공무원들이 이 정도의 실력이라고 저는 믿기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장관님, 간략하게 답변 한번 해 주세요, 이 실수라는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장관 윤성규** 제가 지금 담당 국장으로

부터 받은 것도, 제가 그동안에 이 업무와 관련해서 보고받은 내용으로 보면 실수가 아닙니다.

○**장석춘 위원** 실수가 아니라고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장석춘 위원** 담당 국장이 실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환경부장관 윤성규** 이것은 그렇게 해 오던 것을 명확하게 해 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석춘 위원** 그러면 지금 시간이 너무 제한되어서 마무리하겠는데요, 나중에 분명히 서류로 보고를 다시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알겠습니다.

○**장석춘 위원** 저는 이번 입법예고를 실무자들의 단순 실수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생산자책임제도 이행에 따른 비용을 줄이기 위한 대기업을 민원을 들어주기 위한 것이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들고요, 환경부에 일관성 있는 정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여기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책임소재도 명확하게 밝혀 주시고요, 서면보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영표** 장석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거 관련된 담당 국장 나와 계세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홍영표** 아니, 잠깐만요.

장 위원님, 담당 국장으로부터 직접 잠깐 답변을 들으시겠습니까?

○**장석춘 위원** 보좌관을 통해서 받았습시다.

○**위원장 홍영표** 아니요, 지금요.

지금 받으시겠어요?

○**장석춘 위원**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위원장 홍영표** 예, 그러면 짧게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환경부자원순환국장 신진수** 자원순환국장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제품군 내에 이미 실적이 인정이 되었기 때문에 법률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그런 사항입니다.

앞으로 공제조합에 가입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자사제품만 재활용 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말씀하신 그러한 대기업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싹쓸이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석춘 위원** 위원장님, 잠시만 말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홍영표** 아니요, 아무튼 자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다시 제출해서 장석춘 위원님께 보고해 주십시오.

○**환경부자원순환국장 신진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영표** 다음은 국민의당 이상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돈 위원** 국민의당 이상돈입니다.

어느 나라나 환경정책, 환경법의 가장 중요한 원칙 중의 하나는 사전예방 원칙입니다. 아마 장관님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제가 보기에 특히 최근 들어서 한 8년 환경부가 이 원칙에서 너무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나 녹조나 다 사후대책에만 급급하고 있고 가습기살균제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어떤 구체적인 사안보다도 환경부 자체가 정책의 큰 흐름을 바로잡고 위상을 다시 찾아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환경부가 1990년대 그 정신을 되찾아야만 이런 일을 막을 수 있다고 봅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대기 분야에서 많은 위원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수도권 대기문제가 심각하지만 충남 당진·서천 등 화력발전소 밀집지역에서는 이게 주민들의 심각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또한 정확한 통계는 알 수 없지만 거기서부터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이 수도권 미세먼지에 상당히 영향을 주는 것으로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충청남도는 당진·서천 그 지역을, 화력발전소 밀집지역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산업 입지가 제한됩니다. 충청남도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 당진시는 거기에 지금 계획되어 있는 에코파워, 두 개의 화력발전소를 아예 중단시켜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는 대기환경을 책임지고 있는 환경부의 수장께서는 대충 어떤, 잠정적이라도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한번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 윤성규** 충남에 석탄화력발전소들 26기가 있는데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하라 또 거기에 송전선이 많이 설치가 됐는데 이런 것과 관

련해 가지고 환경부는 물론이고 산업부라든지 여러 부처, 국토부 이런 데 같이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 내용에 특별대책지역 지정 건의도 있고 어떤 재정적인 지원 이런 것을 요구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환경부로서는 특별대책지역 지정은 일정부분 지역 개발이 또 굉장히 제약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보다는 오염물질 줄이는데 목표가 있다라고 한다면, 지자체장이 지역의 별도 배출량 기준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먼저 검토를 해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충남도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돈 위원** 제가 느끼기에는 환경부장관께서는 환경보다 지역 개발을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좀 주객이 전도된 것 같습니다. 그냥 그것은……

저도 물론 특별대책지역의 지정이 간단한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충남도와 당진시가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환경부는 좀 더 이 지역 주민과 이쪽 지역의 주장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산업자원부 또는 경제부처를 너무 의식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대기 분야에서 자동차 대책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우리가 이미 사전예방에 완전히 실패한 것입니다. 경유차 너무 많이 들어온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전기자동차, 수소차를 대중화한다는 것은 상당한 시간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전기차, 수소차로 넘어가기 전에 잠정적인 어떤 단계에서 일각에서 많이 주장하고 있는 LPG 연료를—택시는 말할 것도 없고—승용차에도 보급하는 그런 주장에 대해서는 장관께서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이 부분은 특별대책 발표하던 6월 3일 날도 기자들이 물어 왔고 했는데 저희도 세부 이행계획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을 관련 부처하고 협의를 할 예정으로 있고 지금 일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돈 위원** 그러니까 참 답답한 게 우리나라 환경부는 그냥 관련 부처 협의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환경부가 이런 문제 일수록 좀 여론, 시민단체, 언론 이런 것에 좀 많은 정보를 주고 언론과 시민단체와 여론을 자기

친구로 만들어서 힘을 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1 대 1로 경제부처와 부딪치면 번번이 패합니다.
나는 그런 거에서 좀 답답한 것을 느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여기 현황보고에는 되어 있지 않지만 굉장히 중요한 현안이 있습니다.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건설예산이 1조가 넘는 대규모 프로젝트가 영주댐입니다. 이 영주댐이 이제 다 건설되어서 담수를 앞두고 있는데, 이 댐의 주된 목적은 발전이나 생활용수 공급이 아니라 유지용수, 즉 하천에 물을 고르게 흘려보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낙동강은 사실상 계단 호수가 되어서 녹조가 얼마나 심합니까? 오죽하면 환경부도 녹조 대책을 내지 않습니까? 녹조 예방은 못하고 녹조가 생기니까 이거 대책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영주댐을 세워서 그 댐물을 흘려보내면 낙동강 물을 도대체 얼마나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을 제가 아는 장관께서 간단하게 할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한번 말씀을 해 보시고, 또 하나는, 다시……

같이 답하시지요.

또 하나는 이 영주댐으로 인해서 내성천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내성천이 아닙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내성천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에서든 보기 드문 모래의 강으로서 그야말로 천연 생태적으로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는 곳인데 이미 내성천은 우리가 알던 내성천이 아닙니다. 심한 곳은 모래가 1m씩 다 나가서 습지화 되고 있고 그 생태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과연 낙동강 물을 얼마나 깨끗하게 할 수 있으며 그것을 위해서 1조 원 이상의 예산을 들이고 그거를 위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하천을 다 없애 버리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거기에 대한 환경부 장관의 의견을, 평가를 듣고 싶습니다.

○**환경부장관 윤성규** 존경하는 이상돈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유지용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그렇게 큰 댐을 건설할 필요가 있었느냐 하는 부분은 옛날로 돌아가서 있었는지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그런 유지용수댐은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수질 개선에 대해서는 그 댐이 얼마나 물을 가둬 가지고 특히 갈수기라든지 이럴 때 흘려보낼

수 있는지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제가 어떻게 개선이 될 것이라라고 예단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대개 녹조는 상류로 갈수록 보가 만들어지면서 생기는 현상이 생겼고 유기물이나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옛날보다는 조금 개선되는 이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성천댐이, 영주댐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는 조금 지켜보면서 모니터링을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 홍영표** 이상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옥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송옥주 위원** 더불어민주당 송옥주입니다.

최근 충남 금산군에 위치한 램텍놀러지에서 네 번째로 화학물질인 불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장관께서는 이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알고 있습니다.

○**송옥주 위원** 램텍놀러지는 2013년 7월부터 올 6월까지 지난 4년간 네 번의 사고가 발생하여 주민들은 사업장 이전과 폐쇄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지방청장이 저한테 그렇게 주민들은 요구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보고를 받았습니다.

○**송옥주 위원** 램텍놀러지는 지난 2014년 사고 당시에도 화학물질관리법 제43조상의 즉시 신고규정을 위반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에게 상황을 거짓으로 진술하여 사고 은폐 시도를 한 바 있습니다. 이번 사고에도 자체 방재 후에 119에 신고하는 등 주민의 건강보다는 사고의 축소나 은폐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에서 화학물질관리법 제40조, 41조, 43조를 각각 위반한 것으로 추정되고 만약 35조를 위반한 경우 해당 공장의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도 취소 가능합니다.

환경부장관께서는 해당 사업장의 위법 사항에 대하여 어떻게 조치하실 예정입니까? 언론에 따르면 경고처분에 그칠 것 같은데 너무 솜방망이 처분이 아닌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이 부분은 위반 횟수, 위반 내용 이런 것에 따라서 그 행정절차가 로드맵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금강유역환경청이 이 부분을 잘 체크를 해 가지고 적법하게 처리를 할 겁니다.

○**송옥주 위원** 잘 체크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2014년 8월 24일 램테크놀러지는 세 번째 사고 발생 후에 금강청과 환경공단의 지도·점검 안전 진단 컨설팅 정기검사 등을 실시하였고 2015년 9월에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같은 해 12월 30일 정기검사를 재실시하여 적합 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 후 6개월도 되지 않아 네 번째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금강청과 환경공단이 제대로 관리·감독을 했다면 이번 사고는 막을 수 있었던 것 아닌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그 내용은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거기에 립치 디스크(rupture disk)라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어느 설비에 이상 고압이 걸리면 설비 자체가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 약하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여기에서 그쪽으로 터져 나가라.

그게 터졌다 그러는데 이제 그것은 제대로 작동이 된 것 같고요, 제 느낌에는. 그런데 그게 터져 나갔을 때 그것을 실내에 가두어 놓아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가두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이 점검 이후에라도 그 시설을 그렇게 기능할 수 있도록 자기들이 유지 관리를 해야 되는데 아마 유지 관리가 잘 안 됐던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송옥주 위원**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해당 설비와 관련된 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화학물질관리법상에 화학사고 발생 시 즉시 가동 중지를 명령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없습니다. 또한 빈발하는 화학물질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화학물질 배출량 정보를 주민에게 반드시 알리도록 하는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이번 사고의 발생경과와 그간의 조치를 살펴보면 화학물질관리법이 현장에서 아직까지 잘 적용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법률상 개선되어야 할 부분도 일부 발견되어 본 의원실에서 개정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번 사고를 통해 드러난 화관법 운영상의 문제와 유해화학물질 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상의 문제 등에 대하여 환경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개선할 것을 요청합니다. 장관께서도 같은 생각이시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저희도 문제점들을 그

동안 정비해 왔지만 또 본 법을 개정할 사항들도 계속 모아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기회에 본 법 개정도 추진하겠습니다.

○**송옥주 위원**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미세먼지 환경기준에 관한 질문입니다.

환경부는 1995년 미세먼지를 대기오염물질로 규정했고 현재 국내 미세먼지 환경기준은 WHO 잠정기준2 수준으로 설정되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 PPT 자료를 참고로 보시겠습니다.

권고기준에 의하면 심폐질환과 폐암에 의한 사망률 증가가 가장 낮은 수준인데요, 우리나라는 지금 잠정목표2로 설정을 해서 위험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적용 중인 미세먼지 환경기준은 PM₁₀의 경우 1993년에 신설되고 두 차례 개정되어 2007년 지금의 기준으로 되었는데 10년이 된 지금까지 그 기준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가 뭘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지적하신 대로 PM₁₀은 꽤 됐습니다만 저희가 보다 중요한 PM_{2.5}를 작년 부터 비로소 환경기준에 추가를 하고 관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심지어 PM₁₀을 이제 하지 말고 PM_{2.5}만 하는 게 어떠냐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는 'WHO가 2개를 다 유지하기 때문에 PM₁₀은 PM₁₀대로 의미가 있어서 관리를 해야 되고 PM_{2.5}를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것이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PM_{2.5}가 비록 작년 부터 관리대상이 됐지만 앞으로 보다 PM_{2.5} 중심으로 관리 강화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송옥주 위원** 다음 PPT 자료를 보겠습니다.

선진국의 대기환경기준 비교표입니다.

국내 미세먼지 환경기준은 잠정목표2 수준인데요, 대부분의 선진국은 WHO 권고기준을 만족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대기환경기준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선진국이 이런 설정기준을 하고 있는데요. 환경부는 미세먼지 특별대책을 내놓기에 앞서서 대책의 밑받침이 될 수 있는 대기환경기준을 상향시키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관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전문용어로 권고기준은 어찌 보면 '준거치'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크

라이터어리언(criterion)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사람이 건강을 지키는 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기준이 크라이터어리언인데 이 WHO의 권고치는 거기에 가까운 것으로 저희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환경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스탠더드(standard)라고 하는데 스탠더드는 정책의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아황산가스 같은 경우에도 언제까지 뭘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정하고 그것을 진행해 가면서 차기 목표를 설정하고 그래서 그동안 한 서너번 강화를 한 적이 있는데 이 PM_{2.5}도 그런 방식으로 중간목표를 설정하고 어느 정도 달성이 될 것 같으면 다음 목표를 설정하고 이런 식으로 스탠더드를 해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진적인 강화를 해야 할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보시면 EU도 PM_{2.5}가 WHO는 10이지만 EU는 25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라나 지역별로 이렇게 중간단계 목표는 서로 다르게 설정하고 있습니다.

○송옥주 위원 좀 부족한 부분은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영표 송옥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의 임이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이자 위원 새누리당의 임이자 위원입니다.

장관님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최근 우리 사회에서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사건 중의 하나가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건임에는 뭐 이견이 없을 겁니다.

본 위원이 상임위원을 준비하면서 19대 국회의회의록을 검토해 보니까 장관님께서 지난 5월 11일 날 제342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가습기살균제 관련 현안보고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건은 수많은 희생자를 낸 비극적인 사건으로서 장삿속만 챙기는 상흔과 제품 안전관리 법제 미비가 중첩되면서 있어서는 안 될 대규모 인명 살상사고가 빚어졌습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그렇습니다.

○임이자 위원 그런데 이 가습기살균제와 같이 장삿속만 챙기는 상흔과 제품 안전관리 법제 미비가 중첩되어서 또다시 제2의 옥시 사태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유독물질이 또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최근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는 전자담배에 사용되는 불법 고농도 니코틴입니다.

영상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시18분 동영상 상영개시)

(12시21분 동영상 상영종료)

잘 보셨지요, 장관님?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임이자 위원 환경부는 2015년 12월 29일 날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면제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그렇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임이자 위원 그래서 니코틴과 그 염류 중 하나를 2% 이하로 함유한 혼합물을 담배 용도로 판매한 자에 대해서는 영업허가를 면제하고 그다음에 고농도의 니코틴 용액을 취급하거나 판매하는 사업장은 화학물질관리법상 영업허가를 반드시 받도록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제재도 강화를 해 놓았는데요.

지금 현재 영상을 통해서 보시다시피 고농도 니코틴 용액을 판매한 업체에 대해서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그 기준치의 2%를 초과한 업체에 대한 단속 성과는 아직은 없습니다.

○임이자 위원 지금 환경부가 그렇기 때문에 욕을 먹고 있는 겁니다. 끝만 번지르르하게 해 놓고 실질적으로 국민들의 어떤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는 내팽개치고 있으니까 그렇게 욕을 먹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불법이 이렇게 심각한데도 방치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저희가 2%로 설정한 근거는 EU도 그렇게 설정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2%를 초과하면 유독물로 영업허가를 받게 하고 그 이하의 면제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작년 12월 달에 개정을 하다 보니까 아직 시행 초기라 저희들의 여력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단속을 해서 집행을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이자 위원 지금 정상적으로 판매되는 것보다도 19배가 넘는 독성들이 들어 있는 그런 것들을 파니까 문제가 되는 거고요.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최소한 전자담배 함량표시 및 성분표시를 의무화하고 검사수거제도를 도입해서 전자담배의 안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장관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 윤성규 담배 자체는 저희가 화학물질관리법이나 이런 것으로 관리할 대상은 아닌 것 같고요, 니코틴이라고 하는 그 물질 자체가

영업허가를 받는 대상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복지부하고 서로 영역을 나누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이자 위원 지금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재부나 식약처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돼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영표 임이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전 주질의의 마지막 순서로 신창현 위원님 해 주십시오.

○신창현 위원 환경부, 요즘 가슴기살균제 문제 때문에 고생 많으시지요?

제2의 가슴기살균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환경부는 화학물질의 평가 및 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34조에 따라서 국민의 건강이나 환경, 위해성이 있다고 우려되는 생활화학제품, 예를 들면 세정제, 합성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방향제, 탈취제, 방충제, 방부제 등 15개 제품들을 위해우려제품으로 지정하고 2015년 4월 1일자로 환경부 고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해우려제품의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을 제정해서 특별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소비자도 이런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소비자분들께서도 저희.....

○신창현 위원 예, 동의하시면 소비자들에게 이런 사실을 알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제품에 표시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엇그제 여의도에서 무작위로 몇 가지 제품을 사 봤어요.

(제품을 들어 보이며)

유리세정제 원텍스입니다.

전혀 그런 내용이 없어요. 이 제품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건강과 환경 위해성이 우려되는 제품이라는 표시가 앞에도 없고 뒤에도 없습니다. 깨알 같은 글씨로 성분이나 사용상 주의사항이 있기는 있는데.

주부들이 많이 쓰는 합성세제 비트에도 그런 게 없어요.

표백제 유한락스에도 없습니다.

섬유유연제 샤프란 없어요.

많이 쓰는 방향제에도 없어요.

미스터 홈스타 탈취제에도 없어요.

김서림 방지 유리세정 티슈입니다. 엘지생활건강에서 만든 것 여기에도 없어요. 앞에도 없고 뒤에도 없습니다.

정말 이상해요. 왜, 여기에다가 건강과 환경 위해우려제품이라는 표시 하기가 그렇게 어렵나요?

봤더니 우리 환경부가 2015년 4월 1일자 만든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에 없어요. 업자의 잘못이 아니에요. 정부가 하라고 안 하는데 업자가 왜 합니까?

이 고시 기준 보면 제3조에 위해우려제품 별표 1과 같다 해서 제가 말씀드린 열다섯 가지 종류가 죽 별표1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8조에 가서 표시 기준 보면 표시 기준에는 그런 내용이 없단 말이지요. 성분 표시, 함량 표시, 사용상 주의사항 표시 등등 그것도 눈에 잘 보이도록 하라고 그랬는데 보면 잘 보이지도 않는 이렇게 이면으로 비치는 깨알 같은 글씨로.....

이것은 뭘 이야기하느냐, 소비자가 내가 쓰는 합성세제나 유리세정제나 표백제가 정말 건강 위해우려제품인지 아닌지를 알려면 환경부 고시를 준비해야 돼요, 마트에 가기 전에. 별표도 준비해야 돼요. 그다음에 환경부가 얘기한 생활화학제품 안전 사용에 관한 이 지침도, 여기 보면 예시가 있습니다. 제품 표시기준 현황 해 가지고 세정제 같으면 이런 식으로 제품에 표시하도록.....

적어도 이 정도 세 가지는 가지고 가야 우리가 집에서 사용하는 생활화학제품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어요.

이거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 환경부 일을 너무 어렵게 하시는 것 같아요. 제품 전면에다가 눈에 잘 보이는 곳에 건강·환경 위해우려제품이라고 한마디 써 주면 간단하잖아요. 그러면 현재까지 143명의 사망자를 낸 가슴기살균제의 경우에도, 그러면 옥시싹싹에 나와야지요.

애초에 이런 위해우려제품이든지 사용제한물질이라고 표시했다면 피해를 예방할 수도 있었고 줄일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신창현 위원 장관, 그래서요, 그렇게 동의하시기 때문에 지금 화평법을, 이 업무도 산자부에서

이관받아서 법도 2015년 1월에 새로 만들어 가지고 환경부가 잘 해 보겠다고 지금 이 고시를 만드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신창현 위원** 그러면 잘 해 보려고 하면서 왜 첫 단추부터 그렇게 이상하게 끼시느냐 말입니다.

○**환경부장관 윤성규** 이게 기득권 내지 이미 제품이 만들어졌거나 포장에 만들어진 것을 폐기할 수가 없으니까 이 KC마크를 붙였던 제품에 대해서는 금년 9월 말까지 유예를 시켜 놔줍니다. 그래서 10월부터는 그렇게 될 것입니다.

○**신창현 위원** KC마크는 그러면 안전합니까, 장관님? KC마크만 보면 무조건 써도 되나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그런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법의 안정성……

○**신창현 위원** 아니 장관님, 우리 서로 선수끼리 그러지 맙시다.

여기 환경부가 작년도 아니고 금년 5월 18일 날 거의 전수조사 해서 나온 보도자료에 보면 7개 제품 회수명령을 했어요. 아시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신창현 위원** 그 회수명령한 7개 제품에 바이오피톤(주)에서 나온 탈취제, PHMG·PHMB 사용 금지 물질을 여기서 썼다고 회수명령 했지 않습니까? 이게 KC마크가 있어요. 그런데 KC마크 믿고 사서 이거 썼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또 있습니다. 일곱 가지 중에 주식회사 네오제퍼에서 세정제, 포름알데히드 40 이하라고 표시했는데 실제로 환경부가 조사해 보니까 308이에요. 이것도 회수명령 했어요.

더 심각한 것은 1급 발암물질 트리클로로에틸렌, 주식회사 필코스캠에서 만든 탈취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0.1 이하라고 표시했는데 4%가 들어 있단 말이지요, 1급 발암물질. 그래서 회수명령 했어요. 이것도 KC마크가 있어요.

KC마크 믿고 어떻게 삽니까, 소비자가?

○**환경부장관 윤성규**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PHMG가 기준을 위반했기 때문에 그것을 회수명령을 내린 것이고요.

○**신창현 위원** 그것은 환경부가 하는 일이고, 소비자는 제품에다 써 놓으면 한 번 더 생각할

것 아니에요, KC마크라도 안심할 수 없다.

○**환경부장관 윤성규** 그런데 이제……

○**신창현 위원** 환경부가 이렇게 환경부 보도자료 냈지만 소비자들 모르잖아요, KC마크인데 이렇게 회수조치 했다는 거.

그러니까 결론은 고시 개정해서서 8조에 ‘이것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 24조에 따라서 건강과 환경 위해우려제품입니다’라고 표시하자고요, 잘 보이는 곳에. 그러면 간단히 해결되지 않습니까?

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 다시피 법의 안정성·신뢰성 이런 것 때문에 기존 업체들한테 금년 9월 말까지는 유예를 시켜 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예기간을 당길 수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까만 현재 상태에서도 10월부터는 표시가 됩니다.

○**신창현 위원** 건강 위해, 환경 위해우려제품이라는 표시를 잘 보이는 곳에 하실 수 있다는 것이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성분 표시를 하게 됩니다.

○**신창현 위원** 성분 표시는, 성분 표시는 맨 뒤에 깨알 같은데 안 보여요. 왜 이렇게 어렵게 얘기하세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위해물질은 분명하게 표시를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신창현 위원** 예를 들면 여기 KC마크는 잘 보이는 데다 이렇게 써 놔줍니다. ‘KC마크는 이 제품이 합성세제 안전 기준에 적합하였음을 의미하며 타 용도와는 무관합니다’ 이렇게 잘 보이는 곳에 써 놔어요. 뜬금없이 얘기가 왜 나왔는지를 소비자들이 알려면 적어도 이 앞의 어딘가에다, 뭐 때가 쪽이니 침투세탁이니 하는 업자 광고만 하지 말고 소비자 건강을 위해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민건강 및 환경 위해우려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입니다’ 이거 한 줄 써 넣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소비자의 편에 선다면.

○**환경부장관 윤성규** 하여튼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 사항을 깊이 있게 한번 잘 검토해서 대안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창현 위원** 장관님의 깊이 있는 검토는 긍정적인 답변으로, 하시겠다는 것으로 제가 믿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영표 신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역시 전문가답게 아주 잘 해 주셨습니다.

오전 주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회의 마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윤성규 장관님의 답변을 들으면서 좀 유감스러운 것들이 있습니다.

우선 저는 가습기살균제 문제도 지금 이게 1~2년 된 것도 아니고 굉장히 오랫동안 우리 사회에서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저는 이런 문제를 이렇게 마무리 짓지 못하고 몇 년씩 끌고 가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환경노동위원회에 있을 때도 이 문제를 제기해서 당시에 정부에서도 미흡하지만 어떤 조치도 취했고 또 옥시 회사의 대표도 불러서 저희가 사실상 청문회도 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정부의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우리 장관께서는 제도가 미흡하고 또 다른 부처의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다고 아주 매끄럽게 답변을 하셨는데 아마 이 가습기살균제의 그 피해자들이 오늘 저희 상임위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거의 100명이 넘는 희생자가 있고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많은 피해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정부를 믿고 또 우리 사회의 그런 시스템을 믿고 어린아이한테 가습기, 독성이 든 가습기살균제를 넣은 가습기를 쓰다가 이렇게 희생자가 발생했고 그래서 정말 피눈물을 흘리면서 몇 해 동안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그런 상태로 지금 계속 돼 왔습니다.

저는 정말 안타까운 것은 제가 2013년도에 저희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제기했을 때 정말 검찰이 나서서 원인과 책임에 대해서 수사를 제대로 했다면, 지금과 같은 수사만 했다 하더라도 이 문제가 이렇게 장기화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정부가 총체적인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가장 근본적인 것은 행정의 실패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물론 환경부로서는 왜 우리만 책임이나 하는 그런 억울한 감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주무부처로서 피해자들과 국민에 대해서 더

검허한 자세로 반성하고 책임지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부, 우리 대한민국이 선진 문명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 피해자 한 명 한 명의 안타까운 사연들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저는 정부가 속 시원하게 이거 사과 한 번 몇 년이 지나도 안 했다고 생각합니다. 변명은 갈수록 많아지고, 뭐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전에 위원님들이 질의를 할 때 좀 그런 것이 안타까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미세먼지도 마찬가지로입니다. 미세먼지도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어찌 됐든 WHO의 기준보다 2배나 되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솔직히 우리나라처럼 미세먼지 정보가 발생하면 멕시코 같은 나라도 멕시코시티가 차량 운행을 제한합니다. 저는 환경부가 그런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화력발전소가 한 10배 정도 더 미세먼지가 심각한 그런 노후화된 화력발전소는 환경부가 소신을 가지고 그런 미세먼지 정보가 발생했을 때는 중단을 시켜야 됩니다. 운행 중단, 발전 중단을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윤성규 장관님께서 참 소신 있게 그런 환경에 대한 철학을 가지고 하실 줄 알았는데 다른 부처 눈치를 보면서 그런 일을 못 하시니까 환경부가 갈수록 목소리가 작아지고 중요한 부처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대처가 미흡하다 이런 어떤 비판을, 질책을 국민으로부터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후 질의에는 좀 더 그런 것들을 감안 하셔서 국민에 대해서, 우리 환경문제에 대한 주무 책임자로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영표 제가 오전에 위원님들 주질의를 한 번 다 마치려고 했습니다마는 이 정도로 오전 회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2시 40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요? 2시에 할까요, 2시 반에 할까요?

하태경 간사님!

○河泰慶 위원 2시……

○위원장 홍영표 2시에 할까요?

자, 그러면 오찬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3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영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누리당의 신보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보라 위원** 새누리당 신보라 위원입니다.

국민건강과 삶의 질에 직결되는 환경문제에 힘쓰시는 많은 환경부 관계자 여러분들 고생 많습니다.

장관님께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언론에서 차량용 에어컨과 공기청정기 필터 내의 유해물질 관련 보도가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다섯 곳 중 두 곳에서 CMIT 계열의 성분인 OIT가 검출되었다고 보도가 됐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알고 있습니다.

○**신보라 위원** 이와 관련해서 업체들은 OIT 함유량이 환경부 기준인 1%에 미달하기 때문에 인체에 유해하지는 않다고 해명을 했고 환경부도 OIT가 기체 형태로 들이마시면 사람에게 가슴기살균제만큼이나 독성을 가진 물질이기는 하지만 업체 중 하나인 쓰리엠(3M)에서는 이 물질이 고체화되어 있으며 기체화되지 않으면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도 알고 계십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OIT가 들어 있다는 것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신보라 위원** 이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들이 이제는 공기청정기까지 위험하지 않겠느냐 이런 불안에 떨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제도 OIT가 필터상에 고체화되어 있다 하더라도 공기청정기 자체가 흡입제품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우려가 불식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데요. 에어컨이나 공기청정기 내에 사용되는 필터에 대한 안전 기준이 없다는 게 본질적인 문제가 아닌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지적하신 대로 기준이 없는 게 문제인 것 같고요. 또 저희들이 화평법에 15가지 생활화학제품을 관리하고 있는데 이

필터는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생활화학제품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관련 부처하고 같이 이것을 검사하는 이런 작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신보라 위원** 이게 고체화되어 있더라도 어쨌든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조금 있어 보이고 유해물질로도 되어 있기 때문에 함유량이 적다 하더라도 분명한 안전조치가 함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안전 기준의 도입은 논의를 하신다면 언제쯤 발표나, 계획하실 예정이십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우선 저희가 조사를 산업부에 기술표준원이라고 있는데 거기하고 결과를 놓고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자동차관리법상의 필터이기 때문에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논의를 해야 되고요.

○**신보라 위원** 예, 부처 간 논의가 더 잘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고요. 가슴기살균제의 논란도 그렇고 화학물질에 대한 불안감이 사실상 높다는 것은 어느 누구나 공감할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가 이에 대한 기준을 보다 정확하게 만들고 공기청정기와 차량용에어컨 필터 안전성 조사 검증도 좀 철저하게 진행해서 관련 내용들을 좀 보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보라 위원** 또한 가슴기살균제와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4차 조사와 관련한 병원 지정을 말씀하셨는데 총 8개 병원이 확실하게 지금 결정이 된 건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지방에 있는 세 군데는 아직 최종결정을 안 한 것 같고요. 나머지 병원들은 일단 하겠다 하는 의사는 저희들한테 표명을 했습니다.

○**신보라 위원** 그러면 그 5개의 병원은 다 서울 소재로 있는 병원 아닌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그렇습니다. 5개가 수도권입니다.

○**신보라 위원** 그러면 언제쯤 결정을 하실 예정이신가요? 이게 지금 거의 결정된 것처럼 보도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사실상 아직 결정이 안 된 것 아닙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이 수도권 5개는 자기들이 할 의사가 있다라고 의사 표명을 했고 저희하고 계약을 체결했는데 아직 계약은 체결이 안 된 상태입니다.

○**신보라 위원** 그러면 지역에 계시는 분들의 보호가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언제 결정되는 건가요, 도대체?

○**환경부장관 윤성규** 지역도 한 군데 천안에 있는 단국대병원은 참여 의사를 표명을 했는데 부산 해운대병원, 전남대병원은 아직 최종 확답은 안 한 상태고요.

○**신보라 위원** 결정시한은 언제까지 생각하고 계십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시한은 저희들이 따로 정해 놓은 것은 없고 상대방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계속 설득을, 이해를 시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사들이 법정에 설 일이 없지 않습니까? 이것 하게 되면 법정에 서는 일도 생기기 때문에 의사들이 조심스러워 해서……

○**신보라 위원** 국민건강과 직결된 사안이기에 때문에 지방에 계시는 많은 분들이 의료적인 혜택을 좀 받을 수 있도록 조사와 진단에 관련해서 좀 협조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역병원은 진단과 조사를 담당하고 서울에 있는 병원들이 판정을 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그 부분은 프로토콜이라 해 가지고 이것을 최종적으로 공유한 다음에 지방병원에서도 똑같은 수준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아마 지방에서도 판정이 가능할 겁니다.

○**신보라 위원** 지역병원도 판정이 가능하다고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가능할 수 있다는 거지요. 행정적인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알 수는 없고 그분들이……

○**신보라 위원** 그 부분도 함께 인지를 하고 써야 되는 것 아닐까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아니, 아직은 이분들이 서울아산병원하고 모여 본 적이 없거든요. 모여 봐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1차는 최종 판정은 아무래도 상당 기간은 아산병원이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신보라 위원** 이 부분도 좀 면밀하게 검토해서 가지고 병원과 협조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또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지원한다는 원칙 아래 월 126만 원 이상의 소득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 이해는 되기는 하지만 피해자 대부분들이 지원을 못 받게 될 거라는 언론 보도가 또 있던데요. 이 부분은 사실인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저희들은 거꾸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26명이 살아 계신데 그중에 소아하고 가정주부가 110명이거든요. 그런데 가정주부가 아마 따로 소득이 없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이 들고 소아는 기본적으로 소득이 없고요. 그래서 상당 부분이 대상이 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신보라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3·4차 피해자들은 아예 지원 대상에서 다 제외된다고 하는 점에 대한 우려도 있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3·4차 피해자분을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을 해 주셨는데 3·4차 피해자를 저희들이 지원 대상으로 삼으면 판단을 의료진은 법정에서 자기들은 그것 책임 못 진다고 할 겁니다. 왜냐하면 3단계·4단계는 거의 없다라고 자기들이 판정을 했는데 저희들이 이제 그것을 지원하게 되면 정부가 인정한 게 되고 피해자들은 소송으로 갈 겁니다. 그러면 소송이 났을 때 의료진은 그것은 거의 관계없다고 했는데 그것은 우리가 책임을 못 진다 이렇게 될 겁니다.

○**신보라 위원** 추가질의 조금 이따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영표** 신보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득 위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용득입니다.

앞선 우리 위원들이 전부 환경부장관님한테만 질문을 했어요. 기상청장님한테 질문을 안 해서 먼저 기상청장님한테 간단한 질문 드리고 환경부장관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기상예보가 일본보다 뒤쳐졌습니까, 거의 비슷합니까?

○**기상청장 고윤화** 저희들은 뒤쳐졌다고 보지 않고요. 실제 강수 유무의 정확도 가지고만 보면 일본은 한 88% 정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92%가 약간 넘거든요. 일본보다는 오히려 지금 앞서 있는 상태입니다, 수치만 가지고 보면.

○**이용득 위원** 기상청 입장에서 그러면 더 필요한 관측기구라든가 이런 자재들은 없는 겁니까?

○**기상청장 고윤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계속

해서 이 기상관측장비들은 추가적으로 확충을 해 나가고 있고요. 또 앞으로 미래에 어떤 서비스가 좀 더 고해상도로 공간적인 분포가 좀 더 조밀한 데까지 국지적인 부분까지 서비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 관측망이 많이 보강이 되어야 됩니다.

○이용득 위원 보강되는 데 필요한 게 있다 그러면 본 위원이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상청장 고윤화 예.

○이용득 위원 다음 환경부장관님, 지난번 6월 21일 날 세종시에서 기자들하고 식사하시면서 ‘미세먼지는 건강한 사람들이 마시면 별로 관계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데 맞습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제가 제 생각을 그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그때 만찬 자리에서 이번에 예년하고 별로, 미세먼지가 실제 나빠진 건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왜 이번에 이렇게 이슈가 됐느냐라고 하는 질문이 있어서 제가 아마도 2013년에 WHO 산하의 국제암연구소가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게 국민들한테 불안감을 많이 안겨 드린 것 같고, 그런데 국민들이 그렇게 너무나 지나치게 걱정하시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일부 의원들은 건강한 사람은 별문제가 없고 저항력이 약한 사람들은 문제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마치……

○이용득 위원 그냥 전한 겁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그런데 마치 제가 그렇게 얘기한 것처럼 이게……

○이용득 위원 그런데 일반 국민들은, 일부 국회의원도 그렇고 일부 국민들도 그렇겠지요. ‘미세먼지 이제까지 아무 일 없었는데’ 하는……

그러나 환경부장관으로서의 소양이라면 평상시 가지고 있는 마음가짐이 그런 얘기를 굳이 전해야 되는 정도겠어요? 뭔가 마음가짐이 잘못됐으면, 앞으로 환경문제에 있어서 좀 더 적극적이고 좀 더 국민 건강을 위하는 부분에서 열정을 다해야 되겠다 하는 데는 좀 미흡한 자세 아니었나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저는 위원님과 전적으로 의견을 같이하고, 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말씀드린 동기는 너무나 지나치게 걱정을 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 사회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겁니다.

○이용득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도 좀 가려서 해야 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6월경에 OECD 발표한 내용의 핵심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미세먼지에 대해서 제대로 대처를 못 하면 2060년이 되면 조기사망률이 가장 높아질 거다 이렇게 전망을 했잖아요. 아시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알고 있습니다.

○이용득 위원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의 미세먼지에 대한 불안감은 엄청나게 큰 겁니다.

○환경부장관 윤성규 위원님, 그 부분은 잠깐 설명을……

○이용득 위원 특히 미세먼지 부분이 국내적인 부분이 있고 또 국외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이용득 위원 중국하고의 부분에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고, 얼마나 성과가 있었어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우리나라는 편서풍 지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우리한테 올 수 있고 우리나라 것은 또 일본으로 갑니다. 그런데 3국의 관계를 보면 중국이 우리나라의 2~3배 높습니다. 또 우리나라 자체에서 발생한 것만 해도 우리가 일본의 2배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3국이 서로 책임을 따지다 보면 문제가 풀리지 않기 때문에 3국 환경장관회의에서는 서로 도울 건 돕고 이렇게 해서 푸는 방법으로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용득 위원 그래서 성과가 있었어요? 좀 나아진 게 있어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우선 작년에, 금년이지만 중국이 13차 5개년 경제사회발전계획을 결정했습니다, 양회라고 하는 인민대표대회하고 정치협상회의에서.

거기에 보면 금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삼천……

○이용득 위원 현재까지는 없지요, 나아진 건?

○환경부장관 윤성규 말씀드리겠습니다. 3142조원의……

○이용득 위원 아니,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추가로 또 말씀드릴게요.

그다음에 아까 신창현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상품에 ‘위해우려제품이다’ 하는 표시가 그렇게 어려운 건지, 아까 분명히 거기에 성분은 표시가 될 겁니다 이렇게 했는데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 그 성분이 얼마나 우리 건강에 위해가

되는지는 몰라요. 위해 우려가 있다는 이 문구를 넣어 달라는 요구였고요. 그 부분은 저도 똑같이 장관님에게 요구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환경부에서 정확하게 정리된 게 없기 때문에 잘 모르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금년 말까지 안전성에 대한 검증을 완료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반드시 지켜서 국민들이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답변 해 주십시오.

○**환경부장관 윤성규** 금년 말까지는 아마, 유해물질을 저희가 서른다섯 가지를 정하고 있는데요, 그 물질을 표시하면서 독성이 있다라고 표시를 할 겁니다. 독성이 있다……

○**이용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영표** 이용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 조원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원진 위원** 제가 6년 만에 환경노동위에 다시 왔습니다. 제가 자진해서 왔어요. 환노위가 기피 상임위라고 하는데 제가 자진해서 왔는데, 첫째는 환경정책에 문제가 많다……

환경부에 계시는 공무원들이 다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어느 정권, 어느 정부를 떠나서 일관성이 많이 떨어진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제 국민들이 먹고살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사실은 일자리도 없고 전월세 값 올라가고 또 젊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없는 사회로 많이 가고 있는데, 우선 먹고 마시는 것만큼은 안전해야 안 되겠는가…… 그렇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조원진 위원** 먹고 마시고 또 흡입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가 신경을 쓰고 국회 환노위에서도 신경을 써야 되겠다, 관심을 엄청나게 많이 가져야 되는데 그 근본 이유는 다른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재고를 해서 하면 되는데 이 문제, 환경문제만큼은 생활권의 문제가 아니고 생명권의 문제하고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 계시는 공무원들께서도 국민의 생명권을 지킨다는 의무를,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모든 일에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알겠습니다.

○**조원진 위원** 이게 여러 가지 발전 논리하고 환경 논리하고 맞물려 있는데요. 우선 환경부 공

무원만이라도 환경 보전의 원칙에 충실해 달라 이 말씀을 좀 드리고요.

지금 가습기 첨가제 문제가 대두됐는데 어느 정권에서도 자유로운 정부가 없는 것 같아요. 가습기 위해물질을 처음 인정하고 드러났던 YS정부 또 제품을 처음으로 시판했던 DJ정부, 가습기에 문제점이 생겼는데 그것을 잡아내지 못하고 엄청난 피해를 일으키게 했던 노무현정부, 그 이후에 그런 과정들을 알면서도 등한시했던 이명박정부, 고소고발권이 2년 전에 있었는데도 아직까지 처리 못 하고 있는 박근혜정부, 국민들한테 낯을 들 수 없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환경부는 뭐 했습니까? 법령이 미비했기 때문에 못 했다…… 환경부라는 게 93년도에 그러한 물질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발표가 나면 그것의 주무부서 아닙니까? 뭔가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장관님은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들 발언하실 때 답변에 뭔가 그렇지 않으신 것 같아요. 내 재임 중에 없었으니까…… 그 당시 93년에 일반직에 있었던 분들은 과장급이 됐을 테고 과장급에 있었던 분들은 지금 거의 국장급 이상 가신 것 아닙니까? 누구 하나 양심선언으로 내가 93년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했다, 내가 노무현정부 때 이런 문제 때문에 잘못했다, 내가 이명박정부 때 이래서 잘못했다 누구 한 사람 얘기하는 사람 못 봤습니다, 저는. 그런데도 100여 명 이상이 사망을 한 겁니다.

환경부장관의 솔직한 얘기를 좀 듣고 싶어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

○**환경부장관 윤성규**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정말 법제라고 하는 것이 앞서가야 되는데 역사의 과정을 보면 문제가 생기고 나서 법령이 정비되는 형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도 그런 이유로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근본적인 대책은 저희가 2013년도에 화평법을 만들면서 비로소 거기에 생활화학제품을 위해관리제품으로 관리할 수 있게 입법이 되면서, 또 화학물질의 용도를 바꿀 때는 제심사를 받게 하는 이런 제도가 2013년도에 비로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조원진 위원** 똑같은 말씀을 하지 마시고, 여기 환경부 간부 공무원들이 다 오셨기 때문에 이 문제만큼은 우리가 정말 국민들한테 머리 숙여야

됩니다.

국회도 마찬가지지요, 사실은. 국회가 그런 법령을 잘 찾아내지 못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솔직히 많이 연구를 했느냐, 저부터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야를 떠나서, 어느 정권을 떠나서 국민들한테 고개를 못 드는 겁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는.

앞으로, 한번 보십시오.

미세먼지 들어와 있지요, 그다음에 석면 문제 있지요, 오존 등등…… 앞으로 산업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수도권이 비대해지면 비대해질수록 환경문제는 더 커지는 겁니다.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그렇습니다.

○**조원진 위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환경부가 어떻게 할 건지, 정권 바뀔 때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조금조금씩 리모델링해서 갈 건지 근본적으로 바꾸고 갈 건지에 대한 이제 근본 해결책에 대한 준비도 해야 되다……

지금도 먹는 물 문제는 수돗물을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심각하게 고민하는 지역도 있는 겁니다. 그 물 안에 여러 가지 전자제품의 세척제가 그대로 가고 있는, 지금 현재의 정수시설로는 도저히 정수가 되지 않는 그 상황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좀 더 솔직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여름만 되면 강은, 호수는 전부 녹조라든 현상을 다 가지고 있고, ‘조금만 지나면, 비만 오면 없어집니다’ 그런 안일한 행태가 지금까지 환경부의 행태라는 거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환노위와 환경부가 국민의 건강권·생명권을 어떻게 지켜 갈 건지에 대한 심각한 고민들을 좀 해 보자, 이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국민들한테 솔직해지고 좀 더 욕을 먹더라도 지금까지 숨겨 왔던 모든 부분들을 이제는 국민들한테 밝히는 그러한 용기가 환경부에 필요하다, 그러한 용기가……

내가 현직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국장 됐기 때문에, 겁낼 필요 없습니다. 그게 바로 용기입니다. 그 당시에 힘들었기에, 몰라서 못 했지만 지금부터라도 잘 하겠다 그러한 반성을 하는 게 용기 아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영표** 조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한정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정에 위원** 서울 강서구병 한정에입니다.

환경부장관님, 미국의 EPA가 뭐 하는 기관이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미국 연방정부에서 환경 쪽을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한정에 위원** 우리로 보면 환경부하고 같은 업무를 하는 곳이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국가마다 약간씩 다르지만 하여튼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한정에 위원** 거의 같습니다. 그렇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한정에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미국 EPA가 1991년에 ‘가정용 가습기의 사용과 관리’라는 자료집을 만들어서 전 국민들에게 배포를 이미 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그 당시에 나왔던 자료를 보면 가정용 가습기의 사용과 관련한 내용 중에 ‘주의할 점’이라고 해서 세제나 살균제 사용에 대해서는 제조사의 설명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제조사의 설명 자체가 잘못되어 있지요. 그건 아주 잘못된 거기 때문에 제조사는 거기에 대해서 합당한 형벌을 받기는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권장 사항이 없을 경우에 대해서’라고 되어 있고 ‘세제나 살균제를 사용하는 경우에’, 그러니까 우리가 해당이 되었던 바이오사이드가 포함되어 있는 세제나 살균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해당 수조를 살균제를 사용해서 씻고 난 뒤에 수돗물로 여러 번 행굼으로써 가습기 사용 중에 화학물질이 공기 중에 확산되지 않도록 한다라고 하는 주의사항이 포함된 내용을 이미 국민들에게 배포를 했었습니다, EPA가.

그다음 것 보여 주세요.

‘가정용 가습기 사용 기간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면 관리 지시에 따랐다고 하더라도 사용을 중단하고 의사의 진찰을 받는다’……

그런데 우리는 94년에, 94년에 환경부도 만들어지기는 했습니다. 그 전에 환경처이기도 하고 이랬지만. 94년에 처음에 SK케미칼에서 가습기 메이트라고 하는 것을, 그게 다른 게 아니지요. 살생 물질에 해당되는 것을 그냥 물에 섞어 가지고 가습기에 넣어서 물과 섞어서 쓰라고 하는 건데 이게 마치 세계 최초로 만들어진 친환경적인

물질인 것처럼, 저는 바이오사이드가, 살생제가 어떻게 친환경물질이 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세계 최초의 살균제를 만들었다라고 하면서 대대적으로, 이게 마치 새로운 일자리를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 내고 새로운 판촉의 시장이 열린 것처럼 얘기를 했습니다.

처음에 만들었던 SK케미칼에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바람에 그 이후에 만든 업체들이 다 똑같은 방식으로 광고를 진행을 했었어요. 환경부가 늦게 만들어지고…… 환경부에서 미국에 공무원들 연수도 많이 보내지 않습니까? 제도와 관련한 것들은 알아보면 좋겠다, 세계 최초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나올 때는 그 세계 최초라고 하는 것이 과연 정말로 안전한 것인지에 대한 검토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게 기존 물질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그런데 정부가 그 역할을 하지 못했지요.

2007년에 있었던 것 예 하나 들어 보겠습니다. 홈케어라고 하는 곳에서 가습기클린업이라고 하는 제품을 만들어서 검사 신청한 겁니다. 이것 결국 KC제품 인증받은 건데요. 여기 보면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제가 빨간 줄 썩워진 것 읽어 드리겠습니다. ‘살균효과 및 가정에서 숲속 향을 즐길 수 있다, 피톤치드가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은나노 성분을 함유해서 기존 가습기세정제보다 살균력을 배가한다’, 마치 은나노 성분이 살균제인 것처럼 말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거기 포함되어 있는 PHMG나 PGH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그리고 국가기관에서 안전성 검사 결과 한 것 보십시오. 유해성분이라고 해서 염산, 황산 있지도 않은 것, 수산화나트륨, 수산화칼륨 들어가 있지도 않은 것, 테트라클로로에틸렌, 트리클로로에틸렌 이 네 가지만 없으면 자율안전관리 통과했다고, 안전하다고 KC라고 도장 찍어서 내보내서 팔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가 유해물질 4개를 뺀 어떤 물질이 살균의 역할을 하는 건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어떤 물질이 세정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우리 지금 화평법 만들었는데 이 화평법으로 세정제·살균제 원재료 가지고 들어오는 것, 1t 미만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것, 기존화학물질인 것 제재 가할 수 있습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지금 기존화학물질은 저희가 510종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한정애 위원** 제재 가할 수 없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그것에 들어가 있으면……

○**한정애 위원** 1t 미만인 것 안 되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신규는 1t 미만은 아직 안 됩니다.

○**한정애 위원** 안 됩니다. 그렇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한정애 위원** 살균제라고 되어 있는 바이오사이드라고 되어 있는 것 EU나 미국은 어떻게 관리합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미국은 지금 보여 주신 사례가 하나의 옛날 예고요. 지금은 EU 같으면 바이오사이드라고 해서 살생물제는……

○**한정애 위원** EU는 별도 관리하고 있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레귤레이션(regulation)이라고 해서 EU 전체의 법이 하나 있습니다.

○**한정애 위원** 별도 관리하고, 미국은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도 연방법에 의해서 별도 관리합니다. 농약 및 살균제, 제조제……

○**환경부장관 윤성규** 농약법이 따로 하나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디스인펙턴트 로우(disinfectant law)인가 뭔가 또 하나가……

○**한정애 위원** 별도로 관리합니다.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또 하나가 따로 있습니다.

○**한정애 위원**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화평법 만들 때 우리가 왜 화평법 만들었습니까? 가습기살균제 같은 사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라고 해서 화평법 만들었는데 전경련에서 화평법 만들려고 할 때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것 있습니다. 그렇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한정애 위원** 좀 적게 쓰는 것은, 연구에 쓰는 것은…… 다 연구용으로 갖고 들어왔잖아요, 일부는. 연구용이라고 텐마크에서 갖고 들어오고, 연구용으로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사실은 물건 만들어 가지고 판 것 아닙니까, 가습기살균제 중에서 일부는? 그런 것들은 제외해 달라, 연간 1t 미만으로 수입하는 것도 제외해 달라, 그러면 조금씩 갖고 들어와서 쓰는 것은 무슨 수로 관리합니까? 결국은 가습기살균제에 해당되는 물질 수입해서 쓸 때 화평법으로 제재가 안 됩니다. 그렇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그렇게 소량은 제재가 안 됩니다.

○**한정애 위원** 그러면 화평법 왜 만들었습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그런데 이 부분은 일본의 화심법도 그렇고 EU도 그렇고 1t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공통 기준이라서……

○**한정애 위원** 장관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애초에 우리가 화평법을 만들려고 했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때의 그 정신은 저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거였고, 저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정신만 남아 있고 실제로는 전경련의 부탁을 받고 다 빼줘 버렸어요. 거기에 혁혁하게 역할을 했던 것은 공산품 인증해 줬던 산업자원부 똑같이 이번에도 같이 나서서 환경부 압박하고 국무조정회의 한다고 하면 거기서 압박하고 해서 결국은 환경부를 눌러 버렸지요, 못 하계끔. 그런데 환경부는 누구를 대변해야 됩니까? ‘이렇게 화평법이 제정이 되면 또다시 가슴기살균제 같은 사건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산업부에서 그렇게 얘기를 할 때?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저는 서운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환경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EPA처럼 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는 대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봅니다.

장관님 답변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영표** 한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십시오.

○**환경부장관 윤성규** 저희도 사실 안전성을 시험하려면 동물실험 이런 것을 많이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 동물실험하는 데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하려면 외국에 나가고 그래야 돼서 나름대로는 고민해 가지고 10t 이하의 예를 들면 한 15항목을 검사를 해라, 또 1000t 이상은 47항목을 해라 이렇게 나름 고민을 해서 규정을 만들었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국내 역량을 갖춰 가는 것에 비례해서 이 부분도 계속 강화를 해 나가야 됩니다. 그런 고민을 한 결과를 법안에 담았습니다.

○**위원장 홍영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질의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새누리당 하태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河泰慶 위원** 부산 해운대 하태경입니다.

장관님, 우선 여러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환경부의 우리 시대에 있어서 막중한 책임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과거 한때에는 개발이나 환경이나 이런 논쟁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논쟁도 없습니다, 개발도 친환경적 개발만이 가능한 거고. 그래서 지금 시대의 시대정신이 환경입니다. 그래서 장관님께서 다른 부처와의 관계에 있어서 특히 팔로워(follower)가 아니라 리더가 된다는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리더(leading) 역할을,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다 하면 여기 있는 위원님들과 같이 상의해서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그런 문제를 고민하고 상의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야 정부 인기도 올라갑니다. 장관님의 인기가 올라가야…… 고용, 인기 올라갈 수 있습니까? 구조적으로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경제성장 그것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시대가. 그런데 환경은 노력하면 얼마든지 잘할 수 있고 또 정부도 그만큼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환경부장관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미세먼지 계속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지금 환노에 와서 여기에 좀 과문해서 그러는데 국민들한테 약속한 게 있습니다. 몇 년 내에 미세먼지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겠다 이런 약속 한 적 있습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저희가 수도권 지역의 경우에는 1차 대책을 할 때 목표가 있었는데 약간 미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2차 대책에서는……

○**河泰慶 위원** 아니, 그러지 말고, 어렵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몇 년 안에 해결할 수 있습니까, 몇 년?

○**환경부장관 윤성규** 지금부터 10년 이내에 프랑스 파리 수준으로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河泰慶 위원** 10년 목표입니다, 10년.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河泰慶 위원** 10년 목표면 10년 안에 무엇을 할 것인지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지표를 정하십시오.

예를 들어서 클린디젤이 맞는 말입니까? 디젤

이 클린할 수 있습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폭스바겐 사태 이후 디젤은 실제 실험하고 실험도로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河泰慶 위원** 그렇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河泰慶 위원** 클린디젤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속인 것 아닙니까? 전 세계를 속인 이유는 디젤 자체가 클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CO₂가 적게 나오면 미세먼지가 많이 나오고 미세먼지를 줄이려고 그러면 CO₂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디젤입니다. 그리고 지금 대도시에는 미세먼지에 영향을 주는 가장 큰 요인이 디젤차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河泰慶 위원** 그러면 특히 수도권에는……

그리고 우리 차 산업을 봐도 그렇습니다. 디젤차는 미래지향적 차가 아닙니다. 과거의 차입니다. 없어져야 될 차입니다. 무슨 말이나? 국민들은 정부가 정말 결단력 있게 할 때 안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고통스러운 것은 지금 당장의 미세먼지가 고통스럽다는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언제까지 이 미세먼지 고통 속에 살아야 되느냐 그것 때문에 더 큰 고통을 겪는 겁니다, 우리 후대들에게까지. 그래서 가령 디젤차 같은 경우는 10년 안에 클린디젤 제로 정책을 쓰겠다 이런 발상의 전환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클린디젤 산업은 과거의 산업이다, 없어져야 되는 산업이다, 10년 안에 없애겠다, 그리고 지금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 등등 미래자동차로 대한민국이 나가겠다, 그러니까 환경부는 미래부처입니다. 대한민국을 미래로 이끄는 부처기 때문에 이런 강력한 드라이브를 정부 안에서 걸고 논쟁을 붙고, 기재부랑 다른 부처랑 필요하면 논쟁을 붙고 그렇게 하시라는 말입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번 옥시 가습기 사건에 있어서도 서울대인가요? 어떤 교수가 용역조작을 한 게 있었지 않습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河泰慶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용역을 하면 용역계약을 대학이랑 하잖아요, 대학의 산학협력단이랑.

○**환경부장관 윤성규** 그 케이스는 정부가 발주

한 게 아니라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했는지.

○**河泰慶 위원** 산학협력단이랑 했습니다.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 양심을 파는 지식인들이 많습니다. 적지 않습니다. 심지어 발주처의 의도대로 용역 결과를 도출하려고 데이터를 조작하고, 이런 것을 예방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문제도 있겠지만 이런 사실은 굉장히 전문영역이고 전문가들이 양심을 팔면 국민들의 생명이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도적으로 제도개선 요구를 하는 것인데, 유럽 대학 같은 경우는요 대학이 책임을 지고 대학이 배상의 주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수들에게 굉장히 연구윤리를 강조하고 교육을 합니다. 대학이 배상책임까지 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우리도 전문가 집단, 대학 이런 데서 피해자 배상책임까지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향·방법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교수가 용역을 조작할 경우에 예를 들어 같이…… 요즘 개인 연구가 어디 있습니까, 다 집단연구인데 그중에 누군가는 조작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부신고 포상, 이 용역 관련해서 지식인 집단 내에 내부신고 포상제도를 새로 만들어서 굉장히 이것은 포상을 많이 해 주게, 징벌적 배상 개념이 있겠지만 이것은 어쨌든 상당히 많이 포상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원천적으로 국민들에게 전문가가 가해자가 되는 것을 막는 것을 연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화학물질 성분표시는 이제 앞으로 한다고 그러셨잖아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河泰慶 위원** 담배가 있지 않습니까, 담배. 담배는 건강에 나쁘다고 우리가 광고를…… 적습니다, 법으로도 정해 놓고 있고. 그런데 저는 그것은 반대합니다. 화학물질이 들어가는 모든 제품에 그런 유해화학물질이 조금이라도 들어가 있다고 해서 위해우려물질이라고 부착하는 것은 저는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큰 혼란을 불러일으키고, 그리고 실제로 약하고 독하고 차이도 미량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약이지만 과량은 독인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한 두 가지는 선택적으로 해 볼 필요는 있다, 그러니까 필수품이 아니고, 필수품이 아닌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사실 국민들 개개인의 자기결정권, 자기 책임 의지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당 위원님 제안을 그냥 흘려듣지 마시고 시범적으로 한두 가지 정도는 생활필수품이 아닐 경우에는 소비자가 선택적으로 그리고 소비자가 똑똑해질 수 있게 그런 마크를 다는 것도 한번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 윤성규 간사님, 여러 가지 좋은 걱정을 해 주셨는데요. 우선 EU에서 대학이 연구성과 또 그 진실성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고 하는 부분 이런 부분은 교육부하고 미래부하고 한번 논의를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논의해서 결과를 별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위해우려제품에 대해서 그 제품 브랜드에 위해우려라고 붙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심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35개 물질이 들어갈 때는 ‘독성이 있다’ 정도만 이렇게 표시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좋으신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생필품이 아닌 경우에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는 것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홍영표 하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주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충질문을 신청하신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보충질의는 5분 할까요, 7분 할까요?

그러면 보충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보충질의 시간은 5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구를 출신 강병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강병원 위원 오전에 저는 장관님께서 몇 번의 신년사에 걸쳐서 선제적 대응을 말씀하셨던 것이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하고, 하지만 인간의 예지 능력으로 얘기하셨던 부분이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기를 환경부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래를 내다보고 그런 선제적 대응을 해야 된다고 다들 공감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서 41페이지를 보면—별 내용은 아닙니다—신규 석탄발전소 9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미착공 발전소가 4기이고 건설공정률 10% 미만 발전소가 5기라고 합니다.

아마 지난 6월 3일 날 총리 주재로 기재부, 산자부, 환경부 해 가지고 관계부처 합동 특별회의가 있었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가 있었습니다.

○강병원 위원 그 자리에서 신규 화력발전소를 석탄으로 가자고도 얘기가 됐습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거기서는 이 특별 대책의 세세한 내용 가지고 논의되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관계차관회의에서 다 합의를 해 가지고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대책을 잘 이행하겠나라고 하는……

○강병원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환경부는 신규 석탄발전소 9기에 대한 어떤 입장을 제시하셨습니다?

○환경부장관 윤성규 저희는 여기 대책에 있듯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강한 기준을 적용하도록 요구를 했고……

○강병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죽 얘기했던 것을 조금이라도 수용을 하신다면, 인정을 하신다면 선제적 대응, 미래부 그것을 생각한다 그러면 신규 화력발전소를 석탄이라고 규정 지을 게 아니라 새로운 대체에너지로, 신재생에너지로 해야겠다고 생각이 안 드십니까?

아직 착공도 안 된 발전소가 4기 있다고 합니다. 전혀 다른 접근으로 미래를 준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그렇게 가면 좋겠습니다만 또 블랙아웃 같은 것을 걱정하는 산업부의 걱정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대책은 정해졌고, 다만 이제……

○강병원 위원 블랙아웃 말씀하셨는데, 제가 발전소를 짓지 말자고 한 게 아니잖아요. 만약에 디젤차를 가지고서 접근을 하시려면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겁니다. 국민들께는 이미 다 팔았고 그 국민들께 팔았던 차를 다 바꿔 주실 겁니까, 전기차로? 시간 상당히 오래 걸리겠지요? 하지만 국가가, 환경부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이렇게 예정되어 있는 석탄발전소에 대해서는 새로운 접근을 하실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그런데 실제로 여기

‘건설공정률 10%’, ‘미착공’ 이렇게 표현이 된 것이 왜 그러냐 하면 이미 허가가 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허가 난 부분을 사후적으로 취소한다든지 바꾼다든지 하는 부분은 국가가 또 별도의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가 있고 해서……

○강병원 위원 우리 미래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제적 대응을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강병원 위원 이것을 자꾸 인정하실 거예요? 이렇게 가다 보면 미래에 대한 대비책은 어디에도 없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살생물제 같은 경우도 어떻게 도입하실 거며 이런 미세먼지에 관한 미래 대책도 어떻게 준비를 하시겠어요? 이미 진행되고 있는 것, 이미 수입해서 쓰고 있는 것 그런 말씀하고 똑같은 것 아니십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아까 말씀드렸지만 총량적으로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이 질소산화물이나 황산화물은 획기적으로 많이 줄입니다. 미세먼지는 아까 한 5% 정도 준다고 그랬는데 그와 같이 총량으로 앞으로 줄여 나가게끔 저희가 이것을 집행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비해서 또 2차 생성 오염물질 만드는 질소산화물이나 황산화물은 획기적으로 많이 줄일 겁니다.

○강병원 위원 10년 이내에 프랑스 파리 수준으로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수준을 맞추겠다고 하셨잖아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강병원 위원 정말 미래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선제적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봐서는 혹시 총리 주재 관계부처 특별대책회의가 있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환경부가 앞장서서 나서셔야 됩니다. 언제까지 석탄발전소를 가지고서 한쪽에서는 미세먼지를 늘리면서 마치 국민들을 위하는 것처럼 하신다 그러면 어느 국민이 환경부의 진정성을 믿어 주겠습니까? 환경부장관님께서 그런 총리 주재 회의에서 과감하게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석탄발전소로 우리의 전기산업을 이끌어 가는 것이 아니라 대체에너지와 신재생에너지로 나아가야 된다고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우리 국민들에게 전달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영표 강병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관님, 뭐 하실 말씀 없어요? 구구절절이 맞

는 이야기입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맞는 말씀인데 조금 시간을 주시면, 재생에너지가 우리나라에서 여력이 많지 않습니다. 지금 그런 대 그린의 싸움이 생깁니다. 가로림만 조력발전을 한쪽에서 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막습니다. 그러면 조력발전도 안 됩니다. 또 풍력발전 하려면 산으로 가려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평지에 할 데가 없습니다. 산으로 가려고 그러면 저희가 막습니다. 그러면 남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태양광발전 정도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생 가능 에너지라고 하는 것도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제한적인 것이고요. 그러면 CNG는 오염물질 안 나오느냐? 그것도 온실가스 다 나옵니다. 또 가격은 석탄이나 이런 것보다 한 2배 정도 비쌉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전력요금을 올리는 부분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하나만 저희가 주장하기에는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여러 가지 방정식을 풀어서 지금 대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홍영표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고요, 그런데 장관님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나라 전력 수급이 과잉 공급 때문에 아주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전력 예비율이 한 40% 가깝게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7차 전력수급계획에서 우리나라가 22%의 전력예비율을 가져가겠다, 이것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수치여서 지금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의 에너지, 특히 전력 수급에 있어서 정부가 정책을 바로잡지 못한다 이런 논쟁이 많이 있고 거기에서 또 신재생에너지 문제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가 사실은 전력 수급에 관한 전략과 정책을 세우는 데 있어서 아마 좀 분명하게 목소리를 내셔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다음 기회가 있으면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하여튼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특히 2019년까지 전력이 한 40%가 과잉 생산, 과잉 설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아시겠지만 LNG 발전소 같은 경우에 거의 수십 조 들여서 지어 놓고 지금 전혀 가동도 안 되고 있는 것 잘 아실 겁니다.

다음은 국민의당 비례대표이신 김삼화 위원 질

의해 주십시오.

○**김삼화 위원** 국민의당 김삼화 위원입니다.

장관님, 오전에도 잠깐 질의가 나왔었는데 우리나라 미세먼지 법정관리기준이 WHO 권고기준에 비해서는 한 2배 수준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PM_{2.5}를 기준으로 보면 일본은 35인데 우리는 50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PM_{2.5} 농도가 똑같이 40이라고 관측될 경우 우리나라는 보통인데 일본에서는 나쁨으로 예보된다고 합니다. 이런 느슨한 관리기준 때문에 우리 국민들 건강이 더 위험한 수준에 노출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에 비해서 더 건강하다고 판단해서 미세먼지 관리기준을 이렇게 잡으셨는지 궁금한 생각이 들고요.

환경부장관님은 최일선에서 유해환경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장해야 될 책임이 있는데 WHO 권고기준에 맞춰서 미세먼지 관리기준도 변경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 우리 국민들이 환경부와 기상청이 발표하는 미세먼지 정보를 믿지 못해서 일본 또 심지어 중국 사이트에서까지 미세먼지 예보를 확인하고 있다고 하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그런 보도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김삼화 위원** 초미세먼지예보 PM_{2.5}라는 어플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어플은 일본과 한국의 미세먼지 예보를 모아서 보여 준다고 하는데요, 왜 이런 불신이 생겼는지 한번 화면을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 화면을 보면, 환경부가 2011년에 펴낸 ‘대기오염측정망 설치·운영지침’에 따르면 공업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에 대기오염자동측정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면을 보면—왼쪽은 순천시입니다—순천시의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도시대기오염측정망은 순천만 한가운데에 있고, 순천만 자연생태관 육상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은 부산시인데요 부산시의 도로대기오염측정망 중 하나는 태종대 유원지관리소에 있습니다. 그 지역의 기상 여건을 반영해야 되는 측정망이 공원지역 한가운데에 설치되어 있는 겁니다.

(홍영표 위원장, 한정애 간사와 사회교대)

작년에도 미세먼지측정소가 규정을 지키지 않고 엉뚱한 높이에 설치되어 있어서 미세먼지 농도 측정이 부정확하다는 보도가 나온 바 있는데, 알고 계시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보도가 나오긴 했는데 사실은 저희도 그것이 꼭 옳은 보도냐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좀 의견이 다릅니다.

○**김삼화 위원** 이렇게 미세먼지측정소 위치 규정도 잘 지켜지지 않는데 다른 대기오염물질은 제대로 측정이 되고 있는지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장관님, 2014년 4월 10일에 발전·시멘트·철강 업체들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자발적 협약서 체결한 적 있으시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김삼화 위원** 환경부의 2016년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보면 ‘발전소, 제철소 등 대형 사업장과 자발적 협약으로 배출원 관리를 강화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화면의 빨간 줄 친 부분을 한번 보시면 ‘배출량을 최대한 저감하도록 노력한다. 기업별 저감 목표량 이행 계획 등은 기업이 자체적으로 수립하여 추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대부분 모두 선언적입니다. 구체적인 목표치도 없고 강제성도 없습니다, 저감 계획도 자체적으로 수립해서 추진한다고 되어 있고, 이 자발적 협약으로 어떤 저감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겁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자발적 협약으로 하면 서로 옳고 그르고 마찰이 적습니다. 그래서 그런 합의에 도달하는 데는 순리적으로 되는데 이후에 강제성 측면을 보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협약으로 해서 잘 지켜지지 않으면 그다음에 이제 강제하고 하는 데는 또 저희가 힘을 받습니다.

○**김삼화 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부터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명 통합환경관리법 시행될 예정이잖아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김삼화 위원** 그 법과 관련해서 너무 기업 친화적인 법률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는 건 알고 계시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그건 보는 분들에 따라서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 있습니다만 기본이 이겁

니다. 공기 같으면 ‘주변 주민이 코에 호흡하는 공기가 안전하게’ 거기서부터 출발합니다. 또 주변에서 농사를 짓거나 아니면 그 물을 잡숫거나 하면 그 잡숫는 물이 안전한가 여기부터 배출 규제기준이 나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굴뚝이나 또는 폐수구에서 나오는 농도만 체크를 하다 보니까 그 지역에 굴뚝이 하나 있을 때, 폐수구가 하나 있을 때하고 열 개 있을 때 다르거든요.

○**김삼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도 이 법안 봤는데 그 주요 내용을 보면 업종, 시설 등의 특성 반영 없이 획일적 배출 허용기준 적용으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게 문제다 하면서 사업자가 허가 배출기준을 직접 정하게 되어 있고요. 사업자의 의견을 들어서 허가조건 또는 허가 배출기준을 변경할 수 있게 하는 등 환경의 질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고려했다기보다는 기술적·경제적 요소를 고려한 최적가용기법에 근거하고 있어서 오히려 발전사나 제조업체에 유리한 법률이라고 봅니다.

환경부가 앞으로 국민 건강을 지킬 수 있는 확실하고 특별한 대책을 마련하는 데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한정애** 김삼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의당의 이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미 위원** 장관님, 오전에 질의한 것에 있어서 한 가지만 더 가슴기 관련해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 정부가 지난 5월 달에 폐 손상 이외의 질환에 대한 검토위원회를 구성해서 장기 손상이나 비염 등에 대한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활동을 하고 있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이정미 위원** 3·4등급 피해자들이 사실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에 따라서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의 굉장히 중요한 회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원회가 회의 결과를, 예를 들어 중간보고, 합의된 결과 이런 것들을 지금 보고를 하지 않고 있고,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했

을 때 합의된 회의 결과조차도 공개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많은 수의 피해자들이 이 회의 결과를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비밀주의로 계속 회의를 운영하실 것인지 아니면 회의 결과를 어떻게 공개하실 것인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 윤성규** 이 부분은 저희 행정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 아니고요 그 전문가들이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정미 위원** 장관님, 제가 그 말씀을 이전에도 한 번 들었는데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외부의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않아야 이분들이 소신껏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의된 결과는 발표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비밀주의가 오히려 역측을 낳고 오해를 낳게 됩니다. 이게 또 빨리 끝나는 일이 아니고 1, 2년에 걸쳐서 진행되는 일이기 때문에 한정 없이 사람들을 기다리게 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그래서 이분들이 최종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내놓고 설명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정미 위원** 그 최종 결과가 언제 나오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그것은 저희도 아직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간 결과라도 합의된 것들은 순차적으로 공개를 하는 것이 피해자들에 대한, 그리고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요구에 부합되는 행정부의 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앞에 많은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대기오염을 저감시키기 위해서 경유차 조기 폐차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예산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저희가 지원하기도 하고 반반씩 지원합니다.

○**이정미 위원** 예, 그런데 지자체가 지금 예산 지원이 잘 되고 있습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금년 저희 책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매칭펀드를 같이 해야 되니까 제가 볼 때는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자체 예산이 상

당히 부족하면서 실질적인 경유차 조기 폐차에 대한 지원이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경유·휘발유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를 걷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이정미 위원** 그런데 실제로 환경세의 목적에 맞는 세출로 사용되기보다는 제가 알기로는 이 세금의 80%가 SOC 확충 사업에 쓰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이 되면 이 환경세가 일몰이 되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현재로서는 2018년입니다.

○**이정미 위원** 그래서 이 세금이 이후에 개별소비세로 갈 것인지 환경에 맞는 목적세로 쓰일 것인지에 대한 판단도 또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지금의 이 환경세 목적에 맞게 쓰이지 않는 부분도 시정이 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2018년 일몰 이후에 이 세금을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한 환경부 자체 정책 방향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저희도 에너지·환경세가 가능하면 환경 쪽으로 많이 오는 것을 원하고 있고요, 현재는 15% 오고 있는데. 다만 환경 부문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기 부문만 환경이냐? 그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면 환경의 전체적으로 필요한 데에 안배해서 씁니다.

○**이정미 위원** 그런데 그 필요 안배라는 게 과도하게 SOC로 가고 있습니다. 전체의 80%가 거기 쓰인다고 하는 것은 환경세 목적에 걸맞지 않은 사용 방식이고요, 이것에 대한 환경부의 정책적 방향이 분명히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화력발전소 관련해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보면 산자부와 환경부의 전력 수요 전망이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산자부는 766TWh 그리고 환경부는 661TWh를 예측했고, 절댓값으로만 놓고 보면 105TWh의 차이가 나지요. 그리고 이 105TWh의 차이라고 하는 것은 화력발전소를 적게는 12기, 많게는 84기를 건설할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는 수치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 수치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할 것이고 그것에 맞게 화력발전소를 어떻게 건설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면밀하게 짜여야 되고, 화력발전소 하나에서 나오는 오염량 때문에 지금 대기환경이 나

빠지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지금 10개의 노후한 화력발전소를 폐쇄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지금 건설 중인 11개와 이후 건설 계획인 9개까지를 합치면 10개는 없애고 20개는 짓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10개의 발전설비 용량은 3345MW 그리고 현재 건설 중인 것은 9680MW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9개 빼고도 10개 건설 중인 화력발전소만으로도 이전에 폐쇄된 화력발전소의 6000MW가 넘는 발전량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러면 지금 화력발전소 때문에 미세먼지가 계속 심각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11개 말고도 9개를 더 지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전력 수요와 관련해서는, 환경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느 부처보다도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 있고 대책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력’ 하면 또 어느 부처보다도 산업부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제7차 할 때 저희가 의견을 냈습니다만, 이 내는 과정에서 힘을 어떻게 얻었느냐 하면 에너지경제연구원의 부원장 하다가 퇴직한 분한테 이것을 의뢰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체에 이것을 정확하게 낼 수 있는 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좀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장관님 죄송합니다. 지금의 상황은 산자부와 환경부가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상황으로 보시면 안 된다고 봅니다. 지금 미세먼지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나와 있고 이럴 때 환경부가 산자부를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정책적 방향을 수립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무엇보다 우선하는 가치라고 보기 때문에 산자부 핑계를 대실게 아니라 환경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 주시는 것이 저는 마땅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 충남화력발전소 관련해서는 서면질의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한정애** 이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부장관님께서 국무위원 중에 가장 오래 계신 거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여러 분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정애** 그러면 그만큼 대통령께서 신뢰를 하신다는 거니까 국무회의에서 정확하게 환경부의 입장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누리당의 경북 구미시를 장식춘 위원님 발언이 있으시겠습니까.

○**장식춘 위원** 시간이 5분밖에 안 돼 가지고 좀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가습기 사태에 대해서 질문 한번 드릴게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장식춘 위원** 가습기, 저는 환경부가 이 사태를 해결함에 있어서 진짜로 피해 당사자 그리고 국민 입장에서, 역지사지 입장에서 지금보다도 좀 능동적으로 접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화면을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게 아직도 인터넷상에 떠돌고 있습니다. 저게 어떻게 인터넷상에 돌고 있는지 제가 도대체 지금 이해를 못 하고 있거든요. 저 부분을 한 번 더 보시고 환경부에서 조치를 좀 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조금 전에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님 하신 말씀 중에서 보면 19대 때도 이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되었었는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기본적으로 정부는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책임이 분명히 있고요 또 그러한 입법 미비 사태는 국회도 어떻게 보면 책임을 피할 수 있는 부분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이번에 이것을 접근함에 있어서 조속한 마무리보다도 절대로 두 번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되는 그러한 쪽으로 접근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한 분의 피해자도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장관님께 그러한 부분을 좀 부탁드리고요.

오전에 제가 폐가전을 왜 이렇게 말씀드렸는가 하면, 저도 국회의원 되고 나서 알았습니다. 폐가전이 무상수거가 되는 줄 저는 몰랐습니다. 모르고 동사무소에 가서 스티커를 발부 받아 가지고, 돈 주고 사 가지고 내가 직접 들고 아파트라면 아파트의 적정한 장소에 갖다 놓는 줄 알았는데, 이게 폭발적으로 국민들의 관심사가 높고 호응도가 높은 건 저도 놀랐고요. 당연한 거였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장관님께서, 저것 한번 봐봐요.

(영상자료를 보며)

정부의 3.0 성공사례 우수상도 받았고……

장관님 모르신다고 그랬지요, 대통령상? 그러면 저는 환경부의 보고 체계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환경부장관 윤성규** 제가 3.0은 받은지 알았는데……

○**장식춘 위원** 대통령상……

○**환경부장관 윤성규** 그건 알고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식춘 위원** 다시 한 번 그런 부분을 상기시켜 드리고요.

무상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그 대상을 축소시키려는 움직임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오늘 오후 3시에도 그런 회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순번을 바꿔서 그렇게 질의를 던졌던 것이고요.

입법예고안이 왜 진짜 문제되는가, 아까 국장님이 하신 말씀이 문제성이 없다는 쪽으로 저는 이해했는데—제가 잘못 들었는지는 모르겠어요—만약에 입법예고 되어 가지고 ‘속한’이 포함되면 대기업 2개, 우리 대한민국에는 유럽이나 선진국하고 또 달라 가지고 대기업 2개 가진 회사가 거의 국내 시장을 잠식하고 있습니다. 이 공제조합이 복수화된다 그러면 여기에서 탈퇴를 한다 그러면 이 제도가 무용지물이 된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장관님이 좀 더 깊이 보고를 한번 받으서 가지고 아까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제도가 더 활성화되고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존 혜택을 누릴 수 있게끔 저는 그러한 부분에서 말씀드린 부분이기 때문에 장관님께서 시간이 한 1분 정도 남았으니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 윤성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면 세탁기다 그러면 세탁기 또는 냉장고면 냉장고 이것에 대해서 제품군으로 보는데 그것을…… 어디 가니까 이것은 타 회사 것이다 하고 또 안 받아들 수도 없는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장식춘 위원** 아니, 잠시만요. 그러니까 공제조합을 우리가 만들었던 것 아닙니까? 타사 제품도 받아 가지고, 지금 할당비율이 있잖아요. 최소한 생산업체는 그것을 채워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복수로 되어 버리면 예를 들어서 그런 업체가 여기서 탈퇴할 수 있다 이 말이지요. 그렇게 되면 이 제도가 무용지물이 되고 다시 한 번

이 된다, 옛날로. 이 폐자원이 다시 이 지역에서 환경적인 문제 요소도 되고 소비자가 자기 권리를 찾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된다는 뜻에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환경부장관 윤성규** 지금 가전제품에 대해서는 사실상 공제조합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전국에 수거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고 실제로 뭔가 클리어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제가 한 번 더 체크해 보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장석춘 위원** 그래서 보고서를 다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입법예고로 ‘속한’을 포함하신다 그러면 장관님 책임지는 선에서 한번 해보세요. 저는 그러한 부분에서 환경부가 잘못된 시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저한테 답변서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정애** 장석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의 송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주 위원**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환경기준이 WHO 수준과 선진국에 비해서 매우 낮습니다. 이에 대해서 상향 조치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환경부장관께서는 시간 두고 천천히 하겠다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은 기다릴 수가 없고 매우 불안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전에 장관께서 답변을 하실 때 우리나라 미세먼지 환경기준과 관련해서 PM₁₀ 대신 PM_{2.5}를 기준으로 치중을 해서 환경기준을 좀 강화하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PM₁₀보다는 앞으로는 정책의 중점을 PM_{2.5}로 가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PM_{2.5}의 정책목표가 지금 연평균 25 $\mu\text{g}/\text{m}^3$ 인데 그것을 달성해 가는 상황을 봐서 차기 목표로 어떤 것을 할 것인지 이런 것을 설정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송옥주 위원** PM_{2.5}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려면 저희가 측정망이나 발생원과 관련된 파악이 잘 되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현재

PM_{2.5}를 집중적으로 측정하는 측정망이 전국에 35개소에 불과합니다. 맞습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그렇지 않고요. 전국에 지금 152개소가 있습니다, PM_{2.5} 측정망이. 152개소가 있고 시·군 단위로 없는 데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 287개소까지 2018년까지 증설을 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송옥주 위원** 152개소는 PM₁₀까지 포함한 측정소가 아닌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PM_{2.5}를 측정하는 측정소입니다. 그러니까 PM₁₀도 아마 측정할 것이고 PM_{2.5}도 측정하고 그럴 겁니다.

○**송옥주 위원** PM_{2.5}만 특화해서 하는 부분은 35개소로 알고 있고요. 국내 초미세먼지 구성 성분을 실시간으로 분석할 수 있는 측정소는 6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6개는 실시간으로 하는 게 하나 개념이 있고 미세먼지의 조성, 어떤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느냐 이런 것을 분석하는 것인데 6개만 해도 우리나라에서는 상당히 많은 겁니다. 미국도 6개가 안 됩니다.

○**송옥주 위원** 미세먼지를 제거하려면 발생원을 신속하게 파악해 원천 차단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PM_{2.5} 측정망과 대기오염 집중 측정망을 빠른 시일 내에 확충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떤 생각입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그것은 2018년까지 전국에 287개소의 PM_{2.5} 측정소를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송옥주 위원** 지금 환경부의 업무보고 자료 46페이지를 보면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PM_{2.5}에 대한 집중측정망에 대한 얘기로 35개소가 맞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부장관 윤성규** 그런데 거기에 보시면 도시대기라고 해서 262개소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PM_{2.5} 측정망이 설치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합하면 152개소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35개는 PM_{2.5}만을 측정하는 목표로 설치한 데가 35개이고, 그 측정기가 설치된 지역이 도시대기 지역에도 많이 있습니다.

○**송옥주 위원**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대기환경기준 강화가 즉시 어떤 규제나 의무사항을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환경기준 강화로 인해 국민 건강 기여 등 사회적 편익이 관리비용보다 훨씬 클 것으로 추정됩니다. 미세먼지에 대

한 우리나라의 환경정책도 선진국처럼 환경성 질환을 예방하는 건강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봅니다. 현행 대기환경기준도 이러한 방향에서 향후 지속적으로 검토되고 개선되어야 합니다.

맑은 공기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 지금 대기환경기준 강화에 대한 즉각적인 연구에 착수할 것을 요청드리는데 환경부장관께서는 어떤 계획이십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저희들은 환경기준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연구를 하고 또 그것을 환류해서 환경정책기본법을 개정하고 이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주기가 되면 틀림없이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옥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정애** 송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창현 위원**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고생 많으십니다.

환경부가 자주 부딪히는 개별 부처 중 하나가 산업자원부인데요. 밀릴 때마다 환경부 힘이 없어서 밀린다고 자조하는 모습 볼 때 참 저도 답답하고 그렇거든요. 정말 그렇습니까? 힘이 없어서 밀리나요, 장관님?

○**환경부장관 윤성규** 위원님 환경문제는 5년, 10년을 앞뒤서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경부나 소수 나머지 분들은 느끼질 못하다 보니까 저항이 큰 겁니다.

○**신창현 위원** 됐습니다, 장관님.

환경부가 생활화학용품 안전관리 종합계획에 따라서 접착제 원료물질의 위해성평가를 실시하고 그중에 3개 제품이 나왔는데 대흥화학공업 접착제 같은 경우에 톨루엔—독성물질이지요—함량이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왜냐하면 이때는 2014년이라 산자부가 제품을 관리할 때입니다. 기준치 1000ppm을 12배나 초과하는 1만 2000ppm이 나왔었던데요. 나머지 2개 업체 한국쓰리엠과 아모스 접착제는 기준치 1000인데 각각 1867ppm, 1634ppm 나왔습니다. 이 톨루엔은 고농도 또는 장기 노출일 경우에 심장부정맥이나 신장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서 환경부가 화학물질관리법으로 지정한 유독물질이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환경부 2014년 8월 1일자 공문, 이 공문입니다. 이 기준치 적발 사실을 산업자원부 국가기술표

준원에 통지하면서 국민 건강과 환경 보호를 위해서 위반한 제품 3개에 대해서 적법 조치를 취하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공문으로.

이 공문을 받은 산자부 기술표준원이 다시 시험을 해 봐야겠다, 환경부 시험 결과가 맞나 안 맞나.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과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두 군데 의뢰해서 재시험을 했습니다. 하니까 대흥화학공업, 한국쓰리엠, 아모스 제품에서 각각 평균 5ppm, 255ppm, 368ppm으로 환경부 시험 내용과는 정말 하늘과 땅처럼 큰 차이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 결과를 산업자원부 2014년 10월 24일자 공문으로 환경부에 통보를 했어요. 재시험해 보니까 아무 문제 없다, 행정조치할 필요 없다.

장관님, 이 공문 받고 어떤 조치 하셨나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저도 알아보니까 당시에 환경부는 리트머스 시험지처럼 간이실험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실험 결과를 보냈는데 아마 산업부에서는 그것을 정밀조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밀조사의 결과를 존중하는 것으로 우리가 마무리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창현 위원** 결국 환경부는 엉터리이고 산업부의 시험 결과를 인정했다는 것 아닙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간이실험의 한계인데 그 부분은 저희가 간이실험 하고 보낸 것은 이미 알고 보낸 것이기 때문에 졌다 이겼다라고 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신창현 위원** 장관님, 단적인 예예요. 저기는 정밀조사해서 환경부하고 부처 협의 때 논리 무장하고 나오는데 환경부는 리트머스 간이시험 가지고 가서 산자부하고 얘기하니까 뭐가 되겠어요? 언제 한번 시원하게 논리로 산자부를 눌러 보겠습니까?

우리 환경부 공무원들 각성하세요. 힘이 없어서 밀린다는 얘기 더 이상 하지 마세요. 과학은 과학으로 대응해야지요. 환경부, 시험으로 시작해서 시험으로 끝나잖아요. 리트머스 시험지 간이시험해 가지고서 산자부에다 공문 보내서 적법 조치하라, 업자들한테는 죽느냐 사느냐가 달린 그런 중대한 문제를 간이시험해 가지고 타 부처에다 적법 조치하라고 하는 게, 국민들이 이 사실 알면 얼마나 난감하겠어요? 환경부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지.

장관님, 이거 좋은 기회예요. 우리 환경부가 더 무장할 수 있도록 장관님 정신교육 한번 하세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앞으로는 간이시험은 내부적으로만 쓰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신창현 위원** 꼭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산자부하고 가서 산자부의 조사 결과보다 더 정밀조사해 가지고 데이터 제시하면서 산자부 설득하는 모습 좀 보여 주세요.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한정애** 신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의 신보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보라 위원** 새누리당 신보라 위원입니다.

아까 오전 질의에 추가해서 여쭙 보고 싶은데요. 전국 8개 병원을 조사기관으로 추가해서 금년 4/4분기에 착수를 해야 된다고 보자면 협의가 좀 원활하고 빠르게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관련한 지방 병원과 협의되고 있는 과정과 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위해우려제품 15종에 대해서 기업과 안전관리협약을 체결하겠다고 하는 내용도 발표를 하셨는데요. 그러면 안전관리협약에 주요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그것은 지난번에 보도자료 나온 것과 아마 그거 관련이 있을 텐데 전수조사와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25일까지 자기들이 제품에 들어있는 화학물질 리스트를 저희한테 제출하기로 되어 있는데 아마 그게 25일이 지난 토요일인가 그럴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출해 오면 그거 가지고 어떤 것이 살생 문제인가, 위해성이 있는 것인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식별해 가지고 위해성평가 이런 것을 거쳐 가지고 기업들하고 위해성이 없도록 하는 이런 노력을 해 나갈 겁니다.

○**신보라 위원** 일각에서는 전수조사할 때 기업들이 그러한 제품의 성분 분석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신뢰성 있는 조사가 가능할 것이냐 의문을 갖고 있던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저희들이 제출을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이 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협약을 체결한 업체들 빼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한 5600개 기업이 되는데 여기는 6월 말까지 그 리스트를 제출하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신보라 위원**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그것은 아마 벌칙이 있을 것으로 제가 아는데 벌칙이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명령권이 있기 때문에……

○**신보라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 같이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화평법도 제정이 됐고 화학물질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많이 대두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생태독성이나 유해성 평가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대두가 되고 있는 데요.

장관님께서서는 그러면 환경부에서 진행하는 청년지원 프로그램 중에 생태독성과 유해성을 평가하는 전문인력 양성사업이 있다는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알고 있습니다.

○**신보라 위원** 혹시 그 내용에 대해서도 알고 계십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금년 같은 경우에는 3억 42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한 30명 양성하는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현재 13명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신보라 위원** 이제 수요들이 굉장히 더 많아질 거기 때문에 미래를 내다보고 그런 청년 전문인력들을 양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사실상 이 제도가 시행된 지금까지 한 3년 동안 오히려 예산은 보다 더 삭감이 됐었던 거고요. 오히려 중요성은 날로 더 높아지고 있는데 예산이 삭감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그쪽 사업은 예산 효율성을 기하면서, 다시 말하면 한 번 처음에 할 때는 많이 들어갔는데 그다음부터는 조금씩 줄여도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었거든요.

또 다른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한 8억 원 들여 가지고 환경유해성 시험기반구축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하고 있는데 거기도 금년에 60명 이상을 여기에 참여시켜 가지고 사실상 인력 양성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신보라 위원** 관련 제도들도 나오고 이제 법률도 나왔기 때문에 이런 미래를 내다보고 하는 투자와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것들을 또 관리감독할 수 있는 전문인력들이 함께 양성되어야만 보완할 수 있는 것 같으니까요, 관련 예산들을 보다 더 잘 살펴보고 그런 전문인력들이 양성될 수 있는 내용들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신보라 위원**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정애** 신보라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대구 달서구병의 새누리당 조원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진 위원** 시작하기 전에 파워포인트 한번 올려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국책사업 중에서 지역갈등이 가장 많은 남부권 신공항, 영남권 신공항 이번에 ADPi에서 발표한 내용인데 국토부 관계자, 장관이겠지요. 콜럼버스의 달걀이라고 얘기하는데 콜럼버스의 달걀이 뭘니까? 인식의 전환입니까? 인식의 전환이 아니고, 한번 보시겠습니까?

2009년도 부산하고 국토부에서, 저 빨간 게 지금 새로운 확장안입니다. 2009년도에 벌써 부산하고 국토부 용역안에 거의 비슷한 확장안을 용역을 했어요. 2012년도 한국공항공사 용역안도 거의 비슷한 안을 용역을 해서 결과는 뭐냐?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결과는 소음 문제 때문에 도저히 안 된다는 거예요. 소음권에 35만 명이 들어간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갑자기 방향만 약 몇 도 돌려 가지고 소음 문제가 없다고 발표해 버렸어요.

이번에 소음 문제 관련해서 ADPi에서 우리 환경부 쪽에다가 한 번이라도 질의 같은 것 해 본 적 있습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저희한테 요청한 것은 아직 제가 보고를 못 받았는데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원진 위원** 환경 주무기관하고 12년 동안 여섯 군데에서 용역을 했는데 소음 문제 때문에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안이 콜럼버스의 달걀 발상으로 갑자기 저렇게 신활주로를 약 5도 가까이 더 튕니다. 그래 가지고 소음 문제 없다고 얘기해요.

활주로가, 기존 활주로하고 신활주로가 남풍이

불 때하고 북풍이 불 때하고 이착륙 장소가 달라져요. 그건 아십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알고 있습니다.

○**조원진 위원** 이착륙 장소가 달라지는 겁니다. 남풍이 불 때는 이착륙을……

○**환경부장관 윤성규** 옆으로……

○**조원진 위원** 옆으로 하고 북풍이 불 때는 그러면……

비행기가 하루에, 1년에 한 2900만 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2900만 대? 지금 현재 1500만 대, 그다음에는 두 배가 늘어나지요, 두 배. 2900만 대 비행기가 왔다 갔다 하는데 군사 비행기까지, 북풍 불 때, 남풍 불 때 이착륙 장소가 달라지고 소음권이 그대로 있는 걸 지금 발표를 해서 이것 확장안이 아주 어디 대단한 확장안같이 발표를 해 버렸어요.

하나하나 검증해 볼게요. 환경부에서도 이 소음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관심 가지고 좀 해 달라……

지금 현재 소음 문제 때문에 국민들이 잘 모르지만 24시간 중에 7시간을 비행기가 못 뜹니다, 밤 11시부터 아침 6시까지. 그래서 현재 상황은 아침 6시부터 6시 반까지 비행기 열두 대가 막 내려요. 수화물 찾는 데 한 1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현재 상황이. 이 활주로 하나 더 해 가지고 터미널 더 놓는다는데 별로 개선되지 않을 것 같아요.

현재도 판치 지역은 84웨클입니다. 저렇게 2900만 대 비행기가 배로 이착륙을 하면 판치 지역은 이주를 해야 됩니다. 90웨클 이상이 되면 이주대책을 세워 이주를 시켜 줘야 됩니다.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지금?

그다음에 인구가 50만 명이 넘는 김해시, 그다음 장면 넘겨 보세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왼쪽이 김해시가지고 오른쪽이 부산시가지고 지금 에코델타시티가 3만 명 신규 입주하고 명지국제신도시가 9800억을 투자해서 192만㎡의 개발을 합니다. 지금 저 빨간 선이 새로운 활주로입니다. 부산시가지 위를 다녀요, 김해시가지 위도. 김해가 50만 명이에요.

김포공항이 강서구에 있지만 주변의 공항 소음 문제 때문에 이게 계속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음권이 15km에서 20km까지 늘렸어요. 지금 저 빨간 동그라미 쳐놓은 건 7km밖에 안 되는 겁니다.

1년에 2900만 대, 3000만 대 정도의 이착륙을 하는 비행장이 15km가 아니고 그 반 7km를 만들었는데도 부산과 김해시가지를 통과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문제점만 얘기할 테니까 환경부에서 해야 될 일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김해공항이, 지금 2016년도에 현재 소음 문제 때문에 김해공항이 보상 내지는 지원사업을 56억 하고 있습니다, 매년. 56억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하고 있습니다. 권이 훨씬 늘어나겠지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사항을 제시해 드렸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지고 환경부가 해야 될 일, 소음 문제 때문에 도저히 이게 가능한 얘기인지, 새로운 콜럼버스의 달걀안이 조금만 튼 그런 비행기 확장안을 가지고 과연 소음권에서 이걸 이탈할 수 있는 건지,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12년 동안 정부 용역기관 최고의 전문가들이, 외국 용역까지 붙여 가지고 여섯 번의 용역을 했는데 도저히 소음 문제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결론 난 사항이에요. 이걸 정부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여당 의원인 제가, 소위 말하는 친박이라는 의원이 이걸 가능하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건지, 양심을 속이고 또 그 얘기를 해야 됩니까? 환경부에서 이 문제에 대한 양심적인 발표가 필요한 거예요.

○위원장대리 한정애 장관님, 이것에 대해서 향후 조사를 좀 해 보시고……

○조원진 위원 장관님이 내용을 모르는데 어떻게 이 얘기를 합니까, 내용 자체를 모르는데?

○환경부장관 윤성규 제가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장대리 한정애 아니, 이제 앞으로 이 사항을 검토하셔서 어쨌든 문제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시해 주셔야 되는 거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앞으로 하는 과정에서 저희한테 협의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안에 준비를 하고 협의에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한정애 조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산 해운대갑 새누리당 하태경 간사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河泰慶 위원 장관님, 아까 가슴기살균제가 폐는 지금 확인이 된 거잖아요. 섬유화가 됐다고 해서 기업 쪽에서도 배상을 하고 그런데 이게 다른 장기, 심장이나 간이나 이런 쪽은 아직 결과가 안 나온 거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그 부분은 인과관계가 전문가 그룹에서 아직 특정이 안 됐고……

○河泰慶 위원 명확히 안 나온 거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그러다 보니까 판정기준도 아직 안 나왔습니다.

○河泰慶 위원 그런데 이게 원리적으로 보면 폐가 그렇게 됐으면 피가 어쨌든 폐를 통해서 온몸을 다 도는데 그 피 안으로, 이게 어느 정도 축적이 되면 피 안으로 들어갈 거고 그러면 심장으로도 갈 거고 다 갈 것 같아요. 일반 국민 평균적인 의학 상식으로는 갈 것 같은데 문제는 그게 어느 정도 확인되는 양이 양으로 확인되느냐 안 되느냐 이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3등급·4등급 이런 분들은 계속 체험적으로 그분들이 관계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앞으로도 나올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후유증이지요. 앞으로도 계속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전담하는 어떤 연구센터 같은게 저는 필요할 것 같아요. 현재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지금 그 센터는 저희들이 서울아산병원에 가슴기살균제센터를 하나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지원하고 관리, 거기에서도 연구를 해 나가고 있는데요. 그건 그쪽에서 하는 부분이고 이것에 대해서 판단은 여러 전문가들이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폐이외의 장기조사 특별위원회인가 이렇게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바쁘신 분들이 자주 회의를 갖고 지금 속도감 있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자료가 충분하게 확보가 돼야 자기들로서도 결론을 내니까 좀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河泰慶 위원 그러니까 가슴기가 800만 개가 시중에 나왔다면서요, 제품이. 그렇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860만 개 아니면 연간 60만 개씩 판매했다 이런 통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河泰慶 위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계속 관찰을 해야 된다, 관찰을 하고 연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회 형태는 연구하는 조직이라기보다
와서 그냥 토의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그 피해자
들을 위해서, 피해자들을 정부가 계속적으로 관
리한다는 그런 걸 보여 주는 게 저는 지금 필요
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검토 좀 해 주셨
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번에 새로 조사해서 가습기살균제
문제가 터지면서 2016년 5월에 위해우려제품이라
고 해서 7개 회수명령이 있었네요, 7개 제품?

○**환경부장관 윤성규** 그 물질을 초과해서 함유
하고 있어 가지고……

○**河泰慶 위원** 안전기준 초과한 거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기준 초과해서 했습니
다.

○**河泰慶 위원** 그런데 이 7개 제품 회수명령을
했지만 이건 현재 가정에서 쓰고 있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국민들이?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河泰慶 위원** 쓰고 있는 것도 있고 그런데 국
민들이 안전기준을 초과했다, 위험하다라는 걸
빨리 알아야 되는데 언론에서 계속 나올 수는 없
는 것이고 환경부 사이트에서 이게 검색이 안 됩
니다. 제가 우리 직원 시켜 가지고 이것 어디서
찾을 수 있냐, 찾아보라고 그랬는데 못 찾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결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한정에 간사, 홍영표 위원장과 사회교대)

생활환경 안전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면서
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河泰慶 위원** 그런데 여기서도 7개 제품 검색
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특히 스마
트폰을 많이 쓰는데 스마트폰에서도 검색이 안
됩니다. 환경부 사이트 자체가 스마트폰 앱에 최
적화도 안 돼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 문제를,
어쨌든 국민이 편하게 지금 행정을 안 하고 있다
하는 게 확인이 된 거기 때문에 대책을 세워 주
시고요.

마지막으로 간단한 문제인데 빈 병 보증금을
거의 2.5배, 3.5배 올렸더라고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河泰慶 위원** 그래서 이걸 2년인가요, 2년 만
에…… 현재 수거율이 몇 %지요? 이십몇 % 됩
니까? 이걸 칠십몇 %로 올린다고……

○**환경부장관 윤성규** 24%입니다.

○**河泰慶 위원** 24%인데 2년 만에 칠십몇 %로
올리는 거예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河泰慶 위원** 그런데 그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실현이 안 되면 다시 무효화시킨다고 하는 게 환
경부 방침 맞습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그렇
게 통과되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70% 이상으로
올려라.

○**河泰慶 위원** 그러면 70% 안 되면 다시 원점
으로 돌아갈 겁니까? 보증금 인하할 겁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그렇게 안 되도록 저희들
이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할 겁니다.

○**河泰慶 위원** 아니, 그러니까 너무 대책이 리
스크가 크다는 거지요. 정부 정책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이런 식의 도박 같은 정책을 써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왜 이런……

○**환경부장관 윤성규** 이게 효율이 정해진 지가
한 십몇 년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껌 값
도 안 되는 정도의 효율이 있었다 보니까 과거에
그렇게 낮았고요. 그다음에 도매상, 소매상에 주
는 수고비도 그러다 보니까 아주 낮게 책정이 되
고 이래서 저희가 이것을 제조 원가의 80~90%
로 올린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회수가 많이
되면 그것에 따라서 주류업체가 병을 덜 만드니
까 그 이익분도 차후에 또 수수료로 주도록 이렇
게 해 놔서……

○**河泰慶 위원** 그러니까 그건 이해를 하는데
70% 목표치가 안 되면 원래 보증금을 깎아야 되
는데 그러면 고물상 업체가 또 난리가 날 텐데
그런 부분 대책이 없는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저희들이 내년 1월 1일부터
이게 시행이기 때문에 그 안에 충분히 단도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河泰慶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영표** 하태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마지막 순서로 한정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정에 위원** 환경부장관님, 아까 제가 처음
했던 질의 중에서 화평법이 지금 완벽하지 않은

법안이고 그리고 그 화평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산업계, 전경련을 비롯한 산업계의 여러 가지 요구 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 제정 그리고 시행령, 시행규칙을 만드는 과정에서 산업계의 요구가 무엇이었는지, 그 협의한 과정들을 그리고 어떻게 반영이 되었는지—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이것을 세부적으로 정리를 해서 저희 위원회에다가 별도로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바이오사이드와 관련된 문제, 살균제에 해당되는 이 유해물질들은 화평법으로도 관리가 안 될 수 있는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떤 방식으로 그럼 관리를 할 것인지, 제도적으로 어떤 방식의 보완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자체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저희 위원회에다가 또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준비되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애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라고 하지만 사실은 가습기살균제 폐섬유화 질환 피해자입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만 사실은 등급을 매기고 거기에 대해서만 보상이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계속 장관께서도 말씀하시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 필요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으려고 하니 동물실험, 이런 거 저런 걸 통해서 나온 자료가 아직 불충분하다 이렇게 하시는데, 사실은 독성실험을 통해서도 이미 자료들이 좀 확보된 것들이 있습니다.

전 자꾸 동물실험에 의존하는 거에 대해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정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페스트의 경우에 쥐는 멸종하지만 사람은 페스트 그 균에 의해서 죽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왜 생쥐실험을 통해서 나온 자료를 가지고만 활용을 하려고 하느냐……

그게 아니라 저는 환경부부터 먼저, 요즘은 체세포 배양 통해서도 실험 많이 하지 않습니까? 간세포·폐세포 이런 식으로 체세포 배양을 통해서 사실 독성실험을 하고,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가 검증이 된다고 하면 그것을 활용해서 그 판정위원회에다가 제공을 하고, 실질적으로 이 가습기살균제 폐섬유화 피해자가 아니라 가습

기살균제 피해자에 다 포함이 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환경부장관 윤성규** 그런데 저희는 하나도 가이드라인을 준 곳이 없습니다. 그분들이 스스로 지금, 캄캄한 밤을 지금 그분들이 가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자기들이 뭐 확신을 못 하는 것이고 대안을 못 내는 거지 저희가 ‘이것만 해 주세요’ ‘저것만 해 주세요’ 주문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한정애 위원** 그분들이 가질 수 있는 자료는 역학조사를 통해서, 지금 쪽 모니터링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자료가 하나가 있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 동물실험을 통해서 받는 자료를 가지고 어쨌든 하는데 역학조사를 통해서, 모니터링을 통해서 나오는 자료는 어느 정도 확보가 됩니다. 지금 벌써 몇 년이 됐으니까요. 확보가 되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독성실험이나 동물실험을 통해서 나오는 자료들이 같이 좀 매치가 되면 좋겠다고 하는 것 때문에 확신을 못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실험과 관련되어서 독성실험을 한 내용들, 그러니까 단순히 동물실험을 통해서만 한 것이 아니라 체세포 배양이든 별도로 실험을 통해서 나온 자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좀 충분하게 제공을 해 주시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피해자로서 제대로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저희는 전문가분들이 지금 하겠다고 하거나 그분들이 내린 결정은 100% 저희들이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정애 위원** 제가 조금 우려의 말씀을 드리자라고 하면 CMIT·MIT의 경우에는 대기업이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대한민국에 청탁문화라고 하는 게 너무나 광범위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사실은 판정위원회건 심의위원회건 어딘가에 가 있는 분들이 다 이래저래 따지면 어디어딘가에 연결이 안 되시는 분들이 없을 겁니다. 그런 분들에게 조금 더 객관적인 이러저러한 자료들을 제공해 줄 역할은 정부가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환경부장관 윤성규** 그러니까 저희가……

○**한정애 위원** 이러저러한 독성자료가 있으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저희가 드릴 수 있는 자

료……

○**한정애 위원** 이것들이, 이것들이 심의위원들이 판정을 하는 데 포함되어서 판정을 하도록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얘기들이 들어가야 되고 그것을 어느 위원이 거부하는지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기록으로 남겨 주셔야 되고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저희들이 드릴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안 드릴 이유가 없습니다. 또 저희가 드린다 하더라도 그분들이 볼 때 아, 이것은 정확한 게 아니라고 그러면 그분들이 채택을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뭐 어떤 자료를 숨기고 안 주고 이럴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한정애 위원** 모르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4대강 하고 할 때 워낙 정부가 뭘 많이 숨겨서, 제대로 다 제공을 해 주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환경과학원이든……

○**환경부장관 윤성규** 지금……

○**한정애 위원** 영남대학이든 여러여러, 이러저러한 학교들에서, 지금 이 가슴기살균제 관련해서 워낙 피해가 크기 때문에 사실은 학계에서 굉장히 많은 실험과 독성실험들을 했습니다. 그 자료들을 다 수집해서 객관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게끔 제대로 제공은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환경부장관 윤성규** 거기에 이제, 공동위원장 제인데요. 한 분은 피해자들이 추천한 위원장이 지금 공동위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저희들이 뭘 어떻게 인위적인 내용을 하겠습니까.

○**한정애 위원** 폐가 아닌 부분, 폐가 아닌 부분과 또는 뭐 CMIT·MIT와 관련된 부분 이런 것들이 포함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그러니까 그런 아무런 제한 없이 지금 그분들한테 전권을 주고 그분들이 필요하다는 건 다 서포트하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정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결과가 나오는 대로 좀 공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중간 중간이라도.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그분들이 이제 준비가 되면 이렇게 공유하겠다고 했으니까 공유가 될

겁니다.

○**위원장 홍영표** 이상으로 환경부와 기상청에 대한 업무보고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삼화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요!

○**위원장 홍영표** 김삼화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김삼화 위원** 아까 오전의 자료 요청과 관련해서 두 가지만 요청을 하겠습니다.

한국쓰리엠이 제공한 공기청정기 필터에서 유해물질인 OIT가 검출돼서 환경부가 검사를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요. 그 쓰리엠을 통해서 OIT 물질이 포함된 필터가 시중에 어느 정도 유통되고 있는지 각 업체별 유통량 자료를 내일까지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지난 2014년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경북 봉화군 석포면에 있는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한 환경오염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2년이 지났는데 사법 당국의 솜방망이 처벌 그리고 관련 기관의 책임 떠넘기기 이런 거 때문에 시급한 산림 복구, 토양오염 정화, 환경조사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하는 그 언론보도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 관련해서 석포제련소 부사장이 전직 대구지방환경청장이다 이런 보도도 있었고요.

본 위원이 6월 8일 날 환경부 퇴직공무원들 채용 현황자료를 보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아직까지 안 오고 있거든요. 그것도 같이 내일까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영표** 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는 성실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치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20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첫 번째 상임위를 했습니다. 현안에 대한 질의가 주로 많았습니다마는 특히 저는 우리 환경부가 정부부처 내에서도 가지고 있는 독특한 위상과 정체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어떤 산업의 논리 또 성장의 논리 때문에 우리 환경부가 일해 나가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환경부는 부처가 생긴 이후로 우리나라의 어떤 환경보전이나 또 국민의 생명과 건강, 안전을 위해서 사실 그런 어떤 가치의 문제를 가지고 많은 노력을 해왔고 많은 성과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환경부가 힘없는 부서, 다른 부서에서 어떤 산업의 논리나 성장의 논리로 말을 하면 그것에 대해서 말도 못 하는 이런 부처로 되지 않았나 하는 우려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가슴기살균제 문제도 사실 뭐 정부로서 또 특히 환경부로서는 어느 부처보다도, 다른 부처들이 전부 다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도망갈 때 그래도 정면에서 나서서 이 문제를 가족들하고 좀 수습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노력을 했던 부처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큰 책임이 있다고 하는 그런 부처들은 그냥 다 뒤로 숨어 버리고.

제가 그것을 잘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이, 국민들이 볼 때는 도대체 이 가슴기살균제 문제 같은 게 어떻게 생길 수 있느냐 하는 이 분노에 대해서 저는 정부가 겸허한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데서 우리 환경부가 좀 더 적극적인 태도로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아무튼 지금 기후변화나 여러 가지, 저희 환경보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과제들이 있습니다마는 적어도 우리가 지속가능한 나라를 생각한다면 적어도 환경부가 목소리를 제대로 내야 된다는 것을 저는 우리 이 환경노동위에 계시는 모든 여야 위원님들이 다 공감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잘 뒷받침할 테니까 환경부가 우리 미래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은 좀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 장관님을 비롯한 청장님 그리고 많은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하기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위해서 잠시 저희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고 4시에 다시 회의를 소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영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부 및 기상청 산하 10개 공공기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방식은 오전과 동일하게 10개 기관에 대한 보고가 모두 끝난 후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10개 공공기관에서 보고를 하실 게 굉장히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한 기관당 5분을 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인사말씀을 생략해도 됩니다. 인사말씀은 생략하시고, 간단하게 해 주시고 중요 사업에 대해서만 5분을 넘지 않도록, 저희 위원들은 시간이 되면 마이크가 꺼지는데 정부 측 마이크는 안 꺼지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5분 내에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소개 후에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이시진** 존경하는 홍영표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0대 국회 첫 임시회에서 저희 한국환경공단의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는 시간을 갖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공단은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따라서 지난 2010년 1월에 한국환경자원공사와 환경관리공단이 통합 출범한 종합 환경서비스기관으로서 세계 최고 수준의 환경 전문기관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출범 7년차를 맞은 저희 공단은 기후대기, 물환경, 자원순환, 환경보건 등 환경 전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을 선도하고 국민생활과 밀접한 환경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저희 공단은 자연과 인간을 위한 녹색환경 창조기관이라는 비전하에 전 임직원이 혼연일체로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희 공단은 대기·수질 등 환경측정망을 설치·운영하고 기후변화 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폐기물의 발생 억제와 각종 환경정책의 지원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조직은 본사 5개 본부와 6개의 지역 본부를 두고 있으며, 정원은 2059명으로 박사 97명, 기술사 104명, 석사 480명 등 전문기술인력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공단의 예산 규모는 1조 2000억

으로 재무구조의 건전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의 집행·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공단이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환경모니터링 품질 제고입니다.

대기오염 측정망과 굴뚝 원격감시체계 운영으로 대기환경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 및 도로 재비산먼지 이동측정 시스템을 확대·운영하여 선진국 수준의 수도권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수질 자동측정망과 수질 원격감시체계 운영으로 수질오염 모니터링을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환경시설 설치·운영 최적화와 환경에너지 기반 확대입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한 도시침수 예방사업 등 안전한 하수도 구축과 지방상수도 현대화 추진, 국가상수도 정보센터 구축·운영 등 다양한 사업 모델을 통하여 물산업 전문기관으로 도약하고, 폐자원 및 신재생에너지 활용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셋째, 기후변화 대응 역량 강화입니다.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온실가스 관리 인프라 구축 및 탄소포인트제 참여기구 확대 등 기후변화 대응 대국민 실천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자원순환 관리체계 선진화입니다.

올바로시스템과 RFID 기반 폐기물관리시스템 운영 고도화로 폐기물 관리체계를 선진화하고 환경정보장제 대상 품목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사업장폐기물 감량화 제도 운영 내실화를 통해서 사업장폐기물의 원천적 감량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섯째, 환경보건 서비스 강화 및 환경분야 신성장 사업 육성입니다.

유해화학물질의 안전관리와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상담 서비스, 실내라돈 무료측정·컨설팅 등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환경보건 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글로벌 환경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서 사업초기 단계인 업체와의 공공-민간 환경파트너십을 구축하여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지난해 국회에서 많은 도움을 주셔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환경오염피해구제법 및 환경오염시

설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이 제정되어서 환경 전문 심사업무와 환경 안전관리 실태평가 및 사후환경영향평가 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새로이 수행되는 업무에 차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공단은 국민이 요구하는 높은 수준의 환경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한국환경공단의 상임이사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형신 상임감사입니다.

강만옥 경영지원본부장입니다.

신동석 기후대기본부장입니다.

강종철 물환경본부장입니다.

박응열 자원순환본부장입니다.

끝으로 권영석 환경시설본부장입니다.

(임원 인사)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홍영표** 이시진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5분을 드린다고 했더니 원래 3분으로 기관에 통보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3분으로 맞춰 주십시오. 10개 기관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감안해서 해 주십시오.

다음은 국립공원관리공단 박보환 이사장님.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박보환** 존경하는 환경노동위원회 홍영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만나 뵙고 업무보고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희 공단은 공원관리 전문기관으로서 우리나라 자연환경의 핵심 지역인 국립공원을 보전하고 국립공원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기대 수준을 반영하여 생태계 다양성을 높이면서 자연이 주는 혜택을 모든 국민이 쾌적하고 또 안전하게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공단 임직원은 자연보전의 핵심, 생태복지의 선도기관이라는 비전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금년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태계 건강성 증진입니다.

국립공원 생태계 서식지 안정화를 위해 단절되

거나 훼손된 생태축을 연결·복원하여 야생생물 서식지의 건강성을 증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지리산 반달가슴곰이 8년 연속 야생 출산에 성공하였고, 멸종 위기에 처한 풍란과 칠보치마를 자체 증식해서 자생지 내 복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양생물종 보전을 위해서 서식지를 조사하고 해조류를 복원하겠습니다.

300t급 해양연구 선박을 금년 내에 건조하여 해상·해안 국립공원의 관리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과학적인 공원 관리를 위해 가야산과 소백산 국립공원의 자연자원을 조사하고, 내부 직원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국립공원 생태계 조사단을 계속 운영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생태복지 제공으로 국민행복에 기여하겠습니다.

힐링 콘서트나 또는 찾아가는 사진전시회와 같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원별 대표 문화 콘텐츠를 발굴하여 문화가 있는 국립공원을 조성하겠습니다.

탐방객 급증으로 인해 훼손이 우려되거나 안전사고 위험이 큰 5개 지역의 탐방예약제를 시범 추진하고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생태관광 등 탐방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국립공원 체험기회를 확대하고 청소년들이 자연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진 인재로 성장하도록 미래세대 환경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캠핑수요 증가와 힐링문화 확산에 맞춰 맞춤형 야영장 등 탐방인프라를 확충하고 대피소 이용편의 개선, 그리고 무장애 탐방로 조성을 통해서 탐방편의 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국립공원을 조성하겠습니다.

국립공원을 방문하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재난 취약지구와 노후 재난 예·경보 시설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국립공원 위험성 관리제도를 도입해서 위험요인을 진단하고 위험등급을 선정하여 그에 따른 관리와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대국민 재난·안전사고 예방 홍보를 위해서 교통방송과 협업하여 각종 사고에 대한 예방과 대처요령을 국민에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탐방객이 위험지역을 지나갈 경우 스마트폰으로 안전정보를 자동으로 전송해 주는 사물

인터넷 기반의 재난·안전정보 알림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넷째로는 앞서가는 관리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지역사회 협력을 위해 국립공원 명품마을을 추가로 조성하고 자립경영 기반 구축을 통해 주민 스스로가 국립공원의 자연자원을 보전하여 국립공원의 가치를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국립공원 시민대학을 확대 운영하고 공원별 특산물 브랜드를 개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홍영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저희 공단은 건강한 국립공원, 행복한 국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참석한 공단 임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진화 상임감사입니다.

최운규 경영기획이사입니다.

김상배 자원보전이사입니다.

끝으로 정정국 탐방관리이사입니다.

(임원 인사)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영표 박보환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은 별지로 되어 있는 업무보고를 참고하시면 더 소상하게 업무를 파악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환경산업기술원 김용주 원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김용주 존경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홍영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는 시간을 갖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제2차 공공기관 선진화방안에 따라서 환경 R&D를 담당하던 환경기술진흥원과 환경마크 업무를 담당하던 친환경상품진흥원이 통합되어서 2009년 4월에 설립되었습니다.

환경기술 개발과 환경산업 육성 그리고 친환경생활 확산을 통한 지속가능한 국가 발전에 기여

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지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 및 국제사회의 환경 위상 제고를 위한 다양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서 국민들이 체감하는 환경기술 개발, 중소기업 해외시장 진출 확대, 환경보건 안전기반 구축, 친환경 생활 활성화 등의 성과를 거두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술원은 2본부 7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임원 3명, 정규직 219명 등 총 32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 규모는 4270억 원이고 그중에서 R&D 사업이 1944억 원이고 환경정책 용자가 1155억 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술원에서 중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수요자 중심 환경기술 개발 및 성과 창출입니다.

제21차 파리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대두된 신규 체제에 부응하기 위해서 Non-CO₂ 온실가스저감 사업단, 기후변화대응 R&D 등 환경기술 개발 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겠습니다. 또한 국민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생활체감 초미세먼지 저감기술 개발, 안심 친환경 생활제품 기술개발 등을 새롭게 기획·추진하겠습니다.

둘째, 환경산업 성장역량 방안입니다.

중소 환경기업의 성장 단계별 지원을 강화하고 우수 환경산업체는 브랜드 강화, 해외판로 개척, 인센티브 확대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적극 운영하겠습니다. 환경산업체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시장개척단을 권역별·거점별로 확대하고 다자개발은행 등과 파트너십 강화를 통해 신규 해외사업을 발굴하겠습니다.

특히 중국시장 진출을 위해 한중 미세먼지 실증협력사업의 대상지역을 확대하고 중국 환경과학연구원에 설치된 실증지원센터의 활용도를 높여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지속가능한 소비·생산 전방위 확산입니다.

공공부문 녹색구매 확대를 위해 지자체, 공공기관 담당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국가 재정시스템과 연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민간부문에서는 친환경 제품 구매액에 대한 조세지원 등 인센티브 확대를 도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UN 지속가능 소비·생산 10개년 계획, 이사회 활동을 통해서 국제사회의 지속가능한 소비·생산을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환경복지·보건 기반 강화입니다.

올해부터 시행된 환경오염 피해구제 제도가 차질 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환경오염피해조사단 구성·운영 등을 꼼꼼하게 준비하고 추진하겠습니다.

환경안심인증을 대폭 확대하고 사회 취약계층 대상 실내 활동공간 진단 등을 충실히 추진하여 국민의 환경안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해 국회에서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을 제정해 주셔서 기술원은 공공기관으로 자율 책임경영을 이행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전 임직원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환경과 경제가 상생하는 환경복지 실현의 중심 기관으로서 환경기술과 환경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할 것임을 위원님들께 약속드리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적해 주시는 말씀에 겸허한 마음으로 귀 기울여서 기술원이 환경기술과 환경산업을 선도하는 기관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매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참석한 기술원 임원을 소개해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주 환경기술본부장입니다.

김용진 환경사업본부장입니다.

(임원 인사)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영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립생태원장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생태원장 최재천 존경하는 홍영표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인사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 국립생태원은 충남 서천군에 위치하고 있으며, 2013년 12월 개원해서 올해 3년차를 맞이했습니다.

국립생태원은 세계적 수준의 종합적인 생태연구와 함께 차별화된 생태 교육·전시를 통해 우리나라의 자연환경 보전과 생태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국가 위탁사업들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며, 과학적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정부정책의 제안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한편 생태 교육·전시의 중심 기관으로서 독창적인 참여유도형 전시 콘텐츠와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매년 약 100만 명의 관람객이 다녀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기초생태연구 기반 확립을 위해 작년 점봉산에 이어 올해에는 지리산 구례군 일원에 중점생태연구지소를 설치하여 생태계 구성원 간 상호관계 및 에너지 흐름 등을 중점 연구하겠습니다.

생태계 공존, 생체모방 연구와 같은 기초연구 강화를 위해 원내에 의생학 연구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생태계 유형에 따른 생태기능 연구를 지속 추진하는 한편 생태계 변화 및 적응 연구 등 국립생태원이 맡고 있는 주요 연구들도 심도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유전자 변형 생물체와 외래생물에 대한 생태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금년에 LMO 전국 분포실태지도를 작성하고 생태계 교란생물 모니터링 및 미도입 외래생물 평가를 통해 위해우려종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생물다양성 연구와 관련해 국제생물다양성과학기구의 기술지원국 운영을 통해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기관의 국제적 위상 제고에도 계속 힘쓰겠습니다.

둘째, 국가발전전략 수립의 기초가 되는 생태환경 정책연구를 위해 전국 자연환경 조사를 충실히 이행하며 전국 해안사구, 백두대간, DMZ 지역에 대한 특정지역 정밀조사 등을 실시하고 한반도 생태축 보전과 복원 연구도 확대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날로 중요성이 높아지는 생태계서비스 평가·활용 기반 마련을 위한 연구도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연구·교육·전시 분야가 효과적으로 융합될 수 있도록 연구·교육·전시 상설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원 3년차 개원효과감소에 대비해서 금년에는 ‘장육진 생명사랑전’ 개최, 세계 최초 ‘잎꾼개미’, ‘베짜기개미’ 생태전시와 함께 킬러콘텐츠를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전면 시행되고 있는 자유학기제에 맞춰 수요자 맞춤형 교재와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학·연 협동과정 등 전문 특별교육 프로그램도 활성화하겠습니다.

생태지식정보 콘텐츠 개발·보급과 관련하여 지난 3월 출간된 ‘한국의 고라니’, ‘생태계와 환경

오염’과 같은 대국민 생애주기별 맞춤형 생태서적도 꾸준히 발간하겠습니다. 최근에는 증강현실 기법을 이용한 생태콘텐츠 2종을 개발·보급하여 방문객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지역 협력 및 상생을 위해서 서천군은 물론 서해안권의 지역 단체들과 함께 생태관광 루트를 개발하는 등 생태관광 클러스터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지속가능한 경영체계 구축을 위해 역량기반의 조직문화를 구축하고, 국민의 기대에 부합하는 맞춤형 생태문화 서비스 실현을 위해 대국민 생태강연 등을 매개로 국민과 계속 소통해 나가면서 뉴스레터 발간 및 에코뱅크 구축을 통해 실효성 있는 공공데이터를 선제적으로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국립생태원은 안정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대국민 생태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저를 포함한 임직원 모두가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기관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충실히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한 국립생태원의 임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윤명현 경영관리본부장입니다.

김정규 생태연구본부장입니다.

김종민 생태조사평가본부장입니다.

정진철 생물관리연구본부장입니다.

이원호 전시교육융합본부장입니다.

(임원 인사)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영표 국립생태원 최재천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보고해 주십시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사장 이재현 존경하는 환경노동위원회 홍영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2000년 7월 설립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여의도 면적의 약 6배에 이르는 세계 최대 규모의 매립지와 세계 최고 수준의 위생매립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2500만 수도권 시민들이 배출하는 하루 1만 5000t의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함은 물론 매립지 악취 제로화 등 깨끗한 주변환경 조성과 3개 시도 및 주변 지역 주민들과

의 소통 노력을 통해 상생 협력 관계로 발전시켜 왔습니다.

25년이 된 수도권매립지는 이제 환경적으로 더 엄격하게 관리하여야 하는 것은 물론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에 맞추어서 경제적으로 더 이로운 방식으로 자원화의 가치를 높이고 폐기물 매립장만의 기능에서 벗어나 환경과 문화 그리고 경제적으로 융합된 가치 있는 공간으로 변모시켜야 할 중요한 시기가 도래했습니다.

이를 위해 공사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무악취, 무사고, 무방류 이 3무 친환경 매립을 통해 수도권지역 발생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악취 민원이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고 방문객들조차도 ‘매립장에 악취가 하나도 없네’라는 말이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악취 없는 매립장을 조성하고 또한 6년 연속의 무재해 사업장을 계속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리고 매립장 내 침출수를 재순환시켜서 조기 안정화를 촉진하고 염류제거시설 설치 등 무방류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통해서 2020년까지 침출수를 외부로 단 한 방울도 배출하지 않고 전량 재이용할 수 있도록 매립의 패러다임을 변화시켜겠습니다.

둘째, 폐기물의 가치를 더욱 높여 자원순환사회를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2018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자원순환기본법 제정 취지에 맞춰서 폐기물의 직매립을 최소화하고 현재 반입폐기물 대비 23%인 자원화율을 환경적으로 더 이롭고 경제적으로도 효율성이 높은 생활폐기물과 건설폐기물 등의 자원화시설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2021년까지 86% 수준으로 끌어올리겠습니다.

셋째, 주민과 관계기관 간 소통을 통해 수도권매립지를 환경과 문화의 명소로 조성하겠습니다.

매립지의 생태 환경을 활용한 자유학기제 등 다양한 문화·체육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고 골프장 운영 수익금과 드림파크 장학기금 등을 통해 지역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제공할 것입니다. 아울러 매립 부지 전체의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환경 가치는 물론 국가와 지방 모두가 상호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문화·경제가 어우러지는 복합 테마파

크를 조성, 세계 최고의 환경문화 콘텐츠 공간으로 탈바꿈시켜 나가겠으며 효율적이며 성공적인 매립가스 발전소로 평가받고 있는 기존 50MW 매립가스 발전소와 바이오가스 발전시설에 더해 20년 이상 유휴부지로 남아 있어야 할 매립지 부지 내에 100MW급 국내 최대 규모의 태양광 단지를 시작으로 기존 자원화 에너지시설과 함께 토털 200MW급 세계 최초, 최대 규모의 복합 재생에너지 단지로서의 새로운 랜드마크를 만들어 수도권 지역의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정 적자 해소를 위한 강력한 지구책을 더 짜내서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2009년부터 적자를 겪어 왔던 공사는 작년도 처음으로 긴축예산 편성과 기관 운영비 절감 등을 통해서 2014년 대비 557억 원의 재정 적자를 감축하는 성과를 이루었으며, 금년도에 수입범위 내 지출원칙 적용과 시설 운영 및 조직·인력 효율화 방안 등 지속적인 비용 절감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환경부 및 3개 시도와 공동 노력을 통해 반입 수수료 현실화와 추가재원 확보방안 등 종합 재정건전화 세부계획을 마련하여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균형 재정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지난 25년간 공사가 많은 발전을 했지만 결코 지금에 안주하지 않고 지속적인 변화와 혁신으로 자원순환의 선도 기관으로 거듭나고 수도권매립지가 환경·경제·사회가 통합되는 21세기형 지속가능 발전의 롤모델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도 공사의 미래에 지속적인 관심과 조언 그리고 애정으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공사 임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진호 감사입니다.

이용재 기획이사입니다.

김성수 운영이사입니다.

김낙빈 사업이사입니다.

(임원 인사)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영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십시오.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장 안영희 존경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홍영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16년도 20대 국회 첫 임시회의에서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이 추진하고 있는 주요 업무의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도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국가 생물주권의 조기 확보와 생물 다양성의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기여하기 위해 작년 6월 3일 경상북도 상주에 설립되어 이제 막 1년이 경과되고 있습니다.

설립 이후 우수 신규인력의 채용, 전시관 관람객 유치 및 연구 기반의 마련 등 기관의 정상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주요 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면 첫째, 국책 담수생물연구기관의 위상에 걸맞는 조직운영 기반 마련을 위해 효율적인 인사와 경영 및 협업 시스템을 마련하고 세계 일류를 지향하는 연구시스템 및 생물자원의 활용 기반 구축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둘째, 수요자 맞춤형 생물자원 전시 및 교육 서비스의 제공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전시관의 개관 이후 현재까지 10개월간 약 23만 명의 관람객이 다녀갔으며 상주시의 우수한 주변 관광 여건 활용과 전시콘텐츠의 개선, 관람객의 편의시설 개선 등을 통해 지역 명품 전시관으로 성장·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지역 및 유관 교육기관과 협업을 통해 자유학기제, 찾아가는 생물자원 교육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체험교육 과정을 발굴하여 교육하고 있으며 이를 더욱 확산시켜 영남권 생물자원 교육의 허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국가생물주권의 확보, 바이오산업의 지원 등 실용적 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낙동강 등 한반도 담수수계를 체계적으로 조7사하여 2016년도에 200종의 신종과 미기록종을 발굴하였고 금후 한반도수계에서 유용 생물자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발굴한 유용한 생물자원을 상용화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 국내 기업에 기술 이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한 향장품·식품·천연제약 및 환경정화소재 등의 유용한 천연소재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바이오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오늘 임시회의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과 말씀을 겸허한 마음으로 귀 기울여 우리 낙동강생물자원관이 세계 일류의 담수생물자원 전문기관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할 것을 위원님들께 약속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의 임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최기형 기획전시본부장입니다.

이욱재 담수생물연구본부장입니다.

(임원 인사)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영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국상하수도협회 부회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십시오.

한국상하수도협회는 회장이 명예직이기 때문에 상근부회장이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한국상하수도협회상근부회장 최용철 한국상하수도협회 상근부회장 최용철입니다.

존경하는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야 위원님들을 모신 자리에서 저희 협회의 주요 업무에 대한 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협회는 지난 2001년 2월 수도법에 그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이듬해인 2002년 1월에 발족되었으며 2016년 현재 937 회원을 대상으로 87명의 임직원이 136억 원의 예산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설립 이래로 14년간 저희 협회는 지방자치단체 수도사업자를 비롯한 회원서비스를 최중심에 두고 국민들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보급하기 위해서 상하수도 인증 사업을 철저하게 수행하는 한편, 상하수도 발전을 선도하는 최고의 전문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해 국내 상하수도 발전과 전문인재 양성 등 각종 사업에 힘써 왔습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와 지원을 받아서 우리나라 물산업의 진흥과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금년도 저희 협회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 선도 기관으로서 국내 물산업 육성 지원 사업을 잘 추진하겠습니다.

금년 지난 3월 달에 부산 벡스코에서 워터코리아를 개최해서 176개 기업의 최신 기술을 선보였

고 참관한 2만여 명의 공무원이나 학계, 업계, 해외 바이어 등에게는 상하수도 관련 최신기술에 대한 정보 교류와 네트워크 구축의 장을 제공하였습니다. 아울러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최신 기술 개발에 기여하기 위해 단체표준인증 및 적합인증을 적극 유도할 계획입니다.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상 안전성을 확보하여 국민들에게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위생안전 인증제도의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 중인 지방자치단체의 공공하수도를 대상으로 성과평가 업무를 추진하고 평가 업무의 객관성 및 지속적인 전문성 확보를 위한 평가지표 개선 등의 연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협회는 역량 있는 전문인력 양성 및 현장 맞춤형 원스톱 교육훈련 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매년 상하수도 시설운영 종사자에 대한 법정교육과 직무전문교육 104개 과정, 4700여 명을 목표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미래 물산업 시장 활성화에 대비하기 위해서 필요 인재를 선제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물산업 프로젝트 매니저 과정 등을 운영하고 있고 중소기업 재직자 실무 역량을 강화하여 대외경쟁력을 제고하고 강소기업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서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11개 과정, 1260명을 목표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상하수도 통계, 전문자료 등 상하수도 관련 자료 제공 및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상하수도 공동연구협의회를 발족해서 여러 가지 현안 과제를 발굴해서 연구를 수행하고 있고 그 연구 결과는 매뉴얼로 제작·배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물산업 통계라든가 국내외 주요 정책, 입찰 정보, 주요 시장동향 등 국내외 물산업 관련 종합정보 제공을 위한 물산업 통계정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 인식 변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홍보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사랑 홈페이지나 SNS 운영으로 물의 소중함을 제고시키고 수돗물의 음용 필요성을 확산시키고 국민 소통 강화와 정책 만족도 향상 등

을 위한 홍보활동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저희 협회는 전 임직원이 합심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미흡한 점이 많을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상하수도 분야에 깊은 관심을 아끼지 않으신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개선·시정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영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국기상산업진흥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십시오.

○한국기상산업진흥원장 김종석 존경하는 국회 홍영표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저는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의 김종석 원장입니다.

오늘 20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님들께 처음으로 기상산업진흥원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는 자리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진흥원은 기상산업의 진흥과 발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하여 국가산업과 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2009년 시행된 기상산업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기상청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입니다.

진흥원 설립 이후 그간 국내 기상산업은 날씨경영인증 도입, 해외 수출지원, 기상기업 경영지원과 같이 전방위적인 성장 지원을 통해 기상산업 시장 규모가 약 1.5배 증가하는 성장기에 진입했습니다. 또한 기상산업 R&D 투자를 확대했으며 정부의 R&D 평균 실적보다 높은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기상산업의 시장 규모는 성장이 둔화되어 정체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선진국에 비하여 기상 서비스 기술은 다소 뒤처지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또한 급변하는 시장 트렌드에 발맞출 기상산업 전문인력 수급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저희 진흥원은 국내 기상산업의 새로운 먹거리 발굴을 위해 국내 기상산업이 국제사회를 향해 적극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경쟁력 있는 기상 기술과 기상 서비스 발굴을 위해 효율

적인 투자를 확대하겠습니다.

금년 정부는 새로운 산업 투자액을 늘리고 서비스업 육성과 규제 프리존 등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국정운영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진흥원 또한 기상산업 청년창업, 기업성장 지원 등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성장을 위해 정부의 정책방향과 발맞추어 열심히 뛰겠습니다.

환경노동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은 향후 기상산업 진흥을 위해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참석한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의 주요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길모 산업진흥본부장입니다.

황명균 기상지원본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영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APEC기후센터 소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십시오.

○APEC기후센터소장 정홍상 APEC기후센터 정홍상 소장입니다.

존경하는 홍영표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께 APEC기후센터의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따라 폭염, 한파, 호우 등 이상기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위험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제사회의 협력이 더욱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약 10년 전인 2005년에 APEC 회원국들의 합의에 의해서 저희 APEC기후센터가 설립되었습니다.

저희 센터는 부산시에 소재하고 있고 현재 직원수는 소장인 저를 포함해서 78명입니다. 그리고 금년 예산 규모는 77억 원입니다.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APEC기후센터는 기후변화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사회·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신뢰도 높은 기후예측정보를 생산해서 국내 및 아태지역 국가들에게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

매월 향후 6개월간의 계절 기후예측정보를 생산해서 아시아태평양지역 개발도상국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태지역의 홍수, 가뭄, 극

한, 고온 등의 예측기술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APEC기후센터는 기후정보를 활용해서 농업이나 물관리 등 분야의 생산성과 효율을 높이는 융합기술 개발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후정보서비스 및 네트워크 강화 그리고 태평양 도서국의 기후변화 대응 기술개발과 지원도 중점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APEC기후센터는 기후예측의 품질을 높여 나가면서 실용적인 기후 융복합 응용연구를 더욱 활발하게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기후정보의 접근 편의성을 높여 아태지역 기후정보 협력에 있어 허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APEC기후센터에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참석한 저희 APEC기후센터의 주요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형진 연구본부장입니다.

윤여훈 행정실장입니다.

(간부 인사)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영표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형수치모델개발사업단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십시오.

○한국형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장 홍성유 한국형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단장 홍성유입니다.

존경하는 홍영표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상재해 경감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사업단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한국형수치예보모델개발은 우리나라의 기상 및 기후 특성을 반영한 우리나라의 독자기술을 사용한 그리고 또 기상선진국에 대한 기술 종속의 악순환에서 탈피하기 위한 민족적 자긍심의 태동이자 결정체입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측면에서도 기상선진국인 유럽공동체, 영국, 미국, 일본 등의 개발 사례와 비교해 보더라도 60여 명의 인력과 한시적 조직으로 2011년부터 9년 동안 현업운용이 가능한 세계 최고 수준의 한국형수치예보모델을 개발하는 사업목표는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매우 도전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노력으로 사업 중반인 약 1년 전 2015년 7월부터 준실시간 독자 예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상선진국인 유럽공동체, 미국, 영국, 일본 등에 비해서 최소 30, 길게는 50년 이상 늦은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2016년 6월 현재는 영국에서 도입한 기상청의 현업모델 대비 90% 이상의 예보 성능을 지니는, 불과 1년 만에 기상선진국 대비 3년 뒤진 성능으로 따라잡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의미가 깊은 것은 사업단 자체의 기술로써 한국인이 개발한 세계 최초로 육면체구비정역학 핵심모듈, 육면체구 자료동화 시스템 등을 독자기술로써 개발한 수치예보모델 시스템이기에 한국형이라는 의미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홍영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독자기술 기반의 한국형 수치예보모델의 성공적 개발효과는 일기예보 정확도의 향상뿐만이 아닙니다.

동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수치예보모델은 폭우와 태풍 및 위험기상,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는 미세먼지 또 미래 기후예보 등의 핵심기술로 한국형 모델로 활용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사업단에서 개발된 독자기술과 수치모델을 기반으로 대한민국이 기상예측의 세계 거점으로 도약하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사업단의 조직은 2개 본부, 1실, 6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두 본부장님이 여기에 나오셨습니다.

개발본부장이신 권영철 본부장입니다.

예보본부장인 설경희 본부장입니다.

연구지원실장인 우종선 실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한국형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업무 보고를 끝맺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영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하기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시간은 5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득 위원 많은 산하기관 대표자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는데 지금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일일이 다 질의를 할 수는 없고,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박보환 예, 접니다.

○이용득 위원 지난번 전남 신안에 여교사 폭행 사건이 있었지요?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박보환 예, 그렇습니다.

○이용득 위원 그게 도서벽지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환경이 얼마나 어렵다 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건데, 그래서 22일 날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도서지역에 근무하는 근로자들 안전 문제에 대해서 종합대책을 발표했는데 그때 거기에 참석하셨나요?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박보환 저희들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용득 위원 필요한 데는 전부 부르는 게 사회관계장관회의인데, 지금 국립공원관리공단도 도서벽지에 많은 직원들이 있지요?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박보환 예, 7개 분소에 한 15명 정도가 도서벽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용득 위원 15명밖에 없습니까?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박보환 예, 그렇습니다.

○이용득 위원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32개 분소에 46명 정도가 오지에서 근무하고 있다 이렇게 저희 방으로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틀림니까?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박보환 도서하고 오지까지 포함하면 그렇습니다.

○이용득 위원 오지까지.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박보환 예, 그렇습니다.

○이용득 위원 그래서 저는 도서벽지·오지까지 포함한 데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근무환경 취약성 이게 개선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다도해 국립공원이 있지요?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박보환 예.

○이용득 위원 다도해 국립공원 관리사무소에 혹시 이사장님이 가 보신 적이 있나요?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박보환 예, 여러 차

례가 봤습니다.

○이용득 위원 어떻습니까?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박보환 지속적으로 근무환경을 개선하고는 있는데 아직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용득 위원 아직 부족한 정도가 아니지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외관도 그렇지만 바닥과 벽도 완전히 금이 가 있고 여기서 도저히 근무할 수 있는 곳이 아니다 이렇게 느껴 집니다.

어쨌든 지금 46명의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 근무환경 개선에 대한 대책이 없는데 이것은 장관회의에서 나온 것처럼 그런 종합적 대책을 관리공단 자체 내에서 좀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사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박보환 예, 위원님 동의합니다.

직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요, 또 수립해서 제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용득 위원 어쨌든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개선책을 만들어서 우선 저희 사무실에 좀 서면보고라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박보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영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의 문진국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문진국 위원 새누리당의 문진국입니다.

한국환경공단 이사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이시진 예, 여기 있습니다.

○문진국 위원 한국공단에서는 농촌 폐비닐 수거 재활용하는 사업을 하고 있지요?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이시진 그렇습니다.

○문진국 위원 동 사업은 폐비닐의 수거 중량에 비례해서 보상금이 지급됨에 따라 흙 등의 이물질을 제거하지 않고 중량을 늘리는 폐해가 계속 발생하는 등의 문제도 있지요?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이시진 예.

○문진국 위원 공단에서는 2013년부터 수거보상

비를 차등 지급하는 농촌 폐비닐 수거등급제를 시행하고도 있지요?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이시진 예, 그렇습니다.

○문진국 위원 그럼에도 수거된 폐비닐의 이물질 함유율에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물질 함유율이 증가한 곳도 있는 등 수거등급제도에 효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개선되지 않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이시진 예, 저희들이 그 문제를 갖고 실제로 직접 해 본 적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해 본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불순물이 30%에서 50% 사이 나옵니다.

흙을 완벽하게 털 방법도 없고, 그래서 실제로 그것 수거할 때 자갈이라든지 돌이라든지 들어가면 이게 산더미처럼 있는데 그 안에 돌 하나 있는 것을 저희들이 발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는데 업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교육을 시키고 농민들을 교육하고 홍보하고 해서 점점 나아지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문진국 위원 그렇다면 동 사업의 수익성 또한 해마다 악화되는 수익성 개선을 위해 2013년 수익계약에서 공개경쟁 입찰방식으로 변경을 했지요?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이시진 예.

○문진국 위원 그런데 무슨 일인지 아직까지 공단의 재활용사업 규정을 개정하지도 않고 여전히 수익계약 방식으로 폐비닐을 유상 판매하고 있지요?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이시진 그게 부분적으로는 저희들이 보관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이는 대로 빨리 없애줘야 다음에 또 수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줄 알면서 일부는 수익계약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진국 위원 그러면 지금 규정이 계속 늦어지기 때문에 그러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이시진 그래서 금년 7월에 그 관련 규정을 바꾸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문진국 위원 그러면 그 문제점을 빨리 개선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이시진 비용 문제가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금년 7월 안에 저희들이 개정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진국 위원 아니, 제가 왜 또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것을 빨리 문제점을 개선해야만,

지금 현재 페비닐은 업체별로 단가가 많이 줄 때는 15배로 해서 주고 또 최대 4배까지도 더 중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빨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충분히 빨리 개정을 해서 마무리를 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이시진 잘 알겠습니다.

○문진국 위원 그리고 공공기관에서, 업무에서 모든 것을 공정성을 찾아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이시진 알겠습니다.

○문진국 위원 다음에는 한 번 더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이 지금 현행법에 야간산행, 비정규 탐방을 금지하고 있지만, 매년 불법 산행을 근절하고 있지요?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박보환 예, 그렇습니다.

○문진국 위원 그런데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에도 개선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박보환 전체적인 불법행위는 줄어드는 추세인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불법 산행 부분이 줄지 않아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계도할……

○문진국 위원 왜 제가 지금 빨리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불법 산행 때문에 최근 5년간 53명이 사망하고요, 276명이 부상을 당했던 말입니다.

그래서 공단이 불법 산행을 단속하고 예방하는 인력과 지원이 충분함에도 사고가 발생하는 것인지 아니면 예산·인력 모두 부족한 상황인지 지금 답변을 주시라는 것입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박보환 위원님, 인력·예산 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인력·예산 확보와 함께 좀 더 지속적인 단속 강화하는 것을 병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진국 위원 그러면 바로 불법 산행 근절을 위하여 공단의 단속 적발 시 고의성이 없고 행위가 경미할 경우 지도장을 발급을 하지요?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박보환 그렇습니다.

○문진국 위원 그리고 그 1년 안에 다시 또 하면 10만 원이 30만 원의 과태료로 되지요?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박보환 예.

○문진국 위원 일본하고 지금 비교를 해 보면 일본은 약 10만 엔이거든요, 한 번 걸리면. 그러니까 부과가 우리 한국이 적지 않느냐 이런 얘기

도 지금 지적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 이런 견해를 봐서 지금 이사장님께서 충분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박보환 예……

○문진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영표 말씀하세요.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박보환 지금 과태료가 낮다는 지적이 있고요. 저희들도 2008년까지는 50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요, 과태료가 좀 많다 또 집행력이 떨어진다고 해서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으로 줄였는데 이제는 과태료를 좀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부, 주관부처와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진국 위원 예.

○위원장 홍영표 문진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의당 이정미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정미 위원 자연환경보전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자리에 계시지요?

○환경부자연보전국장 이민호 예.

○이정미 위원 거기서 바로 답변이 가능하십니까?

○위원장 홍영표 앞으로 나오십시오, 마이크 드리든가.

앞으로 나오세요.

○이정미 위원 설악산 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살펴보면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사업심의를 할 때 작성됐던 환경조사평가의 내용과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환경 훼손 증가가 확인이 되었는데 알고 계십니까?

○환경부자연보전국장 이민호 최근에 들었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국립공원위원회의 케이블카 사업승인 당시에 그것의 부실함이 확인된 것 아닙니까?

○환경부자연보전국장 이민호 자연환경조사평가하고 환경영향평가 초안하고 약간 시기가 차이가 있고요, 조금 영향평가에서 정밀하게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시기의 차이라고 해도 케이블카가 건립된다고 하는 것은 한 가지 사실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그 두 가지가 일치되지 않은 점은 어떤 초기 단계에서의 부실함이 드러났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리산 케이블카사업도 지금 신청이 돼

있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 자연환경평가를 어떻게 하는 것인가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 통과 시 일곱 가지의 부대조건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행 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환경영향평가가 통과되지 못하지요?
○환경부자연보전국장 이민호 그 당시에 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에서 그것을 꼼꼼히 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런데 아무튼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통과 시 일곱 가지 부대조건 그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탐방로 회피 대책 그다음에 산양 멸종위기 보호 대책 그리고 시설안전대책 보완 문제 이런 것들이 다 살펴져야지 이것이 통과가 되는 것이지요?

○환경부자연보전국장 이민호 그런 것들도 영향평가와 협의 과정에서 다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정미 위원 이것의 이행 여부를 검토해야 될 텐데 어떤 절차와 기준을 통해서 진행을 하실 생각입니까?

○환경부자연보전국장 이민호 영향평가협의회는 저희 본부에서 하지는 않고요,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원주지방환경청에서 그 당시 부대조건의 이행 부과의 어떤 취지 그다음에 이행 계획 유무를 꼼꼼히 살펴볼 것으로……

○이정미 위원 환경부에서 이것을 살펴서 그런 조건에 부합되지 않으면 이 심의 자체를 취소할 수 있는 정도까지 이런 심각성을 가지고 꼼꼼히 검토를 하고 계십니까?

○환경부자연보전국장 이민호 원주청에서 꼼꼼히 볼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직 본안 협의가 들어오지를 않았습시다.

○이정미 위원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설악산 케이블카의 갈등조정협의를 원주지청에서 재량권을 가지고 구성을 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아시지요?

○환경부자연보전국장 이민호 예.

○이정미 위원 이것을 구성하자고 제안을 했는데 지금 원주지청에서 계속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구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환경부자연보전국장 이민호 제가 알고 있기로는 원주청에서 반대한 것은 아니고 그 갈등협회는 사업자하고 반대하는 단체들하고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정미 위원 원주지청장이 그 갈등조정협회를 구성할 재량권을 갖게 되어 있고 이것은 19대 국회에서 국회의 요구로 구성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원주지청에서 이것을 구성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습니까? 계속 그것을 요구했는데, 갈등조정협회를 구성해 달라……

○환경부자연보전국장 이민호 양양군 측에 갈등조정협의회에 들어오라고 원주지청에서 여러 번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그 사업자인 양양군 측에서 충분한 협의가 됐기 때문에 별도의 갈등협의회 구성은 참여하지 않아도 좋아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아니지요. 원주지청장님이 그것을 구성을 하겠다고 하면 사업자 측에서 당연히 들어와야 되는데 그쪽에서 거부하기 때문에 이것을 구성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다면 19대 국회의 결정사항을 원주지청장님이 이행하고 있지 않은 것이 됩니다.

○환경부자연보전국장 이민호 위원님, 원주환경청장이 지금 와 있는데 혹시 직접 들으면 어떻겠습니까?

○이정미 위원 잠깐, 시간이 지금……

○원주지방환경청장 황계영 원주환경청장입니다.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두 차례에 걸쳐서 양양군에 갈등조정협의회에 참여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양양군에서는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갈등조정협의회의 실익이 없다라고 해서 거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환경단체 쪽에다가 저희랑 같이 양양군을 방문해서 설득을 하자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환경단체 쪽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답변을 안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정미 위원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과는 조금 다르고 원주지청에서 그것에 대한 충분한 의지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도 다시 확인하고, 이런 절차와 과정이 있었다는 것은 오늘 보고를 처음 받았습니다.

제가 환경부장관님께도 이런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꼭 해야 할 일은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원주지방환경청장 황계영 법상 저희가 강제를 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저희가 참여를 요

청을 할 수는 있지만 사업자이자 승인기관인 양양군에서 참여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설득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정미 위원** 잠깐만요, 이게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2015년에 야당 위원들이 장관과 환경청에 요구해서 환경부가 약속해서 이것을 진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국회에서 약속한 것을 환경부에서 지키지 않는 것이 됩니다.

○**원주지방환경청장 황계영** 위원님,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수차례 공문을 통해서 양양군에 갈등조정협의회 참여를 요구를 했고요. 그렇지만 양양군에서 참여를 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계속 설득을 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정미 위원** 그러면 그 보낸 공문들 그리고 그쪽에서 온 답변들 이거 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지방환경청장 황계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나머지 추가질의 시간 있지요?

○**위원장 홍영표** 예, 따로 드리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예.

○**위원장 홍영표** 다음 새누리당의 임이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임이자 위원** 새누리당 임이자 위원입니다.

최재천 생태원 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2월 15일부터 2월 26일까지 10일간 감사 받으셨지요?

○**국립생태원장 최재천** 예, 받았습니다.

○**임이자 위원** 지금 생태원이 3년차인데 종합감사를 받아서 한 서른일곱 가지 지적을 받으셨지요?

○**국립생태원장 최재천** 예.

○**임이자 위원** 그러면 그 지적받은 중에서 멸종위기 관련돼 가지고 한 세 가지 지적을 받았는데 그것을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고 어떻게 진행중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국립생태원장 최재천** 간략히 말씀드리면 언론에 보도된 것 중에 저희가 압류해서 인수받은 것

들을 잘못 처리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제대로 처리를 했고요. 다만 행정적으로 이런 동물들을 인수받을 때 전부 저희가 직접 확보하고 있어야 되는 서류들 중에서 다른 기관이 저희한테 인수할 때 그쪽에 있으면 저희는 확보 안 해도 되는 줄로 행정적으로 저희가 조금 착오가 있어서 빠졌고요. 그렇지만 그 몇 개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다시 추가적으로 절차를 다 밟고 있습니다.

○**임이자 위원** 그러면 지금 멸종위기종 관련돼 가지고 규정이 미비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국립생태원장 최재천** 이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질 것이기 때문에 좀 더 규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만들어 나가야 될 것 같아서 이미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임이자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봤을 때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정원이 314명인데요, 오늘 여기 자료를 보니까 214명이네요. 그러면 100명 정도의 차이가 나는데 무슨 이유가 있나요?

○**국립생태원장 최재천** 그것은 좀 오류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314명은 처음 듣는 말입니다.

○**임이자 위원** 제가 지금 여기 감사종합보고서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314…… 그래서 저도 깜짝 놀라서, 100명씩 차이가 나니까 깜짝 놀라서 여쭙 보는 거고요. 왜냐하면 인원이 100명이 왔다 갔다 하면 예산이 왔다 갔다 하지 않겠습니까?

○**국립생태원장 최재천** 그렇습니다.

저희 214명이 맞습니다.

○**임이자 위원** 그러면 214명 중에서 지금 비정규직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국립생태원장 최재천** 비정규직까지 합하면 저희가 한 450명가량 됩니다.

○**임이자 위원** 그러면 이 314명에 비정규직이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인가요?

○**국립생태원장 최재천**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 정규직은 214명이 맞고요. 저희가 워낙 자연환경조사나 뭐 이런 야외에서 하는 일이 많다고 보니까 비정규직 활용도가 좀 높은 편입니다.

○**임이자 위원** 지금 다시 한 번 가서 확인해 보시고요.

○**국립생태원장 최재천** 예.

○**임이자 위원** 인원이 지금 314명 중에서 비정규직 84명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비정규직도 기간제가 있고 전문위원으로 나누어져 있던데 이분들이 하는 일이 어떤 건가요?

○국립생태원장 최재천 사실상 저희 정규직이 하는 일과 많은 부분에서는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어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이 늘 어려움으로 있는데요. 제가 정확한 명수나 이런 것들은 다시 한 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이자 위원 다시 한 번 여쭙 보겠는데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비정규직을 쓰시는 건가요?

○국립생태원장 최재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워낙 이 정부로부터, 안행부로부터 받은 인원이 214명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야 되는 일은 워낙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문위원도 많이 모셔야 되고 그런 상황들이 그냥 벌어지는 겁니다.

○임이자 위원 아까 멸종위기 불법 보관에 대해서는 좀 오해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런데 지금 국제적 멸종위기 폐사체를 갖다가 부적절하게 처리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명을 안 하셨거든요.

○국립생태원장 최재천 그 부분은 저희가 잘못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때 상황이 저희가 시설 부분에서 뭔가 미비한 게 있어 가지고 냉장을, 말씀드리기 참 뭐하지만 냉동고 작동이 제대로 안 되는 바람에 너무나 급격하게 썩어 나가고 그래서 질병 위험도 있고 해서 일단 소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지방청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서가 조금 잘못됐습니다.

○임이자 위원 두 번 다시 이런 일은 없으셔야 되겠지요?

○국립생태원장 최재천 예, 그렇습니다.

○임이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영표 임이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천 원장님!

○국립생태원장 최재천 예.

○위원장 홍영표 인원을 받으실 때 지금 정규직으로 이백몇 명 받으셨다고 했지요?

○국립생태원장 최재천 지금 214명입니다.

○위원장 홍영표 그러면 그 외의 필요한 인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협의를 하십니까, 정부하고, 기재부하고? 그냥 비용에 의해서 하시는 건가요?

○국립생태원장 최재천 저희야 정규직 인원이 더 많으면 많을수록 참 좋아서 끊임없이……

○위원장 홍영표 아니, 그러니까요. 만약에 214명 이후로 더 필요하다 그러면 해결하는 방법이 원장님이 하실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겁니까? 기재부에다 요청을 다시 하는 건가요?

○국립생태원장 최재천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204명으로 저희가 출발을 했고요. 작년에 저희가 기재부와 여러 차례의 협의를 거쳐서 10명 더 충원을 받아서 지금 214명입니다.

○위원장 홍영표 원래 기재부에다 맨 처음에 사업계획을 세우실 때 요청한 인원은 몇 명입니까?

○국립생태원장 최재천 제가 사실 2008년에 이 국립생태원 총괄기획을 예전에 했거든요. 그때는 저희가 500명가량을 지원해 달라고 했는데 처음에 저희가 개원하면서 받은 인원은 204명이었습니다.

○위원장 홍영표 알겠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구병 출신 한정에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정애 위원 이게 4년이 지나도 별로 바뀌지를 않아서, 저희가 4년 전에 굉장히 많이 지적을 했었는데, 비정규직 많은 것에 대해서. 그래도 박근혜정부 출범하고는 상시 지속적인 업무는 정규직화한다고 했기 때문에 한 4년을 봤는데 여전히 합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거기다가 최근에 만들어진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업무보고 하시면서 5쪽에 보면 아예 비정규직을, 기간제를 48명을 채용을 하겠다고 이렇게 지금 만들어지는 데도 이라고 있어요, 만들어지는 데도 그렇게 하고 있고.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정규직 직원이나 비정규직 직원이나 거의 비슷합니다. 1196명이 정규직이면 비정규직도 1198명. 이게 더 줄어들지도 않고……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박보환 저희들은 정부 재정 지원 일자리창출 직원이 871명인가 얼마 됐어요. 나머지 비정규직,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는 280여 명인데 계속 공채를 통해서 전환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정애 위원 지금 현재도 327명 정도로 남아 있고요, 자연환경해설사 327명 또 있고요.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박보환 예, 그렇습니다.

○**한정애 위원** 이게 아무튼 업무보고 자료에 있는 것을 보면 4년 동안 전혀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다, 생태원도 마찬가지고.

거기다가 오늘 여기 기상산업진흥원 업무보고하신 것 보면 16쪽에 기상관측장비 유지보수 업무는 민간이양 하겠다고 하셨는데요.

○**한국기상산업진흥원장 김종석** 예, 그렇습니다.

○**한정애 위원** 저는 공공기관이 이렇게 특히 유지보수 업무 이양하는 거, 유지보수,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밖에 나가서 좀 힘들게 해야 되는 업무들을 자꾸 민간이양을 해 버리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이렇게 하고 난 뒤에는 유지보수 업무라 그래서 1년에 얼마 연간 단위로 계약하는 방식인데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거의 최저임금으로 일할 수밖에 없고 안전이나 보건 이런 것들 하나도 관리 안 되고 이런 방식이거든요. 이거……

○**한국기상산업진흥원장 김종석** 와서 파악을 해본 바에 의하면 지난 국회 때 이 유지보수를 민간으로 이양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지금 현재 일단 이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말씀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검토해 보고 다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애 위원** 다 이양해 버리시고 그러면 나중에 관리하는 것만 가지고 있으시면 도대체 공공기관이 존재하는 이유가 뭔가요? 관리를 하기 위해 존재하는 건가요? 아니, 지금 기상산업진흥원만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환경공단의 경우에도 과거에 자원재생공사하고 통합을 하면서 사실은 폐기물 중에 비닐수거해서 처리하는 업무를 그냥 직원들까지 이렇게 통째로 해서 어쨌든……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이시진** 자회사 형태로 만든 것입니다.

○**한정애 위원** 예, 자회사로 보내셨지요?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이시진** 예, 자회사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정애 위원** 자회사 형태로 있는데 그거 남들이 보면 왜 거기다만 특혜를 주느냐, 자회사 없애라 지금 이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은……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이시진** 그게 2020년까지 약속을, 분사를 해 나갈 때 2020년까지는 개런티를 해 줬습니다. 그 이후에는 민간하고 경쟁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한정애 위원** 지금 다시 얘기 되고 있지 않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이시진** 예, 조금 이야기는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의 정년이 충분히 남아 있는 상태에서 분사를 해서 나갔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정년 될 때까지는 해 주는 조건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걸 지금 와서 다시 없애기는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한정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메트로 건하고 거의 비슷하다는 것이지요, 서울메트로하고.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이시진** 그렇지는 않습니다. 연봉 비슷……

○**한정애 위원** 거기다 오세훈 시장이 구조조정한다라고 하면서 일부 업무를 민영화를 맡기면서 그 사람들에게 대해서 보전을 해 준 것입니다, 일정 부분에. 그래서 그냥 통합하는 것도 좋고 기능을 어떤 식으로 조정하는 것도 좋지만 그냥 무작위로 이렇게 줄이겠다고 하는 방식으로 해서 사실은 업무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게 아니라 그냥 민영화·민간화 하면서 사실은 나쁜 일 자리를 만드는 것을 공공기관에서 좀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방식을.

저는 박근혜정부 4년 동안은 이거 분명히 상시 지속적인 업무는 정규직화한다라고 공약으로 되어 있어서 4년 동안 죽 지켜봤는데 오늘 업무보고 전체적으로 받으면서 전혀 변한 게 없어요. 상시 지속 업무와 관련해서 정규직화 한 게 없고 더 늘었습니다, 비정규직.

잠깐, 우이도 풍성사구 얘기하려다가……

화면 좀……

(영상자료를 보며)

저게 원래, 오른쪽이 2016년 최근에 찍은 사진이고요, 왼쪽이 1900년대에 우이도의 풍성사구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모래탑이 좀 많을 때 사진입니다.

저 신두리 사구하고 우이도 사구 2개를 아마 아실 것입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의 박 이사장님!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박보환** 예.

○**한정애 위원** 그런데 저기 풍성사구의 경우에 지금 탐방객들이 저기를 훼손하고 있는 것은 차치하고요. 우이도 사구의 경우에는 원래 바람이

이렇게 불기 때문에 모래톱이 자연적으로 위로 올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래가 계속적으로 생성되도록 되어 있는데 저기를 사람들이 못 들어가게 하겠다고 생육을 시키셨어요, 나무를 심고 이렇게. 그래서 이쪽 오른쪽처럼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의 사구 형성이 안 되는 겁니다. 기존에 있는 것은 사람들이 올라가서 훼손하고 있고. 그러니까 저것은 어찌 보면 국립공원에서 관리하는 방식을 잘못하는 바람에 오히려 사구를 망치고 있는 거고요.

신두리 사구의 경우에는 괜찮았었는데 주변 사구를 뭉개 가지고 펜션을 거기다가 지으면서 모래 공급이 차단된 사례거든요. 그 건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우이도 사구를, 저게 지금 사구가 살아나는 게 아니라 지금 밑에 못 들어가게 하겠다고 생육이 정착이 될 때까지 사람을 못 들어가게 하겠다고 막고 있는데 오히려 저게 사구를 죽이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아시고 다시 한번 검토를 좀 하셔서 어떤 방식으로 해야지만 사구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박보환 예, 잘 검토해서 결과를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영표 박보환 이사장님, 사구를 살리세요.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박보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영표 다음은 새누리당 경북 구미시를 출신 장석춘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석춘 위원 저는 부처 간의 업무 효율성 측면에서 가볍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최재천 국립생태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립생태원장 최재천 예.

(홍영표 위원장, 한정에 간사와 사회교대)

○장석춘 위원 고속도로 지나다닐 때 보면 ‘야생동물이 지나가고 있어요’ 이런 안내판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국립생태원장 최재천 예.

○장석춘 위원 저는 그걸 보면서 간혹가다 볼 때 왜 이게 여기에 붙어 있는지 이해를 못 할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한 두 달 전에는, 저는 매주 지방을 자주 내려가기 때문에 국도·고속도로에서 야생동물로 인해서 2차 안전사고 나는 경우를 직접 목격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서 좀 아쉬운 면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다 한가운데에 안내판을 붙여 놓은 격인 그런 것을 저는 한 번씩 느끼곤 하거든요. 동물이 지나가는 길이 막혔다는 것이지요. 들어오는 길은 있는데 나가는 길이 없으니까 이 고속도로에서 그러한 부분을 저는 직접 목격, 자주 다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봤는데 지금 보면은 국도하고 지방도하고 고속도로하고 관리하는 주체가 다 다르지요?

○국립생태원장 최재천 예, 그렇습니다.

○장석춘 위원 그것을 일원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국립생태원장 최재천 글썄요, 지금 이게 이미 행정적으로 이렇게 구분이 돼 있어서 예를 들면 저희 국립생태원이 한꺼번에 관리를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행정적으로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장석춘 위원 현재로서요?

○국립생태원장 최재천 예.

○장석춘 위원 그래서 보면 안내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이 아예 안 지나가는데 그런 데이터까지 나오는데도 버젓이 그렇게 안내판이 붙어 있는 데가 있고요. 그거 얼마나 비효율적이고 행정적으로 보면 국고 낭비이고, 국고 낭비도 상당히 심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한 측면이나 모니터가 있어도 동물이 안 지나가고 동물이 지나가는데 정작 모니터가 없고 이런 비효율성이 있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좀 대안력이 있으면 제시해 주시면 이를테면 저희들이 법을 발의하든지 그런 것을 한번 해 보고 싶고요.

쉽게 이야기해서 야생동물한테는 공포의 고속도로가 되고 결론적으로 우리한테 공포의 고속도로가 되는 것이지요. 과속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절실하게 그러한 부분이 좀 필요한 부분이고요.

환경부나 안 그러면 다른 현안 부처하고 좋은 안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그런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면 저희도 그런 방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국립생태원장 최재천 예, 저희가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석춘 위원 예, 저는 그러면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정애 장석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당의 이상돈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이상돈 위원** 환경관리공단 이사장님께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저는 국민의당 이상돈입니다.

저는 이 환경관리공단의 뿌리가 자원재생공사 환경관리공단에서 하신 건데 이것 지금 정원만 해도 2000명이 넘어서 환경부 직원이랑 거진 같은 수준 아닙니까?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이시진** 그렇습니다.

○**이상돈 위원** 정부 산하기관에서도 이렇게 인원이 많고 이렇게 규모가 큰 기구가 나는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이시진** 여러 가지 있지요. 수자원공사나 LH나 뭐 여러 군데 있습니다.

○**이상돈 위원** 그것은 뭐 특별한 사업이 아닙니다.

여기는 또 하나 제가 지금 갖고 있는 문제점은 환경부가 갖고 있는 말하자면 점검·단속권이 대폭적으로 환경공단에 사실상 해서 TMS 같은 것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이시진** 예, 있습니다.

○**이상돈 위원** 또한 환경관리공단은 상하수도라든지 폐기물 여러 가지 사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규제와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점검·단속권과 사업권을 이렇게 산하기관이 같이 갖고 있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해 저는 의문점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이사장님께서서는 답변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고 더군다나 임기도 거진 끝나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저는 이 문제는 환경부뿐 아니라 우리 정부 조직, 더 나아가서 우리 환노위가 그만큼 숙고해야 된다고 봅니다. 과연 이렇게 해도 되는가. 그래서 심지어 주로 대형 배출원은 사실상 TMS 통해서 규제가 되고 있고 관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이시진** 예, 그렇습니다.

○**이상돈 위원** 그래서 대형 배출원인 대기업들은 환경부는 별로 접할 기회도 없고 환경관리공단이 사실상 감독기관이 되어버리는 이런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이시진** 그렇습니다.

그런데 TMS가 법적으로 저희들이 현장에 갈 수 있는 빈도가 있습니다. 현장에 갈 수 있는 것은 3년 미만이면 2년마다 가고 3년 이상 되면 또

1년마다 한 번씩 할 수 있고, 현장에서 직접 할 수 있고, TMS의 기술이 좋아서 말이지요, 현장에 앉아서 장난치는가 안 치는가를 저희들이 직접 실험할 수가 있습니다. 실험해서 데이터가 너무 좋게 나온다, 좀 수상하다 그러면 저희들이 일부러 제로로 나올 수 있도록 한번 해 봅니다. 할 수 있습니다, 기술로. 그래서 해 보면 실제로 제로가 나오고 다시 세팅해 가지고 다시 데이터가 나오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제로로 나왔는데도 계속 그게 나오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기술들을 최근에 개발을 해서 TMS에 대한 정도는 굉장히 저희들이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상돈 위원** 저도 물론 그렇게 믿고 싶은데 과연 우리가 그렇게 한 기관에 의한 기계적인 측정에 전폭적으로 신뢰를 해야 되는가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규제기관이 이것을 손 놓고 있다는 것은, 사실상 방치하는 것은 상당히 규제기관에서도 본연의 문제가 있지 않은가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이시진** 빈도를 법의 시행령에 정해 놔기 때문에 그것을 좀 바꿔 주신다면 저희들이 자주 가서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상돈 위원** 그리고 이번에 저도 오랜만에 환경을 죽 봤는데 눈에 띈 것 이것을 한번 여쭙고 싶어요.

지금 미세먼지 문제가 있고 자동차 문제가 있는데 환경공단에서 자동차에서 나오는 배출가스를 이동 중인 차량을 원격적으로 측정하는 장비를 운영하고 계시지요?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이시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상돈 위원** 몇 대나 운영하고 계시나요?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이시진** 지금 저희들이 12대,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이상돈 위원** 제가 받은 것은 6대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이시진** 올해 또 구입을 할 생각입니다.

○**이상돈 위원** 올해 또 구입하나요?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이시진** 예.

○**이상돈 위원** 그리고 거기에 소요된 예산은 작년 같은 경우에 21억 원이 좀 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적발을 해서 개선명령을 발부한 건수는 작년에 203건이 되겠습니다.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이시진** 예, 그렇습니다.

○**이상돈 위원** 그래서 20억을 203으로 나눠 보니까 개선명령 1건당 들어간 규제비용이 1000만원이 되는데 그것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과연 효율적인 방법인가요?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이시진** 그런데 이게 정차를 해 놓고 검사를 하면 사실은 정확히 할 수 있고 좋습니다. 그런데 그게 굉장히 위험할 수 있고 안전에도 문제가 되고 그래서 이제 운행차를 직접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했고, 그래서 단속 건수가 적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률적으로 다 할 수가 없고 어느 한 특정한 장소에서만 하고 또 옮기고 해야 되기 때문에 단속 건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결과만 놓고 말씀을 드린다면 위원님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마는 저희로서는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최대한을 할 수 있고 그 대수가 그렇게 많지를 않아서 좀 의심되는 곳으로 가기도 좀 힘든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상돈 위원** 규제비용이 과연 제가 볼 때 이게 적절한 방법인가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말씀드렸습니다.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이시진** 앞으로 더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돈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한정애** 이상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옥주 위원** 더불어민주당 송옥주입니다.

환경공단 이사장님께 질문 있습니다.

일상생활소음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늘어남에 따라 생활소음을 유형별로 집계하여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층간소음 이외의 생활소음은 지자체에서 단순 민원으로 다루기 때문에 제대로 통제가 나오지 않고 이에 따라 유의미한 대책 마련도 안 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식의 개별 대응은 정부 차원의 소음 해결 대책을 마련하기보다는 당장의 민원 처리에만 급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부 차원에서 소음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마

련할 수 있도록 소음 분쟁을 통괄하고 원인 파악 및 분쟁을 조정할 곳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환경공단 이사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이시진** 예,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총괄기관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행법에서는 소음 문제는 지자체단체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층간소음 문제만은 저희 한국환경공단이 하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법적 권한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컨설팅해 주는 정도로만 저희들의 업무가 끝납니다. 거기서 시민.....

○**송옥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마저 질문드리겠습니다.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이시진** 예, 말씀하십시오.

○**송옥주 위원** 요즘 층간소음 이외에 생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소음들이 늘어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일상생활소음을 관리할 주체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환경공단은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에서 층간소음 분쟁 조정을 담당하고 있지요?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이시진** 예.

○**송옥주 위원** 센터에서 일상생활의 소음들도 접수해 조정한다면 소음 유형별 집계도 빠르고 국민들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어 긍정적인 기능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떨까요?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이시진** 예, 말씀하신 대로 저희 권한을 키워 주시면 저희들이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위원님 하신 말씀하고 조금 상충되는 측면이 있는데 너무 자꾸 비대해 지는 것에 대해서 걱정을 하셔서 그런데 층간소음 문제는 저희들이 대응하기에도 아주 벅잡니다, 민원은 많이 들어오고 인원은 적고. 그래서 지금도 저희들이 굉장히 벅찬 일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송옥주 위원** 인원과 예산을 확충하고 국회 차원에서 제도를 마련하면 충분히 이 부분을 커버할 수가 있고 총괄기능을 하실 수 있나요?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이시진** 예, 인원하고 예산만 주신다면 저희들은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송옥주 위원** 층간소음 분쟁은 최근 살인사건이 날 정도로 사회 이슈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실무 주체인 환경공단의 적극적인 업무수행이 필요하며 일상생활소음 또한 주체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리 주체를 따지며

이를 미룰 것이 아니라 소음 갈등을 해결하고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공단의 적극적인 업무 수행을 기대하며 이와 관련한 조정 방안을 본 의원실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이시진** 잘 알겠습니다.

○**송옥주 위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국립공원에 탐방프로그램이 지금 운영되고 있지요?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박보환** 예, 그렇습니다.

○**송옥주 위원** 진행한 지 몇 년째가 되고 있습니까?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박보환** 제가 정확한 실행연도는 모르겠지만 지금 281개 프로그램으로 지난해 경우에 170만 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송옥주 위원** 공단에서 탐방프로그램을 2000년부터 16년째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탐방프로그램에 의하면 국립공원의 현장 안전 매뉴얼에는 주요 안전사고에 대한 매뉴얼만 있을 뿐 항목에 포함된 성범죄나 노약자 안전 관리, 실종 등에 대한 매뉴얼이 전무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박보환** 예, 그렇습니다.

○**송옥주 위원** 국민의 안전을 위해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매뉴얼로 불시에 일어날지 모르는 사고에 대응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박보환** 좋은 지적 해주셨고요. 지금은 운영 매뉴얼하고 기본계획서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을 추가해서 매뉴얼을 개선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옥주 위원** 또한 국립공원 탐방프로그램 중에 미취학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숲(바다)학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현장학습형 프로그램인데요. 여기에도 간단한 응급조치요령만 나와 있고 실제로 아이들이 실종되거나 성범죄가 일어났을 경우에 담당 직원들의 행동요령이 전무합니다. 마찬가지로 답변 주실 거지요?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박보환** 예, 그런 안전사고 부분에 대해서는 매뉴얼이 있는데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추가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옥주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PPT 자료를 보시면 아까 이사장님께서 말씀하

신 탐방프로그램은 저렇게 안전관리계획서만 형식적으로 지금 제출하고 있고 구체적인 매뉴얼이 전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화학사고나 안전관리에 대한 세부 매뉴얼은 있어도 제대로 사고 대응이 되지 않는 현장들이 많듯이 국립공원에서도 16년째 주먹구구식의 허술한 매뉴얼만으로 탐방프로그램이 운영되어 왔다는 것에 저는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국립공원 탐방프로그램 관련 현장 안전관리 매뉴얼 개선 방안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저희 의원실로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박보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대리 한정애** 송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민의당 김삼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김삼화 위원** 국민의당 김삼화 위원입니다.

환경공단 이사장님께 여쭙 보겠습니다.

환경공단이 지금 유해환경에 대해서 모니터링 사업 대행하고 있지요?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이시진** 예, 그렇습니다.

○**김삼화 위원** 발전소 및 공장 등 제조업 분야에도 TMS시스템 운영하고 있는데 그 TMS시스템이 설치된 사업장은 총 563개로 환경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나오는데요, 이 시스템으로 감시할 수 있는 규제물질은 먼지, 황산화물 등 총 7개인데 먼지는 그냥 먼지만 측정할 뿐이지 미세먼지 PM₁₀ 또 초미세먼지 PM_{2.5}를 구분해서……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이시진** PM_{2.5}는 못 합니다.

○**김삼화 위원** 예, 구분해서 측정할 수는 없지요?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이시진** 예.

○**김삼화 위원** 그런데 최근에 환경부가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하나로 노후 석탄발전기 10기를 폐기, 대체 건설, 연료 전환을 하겠다 그렇게 했고 또 신규 석탄발전소 9기에 대해서 영흥화력 수준의 배출 허용기준을 적용하겠다 이렇게 한

건 알고 계시지요?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이시진 예.

○김삼화 위원 이런 석탄발전소 관련 대책이 나왔다는 것은 정부가 2015년부터 미세먼지를 PM_{2.5} 중심으로 하겠다고 한 것에 비춰서 볼 때 석탄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초미세먼지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정부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잠깐 화면을 좀 보시면 저것은 2012년 국무총리실 산하 KEI에서 펴 낸 국내 화력발전소 운영에 대한 대기질 영향보고서 일부입니다. 내용을 보면 분석 결과 석탄발전소에서 나오는 초미세먼지 가중농도로 인해서 조기사망자 수가 연간 1114명에 이른다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물론 이것은 TMS시스템에서 측정된 자료는 아니고 전국에 설치된 대기오염 측정망에서 측정한 미세먼지 오염농도를 기준으로 석탄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량을 추정한 것으로 그렇게 보이는데요.

앞서 TMS시스템으로는 초미세먼지를 구분해서 측정을 하지는 않고 있고 또 지금까지 초미세먼지는 대기오염물질 총량 규제에도 포함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미세먼지 배출기준을 강화하려면 먼저 미세먼지를 규제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대기환경법을 개정하고 발전소와 제조업에 먼지와 미세먼지를 구분해서 측정하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가요?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이시진 맞습니다.

○김삼화 위원 TMS시스템은 주로 대기업 중심으로 설치되어 있지요?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이시진 그렇습니다.

○김삼화 위원 대기오염물질 총량제 역시 대기업 중심인데 이들 업체에 탈황설비나 집진설비 등이 갖추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설비들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현장조사가 필요하다고 보이는데요. 그 현장조사를 실시해서 그 결과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이시진 알겠습니다.

○김삼화 위원 환경산업기술원장님께 여쭙 보겠습니다.

지난 17일에 환경부하고 수도권대기환경청에서 수도권에서 타이어 마모로 생기는 연간 미세먼지 발생량이 오는 2024년에 3000여t에 이를 것이다

이런 전망치를 보도를 했고요. 자동차가 1km 주행할 때 디젤에서 5mg의 먼지를 발생시키지만 반면에 타이어 마모로 생기는 먼지는 100mg으로 한 20배가 더 많다 이런 조사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이번 6월 3일 날 정부에서 미세먼지 대책을 내놨는데 그것을 보면 수송 부분의 미세먼지 주범은 경유차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타이어 마모로 발생하는 미세먼지 대책에 대해서는 저마모 타이어 기준 마련과 보급으로 간략히 그렇게 언급되어 있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런데 환경산업기술원에서는 업무보고 13페이지를 보면 저탄소·저마모·친환경 타이어 개발을 2015년의 주요성으로 보고를 하고 있고 또 고기능 소재를 통해서 연비를 향상시키고 미세먼지 발생량을 감소시키는 친환경 타이어를 개발했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 연구 성과와 관련해서 친환경자동차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보고서를 보면 연구개발 목표로 타이어 마모를 20% 감소시키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것 맞지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김용주 예.

○김삼화 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친환경자동차기술개발 연구개발보고서에서도 타이어 마모로 생기는 미세먼지가 도심 미세먼지 배출량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타이어 마모가 적은 타이어를 개발했다는 것은 굉장히 반가운 소식인데, 미세먼지 대책에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런데 그 대책을 보면 저마모 타이어 사용을 권고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어서 현실적으로 이를 어겨도 강제할 수단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마모 타이어 사용이 실효성을 거두려면 보완되어야 될 대책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김용주 현재 기술원 저마모 타이어는 미세먼지 저감에 상당히 중요한 기술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과거부터 대단히 주시해 왔고요. 그것이 개발되면, 사실은 기술 수준은 되나 강제적으로 이 타이어를 쓰라고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일단은 없을 것 같은데, 제가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될지는 환경부와 상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김삼화 위원** 혹시 생산자부담원칙에 따라서 타이어 제조업자한테 환경개선의무를 도입하는 방법이나 강제 기준 같은 것을 마련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김용주** 그것도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그렇게 되면 다른 미세 먼지를 발생시키는 여러 가지 발생 원인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 주위에도 많고 생산자도 많은데 그렇게 되면 그것이 공통으로 적용되어야 되는 문제를 면밀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환경부와 상의해 보겠습니다.

○**김삼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정애** 김삼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연구개발을 통해서 만들어 놓고 그게 실용화되지 않는다고 하면, 산업체에서야 타이어를 생산하는 업체는 당연히 저마모 타이어를 싫어라 하겠지요, 자주 안 팔리니까. 그런데 그걸 강제할 수 있는 방안까지 몇 가지의 대안을 만들어야만 되지,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좀 아니지 않나 싶기는 합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김용주** 적극적으로 환경부에 도움을 요청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정애** 안 그러면 그걸 만든 이유가 없는 거지요. 개발을 한 이유가 없는 거지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김용주**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정애**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기 의왕시·과천시 출신의 신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창현 위원**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습니다.

환경공단, 16쪽의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 1만 4000건 상담서비스 하시고 현장진단 4500건인데, 현장진단이라는 게 주로 어떤 진단인가요? 가서 소음 측정하는 겁니까, 위층 아래층?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이시진** 그렇습니다. 소음 측정도 하고 가해자 측과 피해자 측 상담도 합니다.

○**신창현 위원** 4500건 측정하시면서 가해자, 피해자 또는 위·아래층 거주자 간에 원만하게 합의한 게 몇 건이나 되나요?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이시진** 극히 드뭅니다.

○**신창현 위원** 극히 드물어요?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이시진** 예, 이게 저희들이 한다고 해도 피해자 측은 완벽한 소음 제거가 되기를 바라고, 가해자 측은 한다고 하는데도……

○**신창현 위원** 4500건 중에 극히 드문 게 몇 % 정도나 되나요?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이시진** 정확한 퍼센티지는 제가 나중에 올리겠습니다.

○**신창현 위원** 나중에 얘기해 주시고요.

그게 극히 드물다면 좀 이상한 것이 중앙환경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층간소음 분쟁 때문에 현장 조사 나가면 심사관이 나와서 조사하는 것만으로도 위층 아래층 거주자 간에 2명 중 1명은 대개 합의를 해요, 위층 거주자가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유아용 매트를 깎아내거나 아이들 교육을 잘 시키겠다든가 슬리퍼를 신고 다니게 하겠다든가 무슨 물건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교육을 하겠다든가.

중요한 건 소음이라는 것은 감정적인 거라 화가 나면 더 크게 들리고 못 참지 않습니까?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이시진** 그렇습니다.

○**신창현 위원** 그래서 극단적인 사고까지 나는데 제가 현장진단 4500건 했다는 이 보고를 보면서 환경공단이 너무 기술적으로만 접근하는 게 아닌가, 이게 사람의 문제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착안을 해서, 결국은 분쟁을 완화하는 게……

목적이 뭐니까? 인력도 적고 장비도 적고 예산도 없는 상태에서 고생하시는 줄 알지만 환경공단이 이웃사이센터를 운영하는 주된 목적은 위·아래층 거주자 간에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는 것은 합의를 유도하는 것이 예산 절감도 되고 서로에게도 좋잖아요.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이시진** 그렇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신창현 위원** 그 점에서 나중에 저하고 깊이 있는 얘기 좀 하시지요.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이시진** 좋습니다.

○**신창현 위원** 다음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님, 설악산국립공원의 중청봉대피소 왜 운영하세요?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박보환** 설악산국립공원의 중청대피소만 말씀이십니까, 전체 대피소……

○**신창현 위원** 그것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운영

하시는 거지요?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박보환 예, 그렇습니다.

○신창현 위원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왜 운영하세요? 아니, 양양군 케이블카는 대청봉 근처로 오지 말라고 하고 그렇게 두 번, 세 번씩 반려하면서 왜 중청봉대피소에, 그렇게 사람 많이 오는 시설은 대청봉 코밑에 지어 놓고 버젓이 이용료 받고 운영하시는 이유가 뭐니까?

그게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운영할 시설인가요?

○조원진 위원 옛날부터 있었으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신창현 위원 아, 그런 거 알아요. 아는데 지금이라도 하지 말아야지요, 이게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설립·운영 취지에 안 맞다고 생각하면. 왜 그냥 계속 가세요? 한 번이라도 그 문제에 의문을 제기해 본 적 있나요, 이걸 국립공원관리공단이 꼭 해야 되는가?

왜 거기서 라면 팔아요? 라면 한 그릇에 3000원씩 파는 것 아십니까? 대청봉 꼭대기 밑에서 3000원짜리 라면을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왜 팔아야 돼요? 그게 국립공원 보호 목적하고 어떻게 맞는 거예요?

이름이 대피소예요. 모처럼 올라간 사람이 살으라고, 생명을 위해서, 그러면 최소한의 생존 시설로 유지해야지요. 외국의 대피소도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숙박 제공해서 일출 보러 저녁에 올라가서 거기에서 자고 일어나서 일출 보는 호텔은 아니잖아요. 그런 것 놔두니까 대통령이 중청봉대피소 보고 왜 산꼭대기에 우리는 호텔 못 하나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대통령 잘 모셔요, 그런 난센스 얘기 나오지 않게.

두 번째, 그런데 달마봉 등산로는 속초에서 설악문화제 하면서 하루나 이틀만 축제기간에 잠깐 개방해 달라는데 그건 또 왜 그렇게 인색하게 개방 안 해 줍니까? 속초가 무슨 시설을 하자는 것도 아니고 축제하기 위해서 1년에 한 번 하는데 하루나 이틀만 잠시 개방해서 그 아름다운 경관을 보게 하자는 건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대답 좀 해 주세요.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박보환 위원님이 지

적하신 부분은 제가 별도로 검토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창현 위원 꼭 얘기해 주세요.

○위원장대리 한정애 신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보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보라 위원 신보라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라서 국립공원을 찾는 분들이 꽤 많겠지요, 이사장님?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박보환 예, 그렇습니다.

○신보라 위원 그런데 국립공원의 대피소 운영·관리와 관련한 지침을 2013년 8월에 만드셨어요, 안전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그 10조의 대피 계획 수립에 보면 자체 대피 계획을 수립하고 매 분기 1회 이상 탐방객을 대상으로 대피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 4회 이상 대피훈련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우리 위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현재까지 열세 곳 중에 그 규정을 지킨 곳이 단 한 곳도 없었다는 겁니다.

지난해에는 단 한 차례도 대피 훈련을 실시하지 않은 곳이 일곱 군데로 드러났습니다. 설악산에 있는 대피소 네 곳은 올해 대피훈련 계획도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이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박보환 예, 알고 있었습니다.

○신보라 위원 국립공원관리공단 블로그에 제가 들어가 봤는데요, 거기에는 2015년 11월 기준으로 국립공원 대피소가 열아홉 곳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위원실에 제출한 자료는 열세 곳으로 보내 주셨어요. 이 숫자에 대한 괴리는 왜 벌어지는 것입니까?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박보환 직영하는 것과 그다음에 임대, 무인, 개인으로……

○신보라 위원 예, 맞습니다. 직영과 임대와 개인이 있는 거지요.

그런데 임대 대피소를 비롯해서 개인이 운영하

는 대피소의 경우에 일곱 곳이 있습니다. 그곳은 대피훈련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아예 점검조차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관련해서 관리공단에서 그건 잘 모르겠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임대 대피소나 개인 대피소 부근에서 재난이 발생해서 이용객들이, 탐방객들이 대피할 경우에는 직영이 아니므로 신경 안 쓰실 겁니까?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박보환 위원님, 우선 지침을 정해 놓고 분기에 한 번씩 대피훈련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지침을 정해 놓고 훈련을 제대로 실시 안 한 부분에 대해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어쨌든 잘못된 거고요.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탐방객들이 지쳐서 대피소에 오는데 대피훈련을 하기가 좀 그랬다고 하는데, 어쨌든 앞으로도 대피훈련을 제대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임대하고 무인과 개인 부분도 일부는, 치발목 같은 데는 지금 우리가 직영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직영하는 대피소 못지않게 저희들이 전 대피소에 대한 안전관리 부분을 전면 재검토해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보라 위원 결국 서류상으로만 지침으로 존재할 뿐 실천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별도 조사단을 구성해서 진상도 명확하게 규명했으면 좋겠고요.

재발방지책과 징계대책 등을 철저하게 규명해서 가지고 본 위원에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박보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보라 위원 계속 이 PPT와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현재 사회적일자리사업으로 녹색순찰대와 재난구조대라는 국립공원지킴이 운영을 하고 계시지요?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박보환 예, 그렇습니다.

○신보라 위원 알고 계시지요?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박보환 예.

○신보라 위원 채용과 관련해서 감사원 지적도 있었는데 그와 관련해서 제가 서류 제출 부분들을 살펴봤습니다.

이사장님은 녹색순찰대가 어떤 업무를 하는 걸로 알고 계시지요?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박보환 주로 탐방객 안내하고 청결 유지하고 또 탐방객들 안내·계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신보라 위원 예, 맞습니다. PPT 자료에서 보더라도 녹색순찰대는 청결 유지, 보호, 공원시설 보수·유지 이런 일들을 하고요.

운영지침에서의 임무 또한 산불 감시랄지 공원 청소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녹색순찰대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서류제출 항목을 보면 서류심사 기준에 관련 자격증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관련 자격증 목록을 좀 보시지요.

녹색순찰대 ‘상’으로 표시되어 있는 자격증이 컴퓨터활용능력, 회계, 전산세무, 한국어능력시험 이런 것들을 관련 자격증으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녹색순찰대 업무하고 맞는 자격증 인가요?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박보환 위원님, 현재 녹색순찰대가 탐방지원센터에서 탐방안내 업무도 하기 때문이에요……

○신보라 위원 안내 업무하고 회계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박보환 공단의 기본 업무를 좀 알아야 된다는 차원에서 이 자격증을 하는 것 같은데요.

(한정에 간사, 홍영표 위원장과 사회교대)

○신보라 위원 그 전에 보시지요. 임무에 보시면 임무와 관련된 자격증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무와 관련 있다고 보기 어렵지 않나요? 제가 보기에 전혀 관계없는 자료를 제출토록 하고, 또 배점에 대해서도 보시지요. 배점에서 보면 이것과 관련된 자격증의 배점을 25점을 뒀는데 관련한 분야의 경력 기간에 5년 이상의 기록도 25점으로 배점을 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전혀 안 맞는 역할을 지금 서류제출에서 하고 있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 채용절차의 공정성에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박보환 배점도 제가 다시 한 번 들여다보고요, 이 자격증 소유가 그야말로 근무하는 데 실효성이 있는지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보라 위원 채용절차 개선방안에 대해서 다

시 조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박보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영표 신보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 대구 달서구병 출신 조원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조원진 위원 한국상수도협회 보면 말이지요. 협회장님, 잘 보이세요?

앞으로 나오시렵니까?

국제물산업박람회 성공적으로 잘 끝났지요? 광주에서 했습니까?

○한국상수도협회상근부회장 최용철 부산 벡스코에서 했습니다.

○조원진 위원 이게 상수도 관련해서 주로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한국상수도협회상근부회장 최용철 상수도 관련해서 저희가 우선 수도용 자재 및 제품에 대한 인증사업을 합니다.

○조원진 위원 상수도 노후 하수관 이런 부분들은 다 지자체……

○한국상수도협회상근부회장 최용철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경우에……

○조원진 위원 며칠 전에 서울시장이 나와서 구멍 하나 찾았다고 헬멧 쓰고 되게 자랑하는 것 같은데, 그건 뭐예요? 보셨어요?

○한국상수도협회상근부회장 최용철 예, 봤습니다.

○조원진 위원 그게 뭐니까? 싱크홀 요만한 구멍 하나 찾아 놓고 대단한 획기적인 것같이 자랑 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실질적으로 노후하수관 1위가 서울이고 2위가 대구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기술적으로 어떻게 반영해 줄 것인지, 그냥 선전을 해 가지고 되는 문제도 아니고, 노후도시들은 이게 노후도가 20년 이상 넘은 게 거의 40%, 50% 가까이 되는데 이런 데 대해서 기술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상수도협회상근부회장 최용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원진 위원 잠깐 들어가시렵니까?

○한국상수도협회상근부회장 최용철 예.

○조원진 위원 또 하나는, 지방상수도 현대화사

업이라고 환경공단 인사말 3쪽에 나왔는데요.

현대화사업 이거 뭘 하는 겁니까?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이시진 지금 현재 전국의 땅 밑에 있는 상수관로가 오래된 것이 약 6만k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있는 정수장 전체의 58%가 지은 지 20년이 넘습니다.

○조원진 위원 길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10년 이상 사실은 지방상수도 노후 문제 가지고 현대화하자 이래서 지속적으로 상수도 지도를 만들자 이렇게 얘기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거 다 됐습니까?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이시진 하수관로는 작년, 제작년에 죽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상수도는 사실 관망은 거의 못 하고 있습니다. 예산 문제 때문에.

○조원진 위원 이 문제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우리 환노위 차원에서, 이게 지금 노후 상수도가 환경문제도 환경문제지만 사실은 누수되는 물들이 너무 많아서……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이시진 그것은 1년에 5억 t 정도……

○조원진 위원 만드는 비용에 비하면 효율이 너무 떨어지는 부분이지요.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이시진 지금 재정은 확보가 되었습니다. 지금 상수도 현대화사업은 3조 300억을 투자하기로……

○조원진 위원 그 일을 지속적으로 좀 실행을 해서 누수되는 부분을 막아야 되는데……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이시진 그렇습니다.

○조원진 위원 이번에, 6월 달입니까?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하자 이렇게 결정했지 않습니까?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이시진 예, 그렇습니다.

○조원진 위원 잘한 결정인 것 같고요.

이게 군 지역 스무 군데 먼저 하고 그다음에 있는데, 도농복합지역도 좀 집어넣었으면 좋겠는데 그건 다 빠졌네요?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이시진 우선 내년도 예산은 한 500억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이……

○조원진 위원 내년도 예산은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부터는 도농복합지역도 좀 추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이시진 예, 그렇습니다. 점차 확대를 해야지요.

○조원진 위원 국립공원 추진 부분 있지요?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박보환 예.

○조원진 위원 지금 무등산이 스물한 번째 국립공원 되고 그다음 예정지가 어디입니까?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박보환 태백산이 지금 8월 22일부로……

○조원진 위원 태백산 그다음에 신안갯벌, 팔공산 그렇게 됩니까?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박보환 예.

○조원진 위원 한 가지, 국립공원 많이 하는 게 좋은 거예요?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이야 좋은데, 도립공원도 있고 이렇게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다 국립공원화 시키면 그게 좋은 것인가요?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박보환 그런데 위원님, 환경부와 저희 공단에서 일방적으로 국립공원 지정……

○조원진 위원 그거 제가 몰라서 하는 소리가, 그게 정부적……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정부의 방향 지향성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예요. 전부 국립공원 신청해서 그것을 국립공원 하는 것이 과연 국민들한테 좋은 것인지 그렇지 않고 국립공원 하는 데 좀 엄격하게 하는 게 좋은지 그 방향 지향성은 있어야 된다……

들어올 때야 찬반이 있다가 협의가 되면 전체적으로 쪽 하자 이렇게 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협의를 해 주시고요.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박보환 예.

○조원진 위원 그다음에 반달가슴곰하고 여우, 산양 했는데, 그다음은 뭐 합니까?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박보환 지금 현재 반달가슴곰하고 산양, 여우가 지금……

○조원진 위원 아니, 호랑이는 어떻게 해요, 호랑이는? 그런 계획은 없어요?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박보환 아직은……

○조원진 위원 없습니까?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박보환 예, 아직 계획하지는……

○조원진 위원 문제가 뭐지요, 그거 못 하는 이유가?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박보환 그것은 아마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결정해야 될 사안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조원진 위원 그 부분도 한번……

모르겠어요. 혹여 우리 산들이 그렇게 개발도 많이 되고 사람이 많이 다녀서 등산객들의 안전 문제 때문에 그러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가장 큰 관심사가 그것인데 반달곰까지는 가고 산양하고 여우까지는 가는데……

그것은 어떤 계획도 없는가요?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박보환 그것은 일단 안전 문제라든가 서식지 문제 같은 것을 전문가들과 협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원진 위원 별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다음에 자료 좀 제출해 주시지요.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박보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영표 조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도 정말 조원진 위원님 의견에 대해서 동의하면서, 모든 우리나라에 있는 산을 다 국립공원 하는 게 좋은 건가요? 관리를 그렇게 다 할 수 있습니까?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박보환 지금 우리 공단의 면적이 바다까지 포함해서 전체 6.6%거든요. 육상 같은 경우에는 한 4% 정도 되는데, 우선 자연자원 조사를 해서 자연자원이 얼마만큼 보존가치가 있느냐, 그다음에 문화자원 같은 것을 다 고려해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영표 다른 나라는 어떻습니까? 미국은 몇 퍼센트를 국립공원 했나요?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박보환 퍼센티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 58개 국립공원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영표 그것은 나라가 크니까……

하여튼 궁금한 점이었습니다.

다음 강병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강병원 위원 예.

○위원장 홍영표 그러면 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구를 출신 강병원 위원의 보충질의가 있겠습니까.

○강병원 위원 여기 나와 계시는 기관장님들께서는 환경부 정책을 현장에서 발로 뛰며 수행하고 계시는 거지요. 아마 제일 고생이 많으신 분들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별한 어려운 질문이 아니고 칭찬 릴레이를 해 보려고 합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이재현 사장님께 한번

여쭙 보겠습니다.

제가 환경부 업무보고를 받고 미세먼지에 대한 질문들을 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신규 석탄발전소를 오히려 더 만드는데 환경부가 기재부나 산자부 이런 쪽에는 입장을 제대로 말씀을 못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오히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업무보고를 보니까 태양광, 재생에너지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석탄발전소 하나 줄이기’ 이런 제목까지 하나 달아 놓으셨는데요. 환경부장관께서 이것을 하나 말씀해 주셨으면 제가 질문을 조금 수준을 낮춰서 했을 텐데 이런 말씀이 전혀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재현 사장께서 한 2분 정도 석탄화력발전소 하나 줄이기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시지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사장 이재현 수도권매립지는 1, 2, 3, 4매립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2개의 매립지가 지금 다 차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이제 3-1매립지를 한 10여 년간 쓸 것인데 나머지는 유휴부지로 남아 있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하면 좋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최근에 또 미세먼지가 심각해져서 저희들이 자연력에너지를 좀 분석하게 됐고, 그 자연력에너지 중에서……

과거에는 태양광 발전이 산림 훼손이랄지 효율성이랄지 경제성 면에서 매우 뒤떨어졌지만 최근에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 환경적으로도 굉장히 이롭고 그다음에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기술이 발전을 해서 그 4매립지의 유휴부지에 100MW급을 할 수 있다라는 타당성을 저희들이 마련하게 됐고, 그 옆에 인공호수가 있습니다. 그게 일산 호수공원의 한 5.5배가 되는데 거기서, 수상에 태양광 발전을 하게 되면 육지보다도 효율성이 1.5배가 더 높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한 20~30MW를 하고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자원화 시설 이용 24%를 바이오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업무보고에 보고드렸습시다만 86%까지 올리게 되면 거기에서도 한 70MW급을 하게 되면, 토털해서 200MW급을 하게 되면 석탄화력발전소 1기의 대체는 되기 때문에 우리 매립지를, 유휴부지를 잘 활용하는 측면 그다음에 미세먼지를 줄이는 측면 그리고 이 부분은 우리 매립지 내에 지금 재정 적자를 겪고 있는데 재정 적자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에너지 자립도뿐만 아니라 인근의 주민들에게도 오히려 잉여량을 혜택을 줄 수 있는 일석사조의 효과를 볼 수 있다라는 강점을 갖고 있어서 오늘 업무보고에 보고를 하게 된 겁니다.

○강병원 위원 감사합니다.

꼭 성공적으로 잘 추진해서 가지고 석탄화력발전소 하나 줄이는 데 모범적인 곳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사장 이재현 예, 알겠습니다.

○강병원 위원 국립공원관리공단 박보환 이사장님께 하나 여쭙 보고 싶습니다.

요즘 보면 국립공원에서는 텐트를 아무 데나 치고 잘 수가 없지요?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박보환 예, 그렇습니다.

○강병원 위원 예, 그렇지요.

그런데 요즘 이렇게 캠핑을 하시고 야외에서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아마 국립공원 내에서도 그런 것을 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이런 것들에 관해서, 캠핑 수요가 증가하고 그리고 힐링 문화가 확산하는 것에 대해서 아마 국립공원관리공단 차원에서도 좋은 계획이 있으실 것 같은데, 하나 좀 말씀해 주시지요.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박보환 그러니까 야영장이 좀 부족한데요. 지금 야영장이 성수기 때는 한 40 대 1 정도로 되어서 턱없이 부족한 부분인데 그렇다고 해서, 환경문제도 고려해야 되고 해서 막 늘릴 수는 없고요. 여러 가지 환경문제도 고려하고 해서 점진적으로 늘려 갈 계획으로 그렇게 있습니다.

○강병원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들도 환경과 함께 조화롭게 해서 가지고 우리 국민들에게, 캠핑 수요가 증가하는 데 맞게끔 잘 좀 해 주셔서 우리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국립공원관리공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박보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병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홍영표 강병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마지막 순서로 부산 해운대갑출신 하태경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河泰慶 위원 대기관리과 계시지요? 좀 나와

보세요, 환경부 대기관리과.

○위원장 홍영표 지금 계십니까?

○환경부기후대기정책관 나정균 기후대기정책관입니다.

○河泰慶 위원 미세먼지 관련해서……

비산먼지 비중이 한 10% 이상 되잖아요.

(영상자료를 보며)

화단인데, 저렇게 불룩하게 고봉밥처럼 저런 화단이 대부분이잖아요, 우리나라에.

그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여기도 그렇고요.

그런데 저기는 비가 오면 흙이 흘러내리잖아요. 그리고 비 그치고 마르면 그 흙이 차들 지나면 먼지로 퍼지고, 국회도 그래요, 국회 안에도. 화단이 저렇게 되어 있는데……

그다음 사진.

어떤 학교 화단인데 내려가 있어요. 그러면 안 흐르잖아요.

그다음 사진.

여기도 같고요.

그런데 저게 관리는 지자체에서 하는데, 제 생각에는 저 고봉식으로 된 화단은 금지시켜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래도 미세먼지가 심각한데.

금지시키는 방법이 법을 바꾸는 게 좋을지 아니면 밑의 단위에서 가능한지 그것을 검토해서 보고 좀 해 주세요. 아니면 지금 답변할 수 있으면 하시고.

○환경부기후대기정책관 나정균 이번 특별대책에 저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설계기준을 오목형으로, 화단을 오목형으로 바꾸는 그런 도로설계기준을 개정하는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河泰慶 위원 도로설계기준을 개정해요?

○환경부기후대기정책관 나정균 예, 도로 옆의 화단에서 흘러내려서……

○河泰慶 위원 법 개정이 아니라 그 밑의……

○환경부기후대기정책관 나정균 저희들이 지금 파악하기로는 도로설계기준에 저런 부분들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번 특별대책에 그 꼭지가 한 꼭지가 있고요.

○河泰慶 위원 그러면 지자체가 집행이 잘 될까요?

○환경부기후대기정책관 나정균 일단 설계기준을 명확히 해 주면 도로를 설계할 때 그 기준을 보기 때문에……

○河泰慶 위원 아무튼 지금 미세먼지가 전국적인 관심사이고 걱정을 많이 하기 때문에 좀 더 국민들한테 메시지가 강력하게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고민을 해서 나중에 보고 좀 해 주세요.

○환경부기후대기정책관 나정균 예, 알겠습니다.

○河泰慶 위원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김종석 원장님, 하나 여쭙 볼게요.

○한국기상산업진흥원장 김종석 예.

○河泰慶 위원 지난 4월 16일 날 구마모토 7.3 지진이 일어나고, 제가 부산에 있는데 저도 지진을 느꼈어요.

그런데 지진 같은 경우는 예보할 수 있는 능력이 아직 안 되나요, 세계적으로도?

○한국기상산업진흥원장 김종석 위원님, 죄송한데 재해는……

○河泰慶 위원 관계없어요?

○한국기상산업진흥원장 김종석 예, 산업진흥……

기상으로 인해서 산업을 발전시키는……

○河泰慶 위원 누가 답변하시겠어요?

수치예보모델 담당국장님, 할 수 있나요?

○기상청기상서비스진흥국장 유희동 기상청 담당국장입니다.

○河泰慶 위원 예, 답변을 하시지요.

○기상청기상서비스진흥국장 유희동 제가 지진 화산관리관은 아닙니다만 남아 있는 국장이 저 혼자라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지진 예보가 불가능합니다.

○河泰慶 위원 불가능합니까?

○기상청기상서비스진흥국장 유희동 예.

○河泰慶 위원 그러면 추세는 알 수 있습니까?

저는 부산에 한 40년 넘게 살았는데 그런 것을 느낀 게 처음인데요. 앞으로는 더 강력한 지진을 느낄까요, 아니면……

○기상청기상서비스진흥국장 유희동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그렇게 앞으로 가장 강력한 지진이 온다는 그런 조짐은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진은 가장 중요한 것은 빨리 감지를 해서 빨리 전파하는 게 지금 현재까지는 가장 좋은 기술입니다.

○河泰慶 위원 만약 백두산의 화산이 폭발해서, 이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 그러면 우리 남쪽으로까지는 영향이 없어요? 거기서 그냥 끝나요?

○기상청기상서비스진흥국장 유희동 일단 북서, 바람의 방향에 따라서 문제가 되는데요. 만약 거

울에 백두산 화산이 폭발한다고 그러면 남쪽까지, 북서풍을 통해서 남쪽까지 영향이 있을 수 있고요.

○**河泰慶 위원** 제가 관심사여서 물어볼게요.

중국이 중국 동해안, 우리로 치면 서해안이지요. 거기에 원자력발전소가 굉장히 많이 있고 있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는 일본 후쿠시마 같은 지진이나 쓰나미나 이런 피해로 원전에 어떤 해가, 영향을 입어서 우리나라까지 방사선이 날아올 그럴 가능성은 없나요?

○**기상청기상서비스진흥국장 유희동** 후쿠시마에서 일어나는 것보다 만약 우리 서해, 중국 동해안에서 만약 그런 지진이 일어난다고 그러면 기류상으로는 우리나라 쪽이 더 위험합니다.

○**河泰慶 위원** 그런 문제는 한중 간에 협의하나요?

누가 답변해 주실 사람 없나요?

○**기상청기상서비스진흥국장 유희동** 일단 그 부분에 있어서는 중국의 원자력발전소를 중국 동해안에 설치하고 이런 쪽 협의나 이런 것은 IAEA 쪽에서 전체 관할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특별히 기상당국이나 이런 쪽에서는 그런 내용에 대한 협의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河泰慶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조원진 위원** 환경부 관련 한중 협의를 하고 있어요.

○**위원장 홍영표** 하태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를 요청하신 위원님이 두 분 계십니다, 이정미 위원님, 이상돈 위원님.

두 분의 추가질의를 5분씩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의당 이정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미 위원** 자연보전국장님,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설악산 케이블카의 환경성만큼 중요한 것이 안전성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케이블카 건설과정에서 지주 간의 거리가 유럽 기준에 500m라고 되어 있는데, 500m 이내로 지주 간 거리를 유지하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설악산은 500m가 넘는 곳이 4곳이 있는 것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풍속영향을 조사를 하는데 12월 16일부터 6월 15일까지 6개월간 그것을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설악산이 지금 굉장히 높은 곳까지 케이블카가 가게 되

어 있고, 사실 풍속이 굉장히 강한 때는 태풍이 부는 장마철 아닙니까? 그런데 조사기간에 거리가 빠져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풍력을 조사하는 측정기가 중턱 하나에만 있습니다. 상부에 없고 하부에 없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실질적인 안전성을, 지금 이런 설계방식이나 조사방식으로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부자연보전국장 이민호** 먼저 케이블카 지주 간의 거리가 500m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은 사실은 작년 국감 때도 얘기가 좀 나왔었던 거고요. 그것은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유럽에서도 확인이 되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 문제는 그렇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풍속과 관련된 것은 7개 부대 조건에 풍속 등 안전과 관련된 것들을 보완을 하라고 최대한 점검하고, 지주에 나중에 풍향계 등을 설치를 해서……

○**이정미 위원** 그 후에 지금 설치를 했습니까?

○**환경부자연보전국장 이민호** 아닙니다. 아직 공사가 안 들어갔습니다. 나중에 지주 설치 이후에 풍향계 등을 설치를 해서 지정풍속을 넘었을 때는 자동으로 멈출 수 있도록 이런 보완장치를 하도록 하겠고요……

○**이정미 위원** 아니지요. 실제 지금 풍속계를 달아서 거기에 그런 안전한 설계가 가능한지에 대한 판단을 해야지, 설치해 놓고 나서 그다음에 풍속을 측정하겠다 이렇게 되면 일의 순서가 거꾸로 된 것 아닙니까?

그렇게 케이블카를 설치했을 때 안전성이 담보되는가에 대한 충분한 조사가 있고 나서 케이블카가 들어가야지요. 설치해 놓고 나서 멈추게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일의 순서가 맞지 않습니다.

○**환경부자연보전국장 이민호** 위원님 말씀대로 그 측면하고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운영 중에서의 문제를 말씀드린 거고요. 공사를 하기 전에 설계를 하기 위해서 안전성과 관련된 것은 충분히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내용들은 환경영향평가서 분안 협의할 때 들어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미 위원** 이런 것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을 경우,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을 경우 설악산 케이블카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저는 환경부에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하겠고요.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님께 여쭙 보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하실 때 주요 목적 중에 국립공원의 생태계·서식지 안정화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설악산 케이블카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일곱 가지 부대조건 중에 산양, 멸종위기보호종에 대한 대책 수립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산양의 개체수, 건강상태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보호대책을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영상촬영, 배설물 이런 조사뿐만 아니라 이 산양의 생활방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놓고 볼 때 정확한 개체수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배설물, 분변에 대한 유전자 조사까지가 필요하다 이것이 지난번 원주지방환경청에서 보완의견서로 까지 제출이 됐습니다. 양 모니터링을 위해서는 무인센서 카메라나 배설물 유전자 분석에 따른 이동경로 파악 등을 확인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분변에 대한 유전자 조사사업 계획이 없으시지요?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박보환 위원님, 지금 문화재청 주관으로 해서 강원대학교하고 저희 공단의 중북원기술원 이렇게 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 중북원기술원에서는 현장조사를 중심으로 하고 있고 주관 부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화재청이기 때문에 그 유전자 분석·조사하는 것은 문화재청하고 한번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미 위원 이것은 반드시 포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지금 이사장님의 주요 업무 중의 하나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박보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홍영표 이정미 위원 끝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질의 마지막 순서로 국민의당의 이상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돈 위원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님께 한 두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정미 위원께서도 굉장히 기술적인 것 많은 질문을 하셨는데요. 제가 느끼기에는 이렇게 자꾸만 기술적인 것, 디테일에 빠지면 오히려

국립공원의 본질과 좀 멀어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 생각은 국립공원을 지정하는 것을 남발해서는 안 되지만 국립공원으로 일단 지정하게 되면 국립공원은 국립공원답게 보존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국립공원 자체가 케이블카는 도무지 어울리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물론 답변하기 좀 곤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마는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 임기를 거의 끝내시는 분으로서 제 생각에 어느 정도 동감하는 바가 있으신지 한번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박보환 위원님, 이 케이블카가 환경부 공원위원회에서 공원계획 변경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로서는 그 부분은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돈 위원 저도 그런 답변이 나올 거를 예상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걱정하는 바는 이제 이사장님 임기가 거의 다 되어 가는데 후임 이사장에 도대체 누가 오느냐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향간의 소문에 의하면 퇴직관료, 그것도 특히 4대강사업 같은 개발을 열렬히 지지했던 관료가 유력하다는 소문이 있어서, 저는 그 소문이 진실이 아니기를 믿고 싶습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거기다 이사장이신가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사장 이재현 사장입니다.

○이상돈 위원 사장이신가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사장 이재현 예.

○이상돈 위원 지난 6월 달에 서울시, 인천, 경기도하고 또 환경부하고 연장하는 것 합의를 다 봤지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사장 이재현 작년 6월 28일……

○이상돈 위원 작년 6월.

그래서 이렇게 쓰게 되는데, 혹시 이후에 매립종료가 되면 토지 소유·이용에 대한 어떤 그런 합의를 갖고 계시나요? 알려주시지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사장 이재현 대답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상돈 위원 예.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사장 이재현 6월 28일 4자 합의문에 보면 같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소유주는 환경부와 서울시가 분

담해서 갖고 있는데 매립지 연장조건으로 단계별로 소유권, 매립면허권을 인천시로 넘어가는 형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부의 소유권하고 서울시의 소유권인데 나중에 매립지 같은 경우는 매립을 완료한 후에 하도록 이렇게 단계별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돈 위원** 지금 여기에도 나와 있지만 공사가 재정이 굉장히 열악하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공사가 좀 지나치게 양보한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은 하지 않습니까?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사장 이재현** 매립지 연장 그 문제하고 공사의 재정문제하고는 직접적 관련이라기보다는 2009년부터 여러 가지 이유가 좀 있습니다. 자구적 노력도 미비한 부분도 있었지만 그러나 작년에 처음으로 저희들이 대폭적인 자구적 노력을 해서 어느 정도의 방안이 지금 마련이 되고 있고, 좀 더 구체적인 안을 전문기관을 통해서 좀 보충한 다음에 금년 말까지, 내년 초까지는 공식적으로 그 어젠다를 좀 다룰 것 같습니다.

○**이상돈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영표** 이상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까지 다 마쳤습니다.

저도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매립지공사 이 사장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사장 이재현** 예, 위원장님.

○**위원장 홍영표** 지금 이상돈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아시겠지만 인천시와 서울시가 작년 6월에 매립허가권, 토지소유권을 인천에 장기적으로는 이양하겠다 이렇게 했고 그 합의사항 중의 하나가, 크게 해서 네 가지 합의사항이지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사장 이재현** 예.

○**위원장 홍영표** 그중의 하나가 수도권매립지공사를 인천으로 이전하겠다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장님으로서 입장은 어떻습니까?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사장 이재현** 저의 입장이라기보다는 4자 합의문에 자세히 보시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관을 하지만 거기에 선결적인 조건이 뚜렷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인천시는 권리와 의무 일체를 가져가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인천시가 갈등 해결방안을 마련해서 공사노

조와 그다음에 지역주민들과 협의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그 협의를 된 후에 3개 시도에서 동의 절차가 있기 때문에 현재 그 절차가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그 부분 가지고 공식적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홍영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인천에서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를 인천으로 이관하는 문제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가 아주 첨예하게 맞서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선 하나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적자 기업입니다. 아까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하지만, 지금 대략 한 어느 정도 적자지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2764억, 그렇지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사장 이재현** 예.

○**위원장 홍영표** 거의 3000억에 가까운 적자 기업입니다. 그것을 지자체에다가 이관하는 것 자체가 납득할 수 없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수도권 2500만 시민들의 쓰레기를 처리하는 데입니다. 그래서 사실 국가의 중요한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자체에다가 이관했을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쓰레기 처리에 대한 어떤 전문인력의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인천시에다가 이관하겠다, 그것도 지금까지 인천시민들이 수도권매립지 때문에 받은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거론된다는 것 자체가 참 납득하기 힘듭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게 지난번 19대 우리 환노위 상임위원회에서 논의가 되다가 진전이 없는 것으로 압니다. 이 수도권매립지 문제는, 지금 인천시민들은 한 20년 이상 이 쓰레기매립장 때문에 어떤 여러 가지 환경피해의 당사자들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예민한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기가 힘들 겁니다. 이미 환경부, 인천시, 서울시가 다 협의를 해서 관리공사를 인천시에다 주기로 했는데, 제가 여기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이렇게 적자 기업을, 3000억이나 지금 현재 적자가 나 있는 기업을 지자체에다가 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환경부에서 나와 계시면 좀 감안을 하시고, 이 수도권매립지 문제는 여전히

지금 잠재적인 인화력이 큰 사안입니다. 지금 인천에서 많은 시민들은 수도권매립지를 더 이상, 올해 이후로 더 이상 활용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다시 아마 협의를 해야 된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견 있으십니까?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사장 이재현 아닙니다. 아까 보고 올렸다고 해서 갈등 해결방안에 그러한 재정적자 문제랄지 그런 부분이 다 포함되어서 같이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홍영표 그러면 추가질의까지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습니다.

장석춘 위원, 하태경 위원, 송옥주 위원, 이정미 위원, 홍영표 위원, 김삼화 위원, 조원진 위원, 문진국 위원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습니다. 해당 기관에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20대 국회 첫 번째 상임위인데 오늘 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은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각종 환경 현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다양한 정책적 조언이 있었습니다. 해당기관에서는 위원님들의 다양한 견해와 조언을 세심하게 검토하여 정책에 반영할 것은 반영하고 참고할 수 있는 부분은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각 기관장님들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 준비하시고 또 오늘 회의에 참석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1분 산회)

소위원회 구성

소위원회	위원명	교섭단체
환경 (10인)	문진국 임이자 장석춘 조원진 하태경	새누리당(5)
	서형수 송옥주 신창현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4)
	이상돈	국민의당(1)

소위원회	위원명	교섭단체
고용노동 (10인)	문진국 신보라 임이자 조원진 ◎하태경	새누리당(5)
	강병원 이용득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3)
	김삼화	국민의당(1)
	이정미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1)
예산결산 기금심사 (8인)	신보라 장석춘 조원진	새누리당(3)
	서형수 송옥주 신창현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4)
	◎김삼화	국민의당(1)

◎표시는 소위원장임

○출석 위원(16인)

강 병 원	김 삼 화	문 진 국	서 형 수
송 옥 주	신 보 라	신 창 현	이 상 돈
이 용 득	이 정 미	임 이 자	장 석 춘
조 원 진	하 태 경	한 정 애	홍 영 표

○출석 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	손 충 덕
전 문 위 원	김 양 건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환경부

장	관	윤	성	규
차	관	이	정	섭
물환경정책국장		김	영	훈
자연보전국장		이	민	호
자원순환국장		신	진	수
기후대기정책관		나	정	균
상하수도정책관		오	종	극
환경정책관		박	광	석
환경보건정책관		이	호	중
국제협력관		주	대	영
대변인		박	천	규
감사관		이	경	용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		남	광	희
국립환경과학원장		박	진	원
국립생물자원관장		백	운	석
화학물질안전원장		김		균
한강유역환경청장		홍	정	기

낙동강유역환경청장	송	형	근	청	장	고	윤	화
금강유역환경청장	정	복	영	차	장	남	재	철
영산강유역환경청장	이	희	철	기획조정관		이	우	진
수도권대기환경청장	김	상	훈	예보국장		신	도	식
원주지방환경청장	황	계	영	관측기반국장		이	미	선
대구지방환경청장	유	제	철	기상서비스진흥국장		유	희	동
새만금지방환경청장	조	병	옥	국립기상과학원장		유	조	천
한국환경공단				수도권기상청장		양	진	관
이사장	이	시	진	부산지방기상청장		임	병	숙
감사	강	형	신	광주지방기상청장		권	혁	신
경영지원본부장	강	만	옥	강원지방기상청장		육	명	렬
기후대기본부장	신	동	석	대전지방기상청장		임	용	한
물환경본부장	강	중	철	제주지방기상청장		김	세	원
자원순환본부장	박	응	열	국가기상위성센터장		김	남	옥
환경시설지원본부장	권	영	석	기상레이더센터장		전	준	모
국립공원관리공단				항공기상청장		박	정	규
이사장	박	보	환	한국기상산업진흥원				
감사	이	진	화	원장		김	종	석
경영기획이사	최	운	규	산업진흥본부장		강	길	모
자원보전이사	김	상	배	기상지원본부장		황	명	균
탐방관리이사	정	정	국	APEC기후센터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소장		정	홍	상
원장	김	용	주	연구본부장		김	형	진
환경기술본부장	김	정	주	행정실장		윤	여	훈
환경사업본부장	김	용	진	한국형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국립생태원				단장		홍	성	유
원장	최	재	천	개발본부장		권	영	철
경영관리본부장	윤	명	현	예보본부장		설	경	희
생태연구본부장	김	정	규	연구지원실장		우	종	선
생태조사평가본부장	김	중	민					
생물관리연구본부장	정	진	철					
전시교육융합본부장	이	원	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	이	재	현					
감사	한	진	호					
기획이사	이	용	재					
운영이사	김	성	수					
사업이사	김	낙	빈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관장	안	영	희					
기획전시본부장	최	기	형					
담수생물연구본부장	이	옥	재					
한국상하수도협회	최	용	철					
상근부회장								
기상청								

【보고사항】

○의안 회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

(2016. 6. 17. 신상진·김상훈·김학용·박찬우·

이우현·이종배·정우택·주광덕·주호영·

함진규 의원 발의)

6월 20일 회부됨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원혜영 의원 대표

발의)

(2016. 6. 20. 원혜영·고용진·변재일·서영교·

윤후덕·윤관석·윤호중·이찬열·정성호·

조승래·황희 의원 발의)

6월 21일 회부됨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 6. 21. 정부 제출)

6월 22일 회부됨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주승용 의원 대표발의)

(2016. 6. 22. 주승용·최도자·김동철·박주선·
박광온·이춘석·장정숙·강창일·김관영·
이용주·박준영 의원 발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

(2016. 6. 22. 김동철·전혜숙·원혜영·김중로·
김경진·이용호·이찬열·이동섭·김광수·
김삼화·황주홍·김관영·손금주 의원 발의)

이상 2건 6월 23일 회부됨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용현 의원 대
표발의)

(2016. 6. 23. 신용현·오세정·최도자·정인화·
김종희·김삼화·최경환(국)·윤영일·권은희·
박준영·김중로·장정숙·이동섭·송기석·
이태규·김성식·안철수 의원 발의)

6월 24일 회부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
발의)

(2016. 6. 17. 이인영·김경진·한정애·문미옥·
우원식·황희·인재근·임종성·박남춘·
윤후덕·김민기·설훈·김정우·송영길·
진선미·민홍철·심재권 의원 발의)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
발의)

(2016. 6. 17. 이인영·김경진·한정애·문미옥·
우원식·황희·인재근·임종성·박남춘·
윤후덕·김민기·송영길·진선미·심재권 의원
발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
발의)

(2016. 6. 17. 이인영·문미옥·우원식·인재근·
임종성·박남춘·윤후덕·김민기·설훈·
김정우·송영길·진선미·민홍철·심재권 의원
발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희 의원 대표
발의)

(2016. 6. 17. 이철희·금태섭·이훈·위성곤·
기동민·오영훈·강병원·김종대·송기현·
박정·채이배·김경수·권미혁·김경진·
조승래·박용진·강훈식·황희·임종성 의원
발의)

이상 4건 6월 20일 회부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2016. 6. 20. 한정애·김철민·우원식·이인영·
이재정·이찬열·서영교·윤영일·이학영·
김경협·금태섭 의원 발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협 의원 대표발의)

(2016. 6. 20. 김경협·윤후덕·양승조·김병욱·
이찬열·우원식·최도자·송영길·정춘숙·
김병기·신동근·최경환(국)·윤관석·오제세·
강병원·정성호·추혜선·이재정·민홍철·
윤종오·김현미·추미애·안규백·유동수·
김현권·박남춘·정동영·김정우·신창현·
김삼화 의원 발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2016. 6. 20. 한정애·김철민·우원식·이인영·
이재정·이찬열·서영교·윤영일·이학영·
김경협·금태섭 의원 발의)

이상 3건 6월 21일 회부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신경민 의원 대표
발의)

(2016. 6. 22. 신경민·김현미·김해영·문미옥·
박정·우원식·윤관석·이개호·이종걸·이
찬열·이철희·표창원 의원 발의)

6월 23일 회부됨

**환경미화원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법률안**(이정미 의원 대표발의)

(2016. 6. 23. 이정미·김종대·윤소하·심상정·
추혜선·노회찬·김부겸·황희·신경민·이인영
의원 발의)

6월 24일 회부됨

○**관련의안 회부**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
발의)

(2016. 6. 17. 이인영·김경진·한정애·문미옥·
우원식·황희·인재근·임종성·박남춘·
윤후덕·김민기·설훈·김정우·송영길·
진선미·민홍철·심재권 의원 발의)

6월 20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
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산악관광진흥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2016. 6. 20. 정부 제출)

6월 21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
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대학 구조개혁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선동 의원 대표발의)

(2016. 6. 21. 김선동 · 이종명 · 김용태 · 한선교 · 김규환 · 강석진 · 김순례 · 조훈현 · 전희경 · 홍철호 · 신보라 · 이정현 · 이은재 의원 발의)

6월 22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
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유엔 인권이사회의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 보고서 권고
사항 이행 촉구 결의안**

(2016. 6. 21. 노회찬 · 강병원 · 권칠승 · 김경진 · 김종대 · 김종훈 · 김영주 · 김영호 · 서영교 · 신경민 · 신창현 · 심상정 · 우원식 · 윤관석 · 윤소하 · 윤종오 · 윤후덕 · 이정미 · 이종걸 · 이찬열 · 정성호 · 진선미 · 최인호 · 추혜선 의원 발의)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 6. 22. 정부 제출)

국제관광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이우현 의원 대표발의)

(2016. 6. 22. 이우현 · 신상진 · 함진규 · 윤재옥 · 김명연 · 박덕흠 · 이장우 · 홍철호 · 김성원 · 한선교 의원 발의)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정유섭 의원 대표발의)

(2016. 6. 22. 정유섭 · 안상수 · 이학재 · 지상욱 · 김성원 · 송석준 · 이종구 · 정병국 · 신상진 · 홍일표 · 전희경 의원 발의)

이상 4건 6월 23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